

시장을 통해 본 한국경제

길을 두고, 왜 길 아닌 데로 가나

정부를 떠난 지 10여년, 민간에서 주로 연구 활동을 하다 보니 각종 언론의 기고 요청에 따라 비교적 많은 글을 쓰게 되었다. 주로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문제의식을 정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글들이었다. 특히 2002년 7월부터 월 1회 『한국경제신문』 ‘다산칼럼’에의 정기 기고는 한국경제의 모든 문제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기고는 2007년 7월부터 2009년 말까지의 기간을 빼고는 금년 6월까지 총 60회에 걸쳐 계속되었다.

‘다산칼럼’에 기고를 시작하던 2002년에 이은 2003년은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집권 초기였고 당시 한국경제를 걱정하는 많은 이들이 시장경제에 대해 그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이 과연 무엇인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을 때였다. 그래서 저자의 기고문들에는 자연스럽게 저자의 평소 소신에 더하여 모든 현안 경제문제의 이해와 해결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적용할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내용이 담기게 되었다.

‘시장으로의 귀환’, 이 말은 30여년의 경제 분야 공직생활을 통해 이루어진 저자의 경제관을 집약한 표어이다. 이 문구는 저자의 마지막 공직이었던 대통령경제수석 재임 시에 저자의 사무실에 액자로 걸려 있었고, 지금도 저자가 운영하는 ‘시장경제연구원’의 회의실에

서문

걸려 있다. 또한 정부를 떠난 지 2년 후에 필자의 각종 기고문과 연설문을 모아 편집·출판한 단행본의 제목이기도 하다.

“시장경제라는 ‘길’ 외에 한국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는 저자의 경제관은 민간 부문에서의 10여 년간의 연구 활동을 통해 더욱 확고해졌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이 ‘길’에서 찾았다.

이 책자는 저자의 기고문 중에서 ‘다산칼럼’에 기고한 글 전부와 다른 언론에 기고한 글 중 일부를 모아 편집한 것이다. 오랜 시간이 지난 글이 많지만 대부분의 주제는 지금 다시 쓴다고 해도 비슷한 내용으로 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는 거의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한국경제가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구조적으로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 책자를 출간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

책자에 실린 글들은 시장경제라는 관점에서 분류하여 관련성이 있는 내용들을 한 데 묶은 것이다. 언론 기고문의 성격 상 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내용이나 메시지가 여러 부문에 걸치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당시의 집필 의도를 떠올리며

연관성이 큰 분야에 포함시켰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이 경제의 구조적 측면이 부각되는 과제를 시장경제 시스템이라는 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하거나 경제 운용방식의 시장경제적 적합성을 검증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다. 이는 저자의 경력이나 관심이 자연스레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칼럼보다 긴 형식으로 여러 다양한 내용이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기고문들은 마지막 ‘기타 기고문’ 부분에 따로 모았다.

현실 경제에 있어서 시장경제가 갖는 의미를 알고 싶어 하는 이들과 시장경제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이들의 일독을 기대한다. 특히 수많은 경제현안들을 앞에 놓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경제정책 현장에 있는 후배들과 각급 연구소에서 정책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에게 이 책자가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하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이 책이 나오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경제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글로 발표할 수 있도록 지면을 할애해 주신 여러 언론기관에 감사한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다



서문

산칼럼’에 기고할 기회를 주신 『한국경제신문』의 신상민 사장 그리고 ‘다산칼럼’의 역대 편집책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이 책자의 편집 과정에서 책자가 더욱 충실해지도록 도와준 전 중소기업연구원 오상훈 전문위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인철 전문위원의 노고를 잊을 수 없다.

오랫동안 저자의 일을 도와 왔고 원고의 정리와 편집을 위해 처음부터 수고한 저자의 비서 이수정 씨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또한 이 책의 출판을 맡아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KM 박찬수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0년 8월 시장경제연구원 연구실에서
김 인 호

I. 시스템으로서의 시장경제

- 01 시장경제와 정부조직 · 13
- 02 우리 식인가, 세계 식인가? · 16
- 03 '김일성 궁전'의 시장교육 · 19
- 04 경제추락도 일본 닳을 것인가 · 22
- 05 한국경제의 시장성 검증 · 25
- 06 길을 두고 왜 길 아닌 데로 가나 · 28
- 07 '달란트의 비유'가 주는 교훈 · 31
- 08 경쟁력은 '경쟁적 구조'서 나온다 · 34
- 09 정치와 경제의 컨버전스 · 37
- 10 베트남, 호찌민의 역설 · 40

II. 경제 운용방식

- 11 고(高)성장주의 이제 그만 · 45
- 12 오늘의 간관(諫官)은 누구인가 · 48
- 13 경기에측 무용론 · 51
- 14 17대 국회에 바란다 · 54
- 15 경제, 하지 말 것을 먼저 고려해야 · 57
- 16 시장을 거스르지 말라 · 60
- 17 경제부총리론 · 63
- 18 기대 수준부터 낮춰라 · 66
- 19 '기업가 정신' 무장시키려면 · 69
- 20 '시장으로 돌아가라'는 OECD의 권고 · 72
- 21 '경제 제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 75
- 22 경기 낙관론의 함정 · 78

- 23 경제 잠재력은 예측 아닌 선택의 대상 · 81
- 24 문제는 정치야, 바보야! · 84
- 25 성장률 공약의 허실 · 87
- 26 역사로부터 배우는 경제 운영 · 90

III. 외환 · 경제 위기

- 27 IMF 외환위기의 교훈 · 95
- 28 위기의 본질을 모르는 위기 · 98
- 29 경제위기의 본질 · 101
- 30 외환위기 8년을 맞는 소회(所懷) · 104
- 31 인식(認識)의 위기 · 107

IV. 경쟁, 재벌, 소비자, 국제화 정책

- 32 재벌 문제와 정부실패 · 113
- 33 정부의 몫, 기업의 몫 · 116
- 34 경쟁시장 최대의 적(敵)은? · 119
- 35 소비자 위한 국제화를 · 122
- 36 선진국 되길 포기할 것인가? · 125
- 37 국제화 전략에 필요한 것들 · 128
- 38 ‘한·미 FTA’, 일본서 배운다 · 131
- 39 정부가 경쟁시장에 걸림돌이 된다면? · 134

V. 대북 경제협력 정책

- 40 북한 ‘시스템 실패’의 비극 · 139
- 41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개성공단 · 142

VI. 산업정책

- 42 중소기업을 세계시장으로 · 147
- 43 서비스업, 한국경제 ‘희망출구’로 · 150
- 44 글로벌 중소기업을 꿈꾸며 · 153
- 45 벤처 잇단 좌초… 신화에서 깨어나자 · 156
- 46 산업·경쟁 정책의 컨버전스 · 159
- 47 중소기업, 과연 위기인가? · 162
- 48 이제는 ‘기업가 정신’이다 · 165

VII. 금융정책

- 49 환율변동 일희일비 말자 · 171
- 50 공자금 조사에 앞서 할 일 · 175
- 51 환율정책에 대한 반성 · 178
- 52 외환보유고는 다다익선? · 182
- 53 예견된 환율 쇼크 · 185
- 54 금융문제 해법, 규제냐 시장이냐 · 188
- 55 ‘한은 독립’의 허구성 · 191

VIII. 고용, 노사, 복지정책

- 56 ‘주5일근무제’와 시장논리 · 197
- 57 고령사회와 인사정책 · 200
- 58 새 경제팀에 거는 기대 · 203
- 59 시장원리와 조화되는 노사정책 · 206
- 60 여성고용 문제, 시장에서 풀자 · 209
- 61 국민건강, 정부가 책임질 수 있나 · 212

- 62 연목구어(緣木求魚) · 215
- 63 ‘정책’으로 풀어야 할 고용 문제 · 218

IX. 인력, 교육 정책

- 64 인적자원 문제의 해법 · 223
- 65 교육에 시장원리를 · 226
- 66 교육 수요자가 선택해야 한다 · 229
- 67 사람 낭비하는 사회 · 232

X. 부동산 정책

- 68 진퇴양난의 부동산 정책 · 237
- 69 ‘8. 31 부동산 대책’을 넘어서 · 240
- 70 무위이 무불위(無爲而 無不爲) · 243
- 71 오페라 원가는 공개 안 하나? · 246

XI. 기타 기고문

- 72 시장경제를 향한 한국경제의 선택 · 251
- 73 시장경제 하려면 정부가 달라져야 한다 · 261
- 74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 · 269
- 75 부동산투기와 ‘정부의 실패’ · 292
- 76 한국경제 성장동력을 중소기업의 경쟁력에서 찾자 · 300
- 77 중소기업의 활로를 찾자 · 310
- 78 우리 경제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 319

I . 시스템으로서의 시장경제

- 시장경제와 정부조직
- 우리 식인가, 세계 식인가?
- '김일성 궁전'의 시장교육
- 경제추락도 일본 닳을 것인가
- 한국경제의 시장성 검증
- 길을 두고 왜 길 아닌 데로 가나
- '달란트의 비유'가 주는 교훈
- 경쟁력은 '경쟁적 구조'서 나온다
- 정치와 경제의 컨버전스
- 베트남, 호찌민의 역설

김대중 정부 말기에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을 때, 향후 바람직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제시한 글이다.

최근 어느 신문을 보니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 정부 각 부처들이 조직 존립의 당위성과 권한 확대를 위해 많은 예산을 쓰면서 연구용역을 하는 등 ‘살아남기 보고서’가 남발되고 있다고 한다. 정권말기에 항상 있어 온 현상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다.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정부조직 개편이 있었으나 분명한 기본원리에 입각해 이뤄진 적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조직개편이 시대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정부의 ‘새로운 역할’과 ‘버려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으려는 방향에서 이뤄진 적은 더욱 없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그간 크게 달라진 ‘경제운영의 기본 틀’과 일치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정부조직 개편 논의는 더더욱 없었다.

과거에 정부가 거시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자원배분에 깊이 간여해 서라도 이를 달성하려고 했던 산업정책 위주의 경제운영 방식 하에서 오랫동안 우리 정부는 ‘공급자 중심의 기본 원리’에 입각해 ‘산업별’로 조직돼 경제운영을 뒷받침해 왔다. 대부분의 경제부처는 일정

한 산업이나 업종을 주 관심대상으로 하고 그 분야 발전에 책임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하부 조직으로 구성돼 그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정부의 조직원리는 경제운영의 기본 틀이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글로벌 스탠더드의 수용’이라는 방향으로 크게 바뀐 지금까지도 전연 바뀌지 않고 있어 구호와는 달리 정부의 기능을 비시장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우선 각 산업분야에서 정부주도의 카르텔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고 관·민 통합형 공동행위가 다반사로 이루어져 정부 스스로가 경쟁시장 형성의 최대 적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공공부문이 생산성과 무관하게 점점 확대되고 있다. 또 각급 정부조직과 이에 종사하는 관료들은 국민경제 전체보다는 담당 분야 또는 산업의 이익을 우선 생각하게 돼 국제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공급자 중심의 정부 조직구조에서 산업정책은 시장기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행해지기보다는 ‘지원과 규제’라는 직접적인 수단에 의존하게 마련이어서 진정한 의미의 규제개혁을 기대하기 힘들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부구조 하에서는 경쟁자의 행태와 수요자의 선택이라는 시장의 시그널에 따라 산업의 재편, 생성과 소멸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자동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시장경제의 이점이 제대로 살아날 수가 없다.

적절하지 않은 조직 원리에 따라 편성된 정부조직에서 관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축구에서 후반전이 돼 골대가 바뀌었는데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선수들이 전반전과 같은 방향으로 볼을 차 결과

적으로 자책골을 만드는 것과 비견될 만하다. 정부의 어느 부처나 그 하부조직이 특정산업을 전유물로 생각하고 그 산업의 발전에 대해 책임진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시장경제도 국제화도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예컨대, 재정경제부나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회사들을 그 전유물로 생각하면서 금융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겠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특히 국제화된 시장을 바탕으로 기업활동이 이뤄지고 정부가 수급의 문제에 대해 해야 될 역할이나 수단이 거의 없는 전통적인 산업정책 분야를 담당하는 산업자원부 등은 그 기능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농림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도 농산물,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의 생산을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수요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국내외 시장을 통해 이러한 수요가 공급되도록 하는 쪽으로 기능의 중점을 바꿔야 한다.

이러한 문제인식이 관료사회에 없는 것은 관료의 속성상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지만, 정권을 담당한 통치세력 역시 통찰력이 없었다는 것은 매우 답답한 일이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나 차기 정부 초기에 가열될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서 과거와는 달리 시대흐름을 반영하고 경제운용의 원리와 일치되는 방향에서 각급 정부조직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급자보다는 수요자 중심’, ‘산업별보다는 기능별’ 원리에 따라 각 부처의 기본임무 및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기를 기대한다.

2003년 들어 노무현 정부가 대기업 규제의 장기화를 염두에 둔 시장개혁 로드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시장경제 원리와 진정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경제를 운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북한에서 유일하게 풍성한 것은 사방 어디에서나 눈에 띄는 대형 구호들이다. 김정일 부자에 대한 찬양이나, ‘미제(美帝)의 각을 뜨자’ 등 섬뜩한 구호가 대부분이다. 그 많은 구호들 중 나의 눈길을 끈 것은 ‘우리 식대로 살자’는 것이다. 아마도 ‘못살더라도 우리 식대로 살자’가 줄여진 구호일 것이다.

이 구호는 북한주민 전체의 진정한 의사와는 무관한, 김정일과 그와 이해를 같이 하는 소수 집권자들의 결의의 표현일 것이다. 그들은 ‘자기 식’을 고수하는 경우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경제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가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상황이 걸려 있는 체제유지가 우선이니 대안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잘사는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결의가 어떤 나라보다 강한 남쪽은 어떤가? 혹시 우리도 ‘우리 식’대로 국가와 경제를 운영하면서, 현안문제를 풀어 갈 수 있고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기야 세계경제의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할 시장경제를 기회 있을 때마다 외치고, ‘세계 속의 한국’ 운운하는 우리 정부를 언뜻 보면 ‘우리 식’이 아닌 ‘세계 식’을 기본으로 국가와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최근에는 대통령이 ‘재벌 개혁’이란 용어가 갖는 국제경제사회의 이질감을 염두에 둔 듯, ‘시장 개혁’이란 생소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그러하다. 그러나 이에 앞서 ‘세계 식’이 되려면 시장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며, 과연 시장이 ‘개혁의 대상’인지 ‘귀환(歸還)의 대상’인지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잘못 선택된 쟁점을 중심으로 온 나라가 지극히 비생산적인 논쟁을 거듭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표적인 것이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다. 국가 사회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치를 분명히 하고, 이를 어떻게 유지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의 차이를 기준으로 보수와 진보가 갈려야 마땅하다. 우리나라가 소위 헌법적 결단을 거쳐 합의에 이른 국가사회가 고수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는 말 할 것도 없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이 원리들을 어떤 속도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구현하고 발전시킬 것이냐가 가름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이 기본적인 가치와 이념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지구 상에서 이 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원칙과 이념에 입각해 국가운영을 하면서 수십 년 간 한 번도 달라져 본 적이 없는, 가장 수구(守舊)적인 북한정권과 이해(利害)와 이념을 같이 하면서 스스로를 진보주의자로 자처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니, 보수와

진보의 구분은 이미 논의의 기반을 상실했다고 할 것이다.

성장 우선론이나, 분배 우선론이나라는 경제운용 방향에 대한 이분법적 논쟁도 그러하다. 경제를 아는 그 누구도 스스로를 위의 어느 한 범주에 속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 하기야 얼마 전 김대중 정부와 현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에 지대한 정신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는 원로 경제학자가 인터뷰에서 “분배로 돌아갈 때가 됐다. 분배를 10년 하다가 후유증이 생기면 다시 성장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이야기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기자가 잘못 옮긴 것이 아니고 그 분의 진의라면 놀랄 일이다.

경제정책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좋을 성장과 분배, 그리고 양자의 조화 문제에 대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쟁점은 이 과제를 주로 시장적 접근에 의지하면서 풀어 갈 것인가, 아니면 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수단을 동원해 해결할 것인가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논쟁의 초점은 ‘우리 식’이나 ‘세계 식’이나의 구분이라고 본다. 그래야 실질적 토론과 대안의 선택이 가능해진다.

경제 분야에 국한해서 본다면 시장경제의 원리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것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 이후 우리 경제에 성공을 가져왔지만, 변화된 세계 경제여건 하에서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우리 식’ 경제운용방식을 버리고 ‘세계 식’대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과연 이런 문제의식과 실천 의지를 가지고 시장경제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한경 다산칼럼 2003년 7월 11일

2003년 6월 13일~16일 마다가스카르 정부와 세계은행 공동 주관으로 열린 최고위정책세미나에 참석하고 나서 느낀 소회를 피력한 글이다.

아프리카 대륙의 남동쪽 섬나라 마다가스카르 정부가 세계은행과 공동 주관으로 지난 6월 13일부터 나흘간 개최한 최고위정책세미나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총리 이하 전 각료 등 고위 공무원, 그리고 하루는 상하 양원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세미나에서 연사로 초빙된 세계 각국 경제개발 전문가와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들은 이 나라의 주요 경제개발 정책과제에 대해 다양한 강연을 하고 그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섬(58만km²)인 마다가스카르는 70여년에 걸친 프랑스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1960년 독립국가가 됐다. 그러나 독재로 정치적 불안이 계속됐고 그들이 선택한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에 대한 실험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그 결과 광대한 토지와 부존자원의 이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1인당 국민소득 250달러의 세계 최빈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 동안 두 대통령, 두 정부, 두 중앙은행이 병존하는 정치 혼란기를

거쳐 92년 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이 나라는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고 ‘빈곤의 극복’을 1차 목표로 집중적인 경제개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세미나는 이러한 노력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였다.

이 나라의 대통령과 총리를 비롯한 세미나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빠른 기간 안에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간절히 원하는 그들에게 불과 한 세대 남짓한 동안 100달러 미만의 최빈국에서 만 달러 수준의 공업국으로 변모한 한국은 진정 벤치마크하고 싶은 대상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경제의 ‘성공신화’를 시작으로 성공의 뒤편길에 축적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이로부터 극복해야 할 도전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들은 깊은 공감을 표시했고 한편으로 많은 질문도 던져왔다. 많은 이야기가 오갔지만 필자가 그들에게 주려고 한 기본 메시지는 비교적 간단했다. 그것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경제 시스템에 대한 분명한 선택과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밀고 가는 국가지도력, 즉 리더십의 중요성’이었다.

우리나라의 50년대 후반을 연상케 하는 이 나라의 경제현실, 그리고 40여년의 지각 끝에 60년대에 우리가 추진했던 개발 노력을 정열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이 나라의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후 전연 달라진 경제의 모습을 이 나라에서 볼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기는 어려웠다. 광대한 영토, 엄청난 자원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서 경제다운 경제를 이룩해 가는 과

정에서 해결돼야 할 과제들은 결코 만만치 않았고,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추진해 나갈 국가지도력에 대한 믿음을 당장은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 국민경제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기회였다.

세미나가 개최된 장소는 1979년 북한의 김일성이 선물로 지어 주어진 대통령까지 대통령궁으로 사용되던 곳이었다. 북한은 다량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우라늄에 대한 관심과 대 아프리카 외교의 일환으로 이 나라에 많은 공을 들였다. 이 나라 역시 전 대통령의 경우 세 번이나 북한을 방문하는 등 북한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북한이 마다가스카르의 사회주의 정권을 위해 지어준 대통령궁에서 남한의 자유시장경제주의자들이 대통령을 비롯한 이 나라 최고 지도자들에게 시장경제와 국제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토론하는 광경을 죽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본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

세계 각국이 다투어 이미 폐기처분했거나 처분 중인 사회주의의 망령이 뒤늦게 우리나라에서는 되살아나서 ‘진보’라는 이름으로 정치, 경제, 통일, 노사, 복지, 교육의 각 분야를 휘젓고 우리의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단계에까지 왔으니 개탄할 일이다.

해결해야 할 경제과제의 수준은 전연 다르지만 필자가 마다가스카르 지도자들에게 강조한 기본 메시지는 어찌면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물음인지도 모른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 경제시스템에 대한 분명한 선택을 하고 있으며 국가지도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이를 일관성 있게 밀고 가고 있는가?”

한경 다산칼럼 2004년 7월 19일

2004년 들어 우리 경제가 내수부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수출주도의 불균형 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거 일본이 겪었던 장기 복합불황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최근 다른 나라들의 경제모습과 대비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중국은 물론이고 비교적 저조했던 미국경제도 초저금리 기조를 바꿀 만큼 상향 국면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장기 침체의 대명사와 같았던 일본경제가 길고 긴 터널을 벗어나는 모습이다. 그러다 보니 새삼 일본 경제와 우리 경제를 비교하면서 일본 경제가 빠져나온 ‘장기·복합 불황’의 터널에 우리는 이제 들어서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한편으로 일본을 부러워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본을 괴롭혀 온 이 장기불황의 진정한 원인과 배경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것 같지는 않다.

일본 역시 그랬다. 그 이전에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심각한 불황이 수년째 계속될 때에도 일본 정부의 경제정책 담당자들은 물론 대부분의 민간 경제전문가들조차 이 현상을 유효수요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통상적 경기순환 현상 이상의 구조적 문제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들이 하나 같이 믿었던 경기순환 과정의 바닥은 그 끝을

모르고 내려앉았다.

결국 일본은 소위 ‘잃어버린 10년’ 속에서 90년대 전부를 보내고 지금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경기가 바닥을 칠 때마다 각종 이름으로 9차에 걸쳐 무려 1백23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썼지만 효과가 없었다. 일본 사회나 정부가 이런 현상을 경기순환 과정을 넘는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노출, 그리고 이의 수습과정에서 초래되는 결과적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기 시작한 건 90년대 후반에 가서 이런 추세가 되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고 난 뒤의 일이다.

일본의 장기불황은 금융·부동산·고용 등에 낀 거대한 거품이 붕괴되는 형태로 시작됐지만 그 배후에 있었던 보다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일본경제의 문제는 바로 일본의 성공을 가져다 준 일본 특유의 경제·사회 구조 그 자체였다고 본다. 흔히 ‘55년 체제’라고 불리는 것이 그것이다.

정(政)·재(財)·관(官)의 공고한 철의 3각 구조, 흔히 ‘일본주식회사’로 불리는 정부 지도 하의 선단식 기업경영 체제, 기업 내 종신고용제 등 독특한 노사관계 등이 핵심 요소를 이루는 체제다. 시장기능의 위축, 정부 역할과 시장기능이 적절히 구분되지 않는 이런 식의 일본 경제구조는 필연적으로 공급자 중심의 경제구조가 되어 정부의 고성장 정책과 기업의 과도한 팽창적 경영 행태를 유발했고 각 분야에 거대한 거품이 끼게 된 것이다.

80년대 중반까지 일본경제의 성공을 가져왔던 이 시스템이 그 이

후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더 이상 유효한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어려웠으나 이에 대한 국가사회적 인식이 충분하지 못했다. 여기에 일본 사회구조의 경직성과 국가 지도력의 부재가 가세해 일본은 문제해결 능력을 보이지 못해 왔다. 심지어 ‘잃어버릴 10년’에 대한 우려조차 한편에서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최근 일본 경제의 회복이 이런 문제의 본질이나 시스템의 문제들을 극복한 결과라고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기에 일본경제의 장기 향방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주목의 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 속에서 이 흐름과 조화되면서 우리의 경쟁력을 보장해 주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확신과 선택,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결여돼 있는 것이 우리 경제의 위기구조의 본질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의 문제 역시 일본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같다고 본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하기보다는 주로 경기순환적 측면에서 위기 여부를 판단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도 일본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다른 것이 있다면 기술에 뒷받침된 거대한 제조업부문의 생산력 등 10여년을 버틴 일본경제의 체력에 크게 못 미치는 우리 경제의 체력이다. 여기에 더해 우리에게만 일본에는 없는,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치와 안보 면에서 큰 불확실성 요소까지 있다.

일본경제로부터 진정 유효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를 국가경영에 깊이 참고하는 지혜가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체에 매우 필요한 때이다.

노무현 정부 초반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주5일 근무제’가 경제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4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경제가 과연 시장경제인지, 최소한 시장경제로 가고 있는지?”라는 질문을 던져보았다.

정부정책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놓고 벌어지는 정부와 경제계 및 일부 경제학자들 간의 논란을 지켜보면서 필자는 그간 끊임없이 제기해 온 우리 경제가 과연 시장경제인지, 최소한 시장경제로 가고 있는지 라는 질문을 또 다시 하게 된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들을 언뜻 생각해 본다.

즉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부의 인위적인 의지를 최대한 배제한 채 경제주체들의 자율을 기반으로 물 흐르듯 유연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경쟁 원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보상과 징벌(incentive & penalty)’의 원칙과 ‘수요자 선택 원리’가 어느 정도나 지켜지고 있는지, 시장원리의 기초가 되는 ‘수요공급의 원칙’이 구체적인 경제현안 문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제대로 원용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시장에 대해 정부의 역할을 적절하게 하려는 노력이 있는지 등이다.

위의 기준들을 놓고 우리 경제·사회의 중요한 다음 몇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면 우리 경제의 시장성(市場性)에 대한 해답은 저절로 나온다고 본다.

우선 경제의 총체적 성과는 수시로 변하는 국·내외 시장여건 하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에 대한 시장의 반응의 결과인데 명색이 시장경제를 한다면서 정부가 총량 성장 목표를 정부의 정책목표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능한가?

우리 경제 특유의 기업조직 형태인 재벌 문제와 관련하여 재벌의 형성, 성장 과정이 정부의 경제운용 방식과 관계가 없는지? 재벌에 문제가 있다면 ‘기업의 실패’인가, ‘정부의 실패’인가? 아니면 양 면이 다 있는가?

일단 끝난 문제지만 주요 노사 현안인 주 5일제 근무제와 관련 개별 기업의 경쟁력이나 협상력과 관계 없이 전 기업에 업종별로 강제적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집단주의적 접근방법이 과연 시장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지?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 보험제도에 의해 전 국민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 개인이 스스로 책임지고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사람과 해결돼야 할 영역까지 왜 정부가 해결하려고 하는가?

30년간 일관되게 유지 강화돼 온 평준화 교육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초래된 비평준화의 극치인 오늘의 교육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학교의 선택과 입시과정에서 경쟁원리와 수요자선택 원리를

부활하지 않고도 얹히고 설킨 교육 현안들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할까?

여성인력에 대해 생산성과 무관하게 행해지는 한국 특유의 각종 보호제도가 이미 직장을 가진 여성에게는 큰 보호가 되겠지만 새로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여성에게는 오히려 그 기회를 뺏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는지?

‘앵무새도 경제학자가 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시장원리의 기초인 수요 공급의 법칙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경제문제의 대부분은 이해될 수 있고 또 적절한 처방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앵무새도 몇 분 안에 따라 외울 수 있는 이 간단한,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시장의 기초법칙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한국경제에게 ‘시장경제로의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한 길이다.

한경 다산칼럼 2004년 10월 22일

노무현 정부 초반 2003년 3월 12일 대통령 탄핵소추, 2004년 7월 1일 주5일근무제 시행, 10월 21일 신행정수도건설 위한 결정 등 일련의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사회주의 성향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시장경제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경제의 세계에는 ‘앵무새도 경제학자가 될 수 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경제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초가 되는 ‘수요·공급의 법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일 것이다. 시장원리의 기본인 이 법칙은 너무 당연하고 명료해서 설사 경제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이 법칙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 법칙만 제대로 이해하면 경제현상의 대부분은 설명이 가능하고 이 법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경제 문제의 대부분에 대해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현실경제 세계에 있어서는 이 법칙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나 이 법칙을 포함한 시장원리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여 우리 경제·사회의 현안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거의 보기 어렵다.

시장경제의 본질에 관해 너무 쉬우면서도 명쾌한 설명을 BC 90년째 완성된 유명한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 중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다. 흔히 시장경제에 관한 사상이나 이론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1776년) 이후 구미(歐美)에서 발전돼 온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전체 130편에 달하는 이 동양의 방대한 역사서 중 마지막 두 번째 편인 「화식열전(貨殖列傳)」에는 일찍이 저자의 다음과 같은 경제사상이 기술되고 있다.

“농민들이 먹을 것을 생산하고, 어부나 사냥꾼이 물품을 생산하고, 기술자들은 이것으로 물건을 만들며, 상인들은 이를 유통시킨다. 이러한 일들이 정령(政令)이나 교화, 징발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약속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겠는가?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능력에 맞춰 그 힘을 다해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다. 때문에 물건 값이 싼 것은 장차 비싸질 징조이며, 값이 비싼 것은 싸질 징조이다. 사람마다 자신의 일에 힘쓰고 각자의 일을 즐거워하면, 이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아 밤낮 멈추는 때가 없다.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몰려들고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물품을 만들어 낸다. 이 어찌 도(道)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며, 자연스러움의 증거가 아니겠는가.”

시장경제의 원리를 어떻게 이보다 더 간명하게, 그리고 그 본질을 꿰뚫어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 짧은 문구에는 시장경제의 본질인 물 흐르는 듯한 자유훈의 원리, 정부 역할의 한계, 시장 참가자들의 경쟁과 자기 책임의 원리, 수요자 선택의 원리 등이 충분히 그리고 너무 알기 쉽게 기술되고 있다. “때문에 물건 값이 싼 것은 장차 비싸질 징조이며, 값이 비싼 것은 싸질 징조이다”라는 대목은 수요·

공급의 원리에 대한 명쾌한 기술이다. 마지막 구절 “이 어찌 도(道)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며…”는 바로 이 원리에 의한 경제의 흐름과 운영이 도(道), 즉 ‘바른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얽히고설킨 수많은 우리 경제·사회의 현안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한 것은 바로 이 수급원리에 바탕을 둔 시장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나 아니면 시장에서, 시장원리에 의해 문제를 인식하고 풀려는 생각이 전연 없기 때문이다. 말썽 많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그렇고, 요즈음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대학 입시에 있어서 학교의 학생 선발권과 학생의 학교 선택권에 관한 논란도 그렇다. 노사 문제 최대의 쟁점인 노동의 유연성 문제도 바로 노사 현안을 얼마나 노동시장에서 시장원리에 의해, 다시 말하면 수급원리에 의해 풀어 갈 것이냐의 문제가 아닌가 한다. 이 밖에 무수히 많은 우리의 경제사회 현안들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왜 문제가 생기고 있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앵무새도 금방 따라 외울 수 있는 수요 공급의 법칙을 도외시하고, ‘시장’이라는 길에 대해 무지하거나 이를 무시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사마천이 오늘에 있어 한국의 경제·사회 현실을 보면 무어라고 할 것인가? “길(道)이 있는데 왜 길을 안 가고 길 아닌 데로 가려고 하느냐”고 하지 않을까?

한경 다산칼럼 2006년 3월 16일

2006년 들어 경제 전반에 걸친 양극화 현상이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절대적 격차 축소보다는 시장경제 원리인 유인과 징벌의 원칙이 중요함을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였다.

정부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양극화의 해소에 진전이 없으면 사회의 통합이 불가능하고 더 이상의 나라 발전이 정지될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의 해소를 한·미 FTA 타결과 더불어 최대의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인식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해소될 것 같지 않은 심각한 이견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모든 경제·사회적 현안과 마찬가지로 이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한 해결책(know how)이 모색되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know what), 문제 발생의 원인과 배경(know why)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OECD가 90년대 중반에 지적사회(知的社會)의 특성을 규명하면서 지적한 바다.

우리 사회에 이 문제에 대한 이견이 이렇게 큰 것은 문제해결의 바른 코스를 우리 사회가 걷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양극화의 본질, 발생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해석과 이해

가 해소책의 모색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토픽들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범사회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세계화의 가차 없는 진행, 기술진보의 과정 등 세계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각국 특히 한국경제에 주는 근본적인 충격은 무엇이며 양극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양극화는 경제주체들의 이런 충격에의 대응 능력, 그 결과 초래되는 경제적 성과의 격차에 따라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가? 우리의 양극화 정도는 이렇게 불가피하게 또는 정상적으로 초래되는 격차를 넘어서는 것인가? 양극화의 대표적 지표인 계층 간 소득 분배구조의 경우 우리는 국제적으로 어떤 상황인가? 다른 경제와 달리 우리 경제의 내부에는 각 부문의 양극화가 더욱 더 초래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은 없는가? 있다면 우리의 경제제도나 정부의 경제운용방식이 이 구조적 요인의 중요한 한 부분은 아닌지? 양극화의 과정과 진행이 우리경제 전체의 구조변화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이런 과정을 통해 상당부분 인식의 괴리가 좁혀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답을 못 찾지 않을까 걱정된다.

성경의 ‘달란트의 비유’는 양극화의 본질과 배경의 이해 및 그 해결책의 모색에 주는 함의(含意)가 크다고 본다. 신약성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비유는 세 하인에게 각각 금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장기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와 이 하인들과 결산을 하는 한 주인의 이야기다. 받은 것을 열심히 굴려서 받

은 만큼 남긴 각각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두 하인에 대해서는 극구 칭찬하면서 이 모두를 그들이 갖도록 한다. 반면 받은 것을 그냥 묵혀 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바친 한 달란트 받은 하인에 대해서는 크게 저주하면서 그 한 달란트마저 빼앗아 이미 열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더하여 준다.

이 비유는 예수께서 천국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직접 한 훈치 않은 비유다. 결과만을 보면 양극화의 극치로 보일 수도 있는 천국의 묘사를 통해 예수께서 전달하고자 한 분명한 메시지가 읽힌다. 개개인의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주어지는 달란트의 크기를 달리 하고 있다. 또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고 이에는 엄격한 ‘유인과 징벌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오늘의 경쟁원리의 핵심인 이 원칙을 예수께서는 천국의 한 요소로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 비유는 세계 경제의 오늘의 모습과 그 안의 한 국민경제, 특히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양극화의 문제도 이런 방향과 연관해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한경 다산칼럼 2006년 5월 19일

2006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발표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05년 29위에서 38위로 추락하였다. 이를 보며 필자는, 국가경쟁력은 궁극적으로 경쟁적 구조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지난 10일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내놓은 국가경쟁력 보고서가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전년보다 9계단이나 낮은 38위로 발표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경쟁력의 실상과 추락 원인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각각 12단계, 10단계나 순위가 오른 중국, 인도와 대비되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예상대로 정부는 금번 조사결과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과의 인정에 인색하다.

하기야 일국의 경쟁력 수준을 계량적으로 그것도 순위를 매기는 것이 가능한가, 그것이 일 년 만에 어떤 방향이든 그렇게 큰 단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는 기본적인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경쟁력 순위의 등락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희비(喜悲)가 교차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경쟁력 수준에 대한 발표가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은, 경쟁력의 대체적인 수준과 움직임의 방향 그리

고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 요소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특히 경쟁대상국과의 비교는 우리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이 발표와 관련해서 진정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부분은 등락 그 자체가 아니라 경쟁력 하락의 요인이다.

금번 IMD의 보고서가 그 요인으로 제시하는 정부와 기업의 비효율성 즉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 발전해 갈 수 있는 법과 제도, 기업 관련 정책 등 기업 환경에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특히, IMD의 조사방법이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갖는 의견을 취합해 이뤄졌다는 사실은 우리 정부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생산활동의 주체인 대부분의 기업들이 생산활동의 기반이 될 정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제도 등 경제 구조와 기업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면 이는 기업활동과 생산수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없고 결국 경쟁력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메시지는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라는 명제다.

경쟁적 구조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정부의 역할, 기능, 법과 제도이며 비경쟁적 구조 하에서는 기업이 효율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될 유인을 발견할 수 없다.

우리 경제가 그간 이룩한 대단한 성과 그리고 많은 잠재력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안과 밖에서 경쟁력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이 명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문제인식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일본의 경우를 보자.

지금 일본 내에서는 정부·중앙은행·기업·언론 등이 대부분 현재의 경제상황과 전망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다. 그러나 저명한 경제학자 노구치 유키오(野口悠綺雄) 교수 등 일본경제를 구조적 시각에서 보는 인사들은 “일본 경제가 전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잃어버린 10년’을 겪고도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의 개선이나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모색 등 구조적 변화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2차 대전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일본식 경제시스템인 ‘40년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경기 상승은 중국 특수에 기인한 경기적 현상일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엄청난 인식의 차이다.

어떤 인식이 일본경제의 장래에 현실화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구조적 관점에서 제기하는 이들의 위기의식은 매우 적절하다고 보며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발표가 한국경제도 같은 성격의 구조적 위기 즉 ‘경쟁력의 위기’, 한편으로 ‘시스템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지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문제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문제해결의 출발이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후반부인 2006년에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이라는 중장기 국가발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필자는 경제의 주요 현안과제들이 정치의 벽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 아래 정치와 경제의 컨버전스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한 나라의 경제의 흐름의 변화는 정치지도자의 역할과 역량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비교적 최근에만 해도 ‘레이저노믹스’로 90년대 미국 호황의 발판을 마련한 레이건 대통령, 2류 국가로의 추락 직전의 영국을 소위 ‘영국병’에서 건져 유럽에서 가장 빠르고 균형적인 성장을 하는 나라로 되돌려 놓은 대처 수상, 아직은 평가하기 이르지만 오랫동안 유럽의 병자였던 독일 경제의 부활을 이끌고 있는 메르켈 수상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들 역사에 남을 만한 경제적 업적을 남긴 정치지도자들에게서 대단한 경제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이와 관련된 경력을 찾을 수 없다.

이 들은 경제의 그림을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 수단을 마련하느라고 경제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 들은 경제가 되기 위한 핵심적 요소에 대해 분명한 인식이

있었고 이의 해결을 위해 그 들이 해야 할 역할 즉 정치적 리더십의 발휘에 주저함이 없었다.

이 리더십은 대부분 경제를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러나 매우 어려운 제도적 개혁 과제에 부닥쳤을 때 이를 회피하거나 미루지 않고 정면 대응하여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휘되었다.

대처나 메르켈 모두 만난(萬難)을 무릅쓰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레이건은 감세와 정부규제의 축소를 통해 기업의 활력을 불러일으켜 시들어 가던 자국 경제의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했다. 나머지는 경제전문가들의 몫이었다. 바람직한 ‘정치와 경제의 컨버전스’라고 할 만하다.

사실 경제이론은 정치의 뒷받침이 있어야 실천적 학문으로서의 설 땅을 찾게 된다. 20세기 이전에는 경제학은 이름조차가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이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경제이론이나 경제정책이 갖는 딜레마는 이의 실천성을 보장하고 현실세계와의 연결 고리인 정치가 경제와 점점 더 이완돼 가는 데 있다.

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점점 쌓여 가고 있는 것은 경제이론이 부족하거나 경제전문가가 없어서가 아니고 예외 없이 마지막 부닥치는 ‘정치의 벽’ 때문이다.

무책임하고 소신 없는 김대중 정권이 현 정부에 떠넘겨 5년이나 미뤄 왔고 또 다시 3년 유예가 논의되고 있는 노사관계 개혁과제가 대표적인 예다.

이 시대의 정치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리더십은 무수한 가정과 전제가 필요한 20~30년 후의 장밋빛 나라 모습을 그리는 일 같은 것이 아니다. 진정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 시점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현안 과제를 회피하거나 미루지 않고 해결하는 정치적 결단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사관계의 개혁, 한·미 FTA의 완결은 대표적으로 현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할 과제다.

이것만 돼도 우리 경제의 큰 흐름은 바뀔 것이다. 또 이 정부의 그간의 경제적 허물, 그리고 이에 대한 비난도 대체로 덮어질 것이다.

정치지도자들이 이런 정치적 역할은 짓혀 둔 채 경제가 잘 되기를 바라다면 이는 연목구어(緣木求魚)다.

기업들에게 투자를 촉구하고 있는 정치인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우리가 기업을 한다면 지금 같은 정치, 안보 환경 하에서 엄청난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를 하겠는가?”

“정치와 경제의 컨버전스는 불가능한가?”

이 시대 한국경제가 답을 찾아야 할 과제다.

베트남 출장에서 느낀 소회를 적은 글로서, 베트남이 사회주의적 정치체제 하 시장경제를 운용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그 둘이 양립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았다.

1990년 대 중반 시장경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이후 베트남은 연평균 8% 내외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교역, 투자 대상국으로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세계은행도 작년 말 「글로벌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합리적인 경제성장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2030년까지 ‘인구 1억과 GDP 천억 달러 개발도상국가 군(群)’에 새로이 진입할 나라의 하나로 베트남을 꼽는 등 이 나라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풍부한 자원,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 정치적 안정 등 장점이 많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은 중국 다음으로 유망한 투자대상국으로서의 베트남의 가능성에 크게 주목하고 있고 이미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다양한 경제활동을 벌이고 있어 이 나라의 장래는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베트남에 관한 내외의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 나라를 둘러볼 기회를 가졌던 필자에게는 이 나라의 장래가 밝게만 보이

지는 않았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사회주의 국가가 갖는 본질적 한계가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산당에 권력이 집중되는 데서 오는 피할 수 없는 부패, 비록 시장경제를 한다고 하나 사회주의적 정치와 정부 시스템이 가져오는 전반적 비능률은 어찌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조만간 이 나라도 사회주의적 정치체제와 시장경제적 경제운영이라는, 중국에는 조화될 수 없는 두 시스템 간 피할 수 없는 갈등에 직면할 것이다. 지금 같은 경제성장의 지속 여부는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를 극복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정치체제가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고 이 바탕 위에서 시장경제체제가 보다 심화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 나라에서는 특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다.

이것은 바로 이 나라의 불멸의 지도자 호찌민(胡志明)과 그의 사상의 극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장래는 호찌민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그는 프랑스, 미국 등 초 강대국과의 전쟁을 불굴의 애국심과 특유의 전략, 전술을 구사해 승리로 이끌면서 통일 베트남의 기틀을 세웠다. 그는 교육입국의 정신으로 전쟁 중에도 나라의 장래를 위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혜안(慧眼)을 가졌다.

사후에 발견된 그의 전 재산이 지팡이와 옷 두 어 벌, 그가 평소 애독한 정약용의 『목민심서(牧民心書)』 등 몇 권의 책이 전부였다는

사실이 말하는 것처럼 전혀 사욕(私慾)이 없었다. 자신의 시신 때문에 땅이 낭비되고 또 우상화될 것을 경계하여 사후에 묘지를 만들지 말 것과 전쟁 종료 후 정치적 보복을 일절 하지 말 것 등 훌륭한 유언을 남겼다.

그래서 그는 전 세계의 사회주의 신봉자들은 물론, 심지어 전적으로 사상을 달리하는 사람에게서조차 일정 부분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니 그의 나라에서 그가 받는 존경과 사랑 그리고 그의 영향은 사후 40년이 돼 오는 지금도 절대적이다.

그래서 최상의 사회주의 지도자를 가졌던 이 나라가 그 영향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나라 발전이 정체되는 역설을 떠올리게 된다.

그렇다면 북한에 호찌민과 너무나 대조되는 지도자가 있는 것은 언젠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될 그 시스템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모두에게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을까?

필자는 만약 호찌민이 살아 후계자들이 그의 첫 번째 유언을 지키지 않고 그의 묘역을 성역화하고 극도의 우상화를 진행하고 있는 현실과 그 자신도 몰랐을, 그가 신봉한 사회주의의 원천적 한계가 드러나는 것을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상상을 해 본다.

한 나라의 장기 발전 여부는 결국은 그 나라가 선택한 전반적인 국가시스템에 달려 있다.

Ⅱ. 경제 운용방식

- 고(高)성장주의 이제 그만
- 오늘의 간관(諫官)은 누구인가
- 경기예측 무용론
- 17대 국회에 바란다
- 경제, 하지 말 것을 먼저 고려해야
- 시장을 거스르지 말라
- 경제부총리론
- 기대 수준부터 낮춰라
- '기업가 정신' 무장시키려면
- '시장으로 돌아가라'는 OECD의 권고
- '경제 제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 경기 낙관론의 함정
- 경제 잠재력은 예측 아닌 선택의 대상
- 문제는 정치야, 바보야!
- 성장률 공약의 허실
- 역사로부터 배우는 경제 운영

김대중 정권 말기인 2002년 들어 정부가 가계대출 확대, 주택건설 경기부양 방식으로 인위적인 성장부양정책을 펴는 데 대해, 향후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걱정하면서 쓴 글이다.

올해 6%대 성장이 예상되고, 상반기 기업실적이 사상 최고의 순이익을 냈다는 지표에도 불구하고 경제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들이 쌓여 가고 있다.

더블 딥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미국경제의 회복 불투명, 이라크와의 전쟁 가능성에 따른 유가급등 우려로 IMF는 이미 내년도 세계경제 전망을 하향조정하고 있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앞날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국내외 경제전문가들과 연구기관들은 내년도의 우리 경제가 낮은 성장에다 높은 물가를 경험할 것이며, 국제수지 역시 악화돼 경우에 따라서는 적자로 반전할 가능성까지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미 소비자의 체감경기가 위축되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간의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외형에 비해 구조적 내용은 여전히 취약한 편으로, 이제까지의 실적보다 앞으로의 전망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얼마 남지 않은

정치행사가 경제에 나쁜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은 자명하고, 갈수록 한심한 우리 정치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경제추락의 정도가 예상을 훨씬 넘을 가능성도 크다. 97년 외환위기 직전 정치가 경제에 미친 영향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경제의 문제점 상당 부분은 IMF 위기의 극복이란 명분으로 98년 하반기 이후부터 취해졌던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선 -6.7%라는 98년의 지나친 경제 위축은 IMF의 잘못된 정책 권고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정부의 거시 경제운영 안목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실패의 시작’이었다.

이 경제의 위축 수습 역시 IMF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과 마찬가지로, 바로 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구조개선 노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방식보다, 인위적으로 경기를 진작해 높은 성장을 마크함으로써 위기 이후 경제의 문제점을 만회하려 한 것은 더 큰 실책의 시작이었고,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었다.

이 정부가 IMF 위기 극복의 징표로 내세우는 99년, 2000년 두 해의 10%대 고성장은 98년의 지나친 위축에서 오는 반작용에다 98년 하반기 이후 계속된 고성장 정책의 결과로, 경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역행하고 가공의 경쟁력을 기초로 얻은 측면이 크다. IMF 위기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경제의 구조개선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희생하고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작년 하반기 ‘제한적 경기조절 정책’이란 구차한 이름의 경기부양책 역시 잘못된 경기에측에 기초한

것이고, 경제를 인위적으로라도 부양하려는 성장우선정책 발상에서 나온 것이었다. 하기야 작년 11월 이전까지만 해도 민·관 경제연구소 모두가 금년도 성장이 3%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고, 정부는 유형무형의 경기진작책을 쓸 명분을 찾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전망이 채 끝나기 전 경기는 상향징후를 대내외적으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간의 경기대응책은 결과적으로 ‘불난 데 기름 부은 격’이고, 오늘의 과잉유동성, 부동산거품 등 우리 경제의 기초를 계속 흔들어 댈 새로운 문제들을 배태시킨 것이다.

이처럼 어두운 경제전망에 획기적인 변화가 오지 않으면 ‘경제 위기론’이 다시 등장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내년 초 성립될 새 정부의 대국민 인기정책과 결부될 땐 또 다른 경기부양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10년 전 김영삼 정부 초기 구조정책을 써야 할 시점에 취해진 ‘신경제 100일 계획’이란 이름의 경기부양책과, 이후의 경제의 왜곡과정이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경기전망이 비관적일 때 ‘경제 위기론’이 확산되다 상황이 좀 나아지면 쑥 들어가는 것은, 경제문제의 본질을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다 경기순환적 관점에서 보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 높은 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경제정책 제일의 목표로 이해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차기 정부가 경제 문제의 본질에 도전하려면, IMF 위기를 불러온 진정한 배경인 ‘고성장 신화’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최소한 시장경제의 원리를 경제운영의 기본원리로 하겠다면 말이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신 가운데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대거 청와대와 내각에 배치하자 '코드인사'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지켜보며 조선 시대 인사제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을 정리해 보았다.

현 정부의 인사(人事)가 많은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국정원장 및 국정원 기조실장 임명은 그 절정이라는 느낌이다. 국내외 국정 현안이 예사스럽지 않은 때 대통령과 야당이 국민을 볼모로 진검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왕조는 외형상 절대왕권국가였지만, 특정집단이나 개인 심지어 왕에게까지 권력이 집중되거나 국정운영의 잘못·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었다. 권력의 분산과, 공론에 의한 언론자유와, 개방에 대한 보장이 그것이었다. 이와 관련, 흔히 언론3사(言論三司)라고 불린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과, 이 기관의 간부들을 통칭한 언관(言官)의 역할, 그 중에서도 사간원(司諫院) 및 간관(諫官)의 역할과 기능이 특히 우리의 눈길을 다시 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이들의 직무는 임금의 언행이나 정치에 잘못이 있을 때 바로잡기 위한 언론 역할과, 부당하거나 부적합한 인사에 대한 비판기능이었다. 임금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일이 그들의 주 임무였다는 이야기다.

절대왕권국가에서 왕이 듣기 싫어하거나 거북해하는 이야기만 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면서 봉록을 받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참으로 지혜롭다. 이 간관의 자리는 계급에 관계없이 학문이 뛰어나고 인품이 강직한 사람 가운데서 선발했다. 인사를 해도 지방으로 내려 보내지 않고, 승진 때는 파직기간도 근무일수에 포함시키는 등 특별 배려를 했다.

이들의 중요한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들의 말이 거슬린다고 해임하거나 좌천시키면 여지없이 ‘나쁜 임금’, 심하면 ‘폭군’으로 몰리게 마련이었다. 연산군과 광해군이 대표적인 사례다. 연산군은 사간원을 폐지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종종 때 바로 부활된 후 갑오경장 정부조직 전면개편 때까지 왕권을 스스로 제약하는 이 기관은 조선조 내내 유지됐다. 조선왕조가 그 많은 국내외의 시련에도 불구하고 500년 이상 유지된 것은 이런 바탕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과 다른 견해가 최소한 참고라도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주요 국정운영 주체 간에 견해차로 인한 극한대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국정구조 내에 없다는 사실은 진정 우려할 상황이라고 본다.

최근의 사태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최소한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첫째, 국회에 노 대통령과 정부를 뒷받침해 줄 충분한 지지 세력이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이 제약의 범위 안에서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에 없는 상황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설사 대통령의 생각이 옳다고 하더라도, 국회를 설득해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어떠한 입법이나 정책 추진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 범위 안에서만 대통령과 정부가 일을 하도록 국민들로부터 수권(受權)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일 것이다.

둘째, 노 대통령과 정부는 선조들의 국정운영 지혜를 배워야 한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듣기 싫은 이야기를 최소한으로라도 듣지 않을 수 없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만들고 운영할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노 대통령은 언제까지 소위 ‘코드’가 맞는 사람들하고만 이야기하고, 그들 간의 합의만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

이런 사고나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될 비판이나 대안 제시를 해 줄 수 있는 국회·언론·시민단체 등 현대적 의미의 언론3사 기능이나 정부 내 이런 종류의 조직이나 사람의 기능은 점차 소멸돼 갈 것이다. 이런 사태가 초래할 결과는 자명하다.

참여정부는 “오늘의 간관(諫官)은 누구인가?”란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한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정부에 포용할 아량은 없더라도, 또 이들의 이야기를 수용하지는 않더라도, 일단 경청만이라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 즉 낮은 수준의 현대판 ‘사간원’을 정부에 설치하도록 제의해 본다. 부질없는 제안인 줄 알면서도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다.

2003년 경제성장률이 2002년의 절반 수준인 3%대로 부진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도외시하고 단지 경기순환적 관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데 대해서 비판하였다.

금년 들어 특히 이 정부가 집권한 이래 한국은행, KDI를 비롯한 여러 공·사(公·私) 경제예측 기관들이 벌써 몇 번째 거시경제 전망을 하향 수정해 왔고 급기야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각 기관들이 금년의 성장을 3.0~3.1%로까지 전망하는 상황에 이르자 경기예측의 정확성 문제가 새삼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예측기관들은 마치 죄나 지은 것처럼 풀이 죽었고 이의 부정확성을 질타하는 소위 전문가들의 비판과 여론이 비등하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경기부양책 마련에 법석이다. 이 모두가 정상이 아니다.

경기예측은 우리 예측 기관들의 예측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속성상 맞을 수가 없을 뿐더러 오늘의 우리 경제 상황 하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금의 경기 침체의 근본적인 배경은 각 경제주체들의 투자와 소비심리 위축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이코노미스트들에 의해 예측 가능한 경제적 요인보다 오히려 노사 정책 등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북한 핵문제의 향방, 기업 경영에 절대

적 영향을 미칠 대북송금 과정의 조사 결과 등 비경제적 요인들이다.

또 우리 경제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움직임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미국 등 세계경제의 향방이 계속 불투명한 점도 오늘의 경기예측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요인이다. 요컨대 경기는 우리 이코노미스트의 희망·기대·예측의 범위 안에 있지 않는 변수들의 움직임에 의해 주로 좌우된다는 이야기다.

문제가 이렇다면 경제예측 기관에 정확한 경기예측을 주문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경기전망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주 이유는 경기정책의 필요성 때문이다. 인기에 초연할 수 없는 정치의 속성, ‘고(高)성장 신화’에 젖어있는 우리의 국민 의식, 기업의 거센 요구, 그리고 언론의 부추김 등 경제의 확장 성향을 부추기는 요인들이 즐비한데 국민들에게 제시한 성장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경제전망이 나오니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정부는 초기에는 경기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해 다소 신중하려는 듯했지만 결국 며칠 못 가서 역대 정부가 그랬듯이 경기부양책 마련에 나섰다. 작년 10월 7일자 이 난을 통해 필자가 경계한 그대로다. 이제는 경기에 도움이 되지만 한다면 무엇이랴도 하겠다고 공언할 정도에 이르렀고 심지어 중앙은행 총재가 나서서 경기대응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닌다. 이미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돼 조기집행을 서두르고 있다.

출발부터 잘못됐다. 명색이 시장경제를 한다는 나라에서 정부가 경제성장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돼야

한다. 성장률의 고·저 자체를 우리 경제의 본질적 문제로 보는 시각도 ‘한국경제 불치(不治)의 병’이다.

우리 경제의 문제의 본질은 따로 있다. 즉 취약한 국제경쟁력 구조, 경쟁력을 보장해 주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확신의 결여 및 이로부터 초래되는 경제운영 원리의 불투명성, 경제와 비경제 부문의 운용원리의 일관성 결여, 세계경제에 함몰할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계경제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국민의식과 경제운용 방향 등 구조적인 것이 그것이다.

오늘의 경기상황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경제외적 요인들과 세계경제 상황이 결합돼 초래한 결과일 뿐이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성격을 도외시하고 결코 정확할 수 없는 경기예측을 근거로 기회만 있으면 경기부양책을 써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누적시킨 전 정부들의 거듭된 실패를 이 정부는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이코노미스트들이 모인 경제연구기관들이 보다 중점을 두어 연구해야 할 과제는 제쳐두고 이렇게 맞을 수 없고 별 의미도 없는 경기예측에 너무 많은 정력과 시간, 그리고 아까운 인력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재고해야 한다.

경제예측은 어디까지나 ‘예측’에 머물러야 하고 여기에 지나친 정책적 의미(implication)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되려면 정부가 물 흐르듯 경기중립적인 경제운용을 하면서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경제정책의 중점을 둘 때만 가능한 일이다.

2004년 4월 15일 17대 총선 직후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필자의 바람을 정리한 것이다. 참고로 17대 총선은 여대야소, 3김시대 청산, 여서야동, 국회의원 세대교체, 민노당 입성, 디지털민주주의 등의 특징을 보였다.

총선도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제 집권 여당과 정부에는 국정을 책임 있게 끌고 갈 기본적인 여건이 조성될 것이며 야당에도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필요 시 정부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이 부여될 것이다. 한국의 진보세력이 원내 교두보를 마련함으로써 제도권 밖에서 논의되던 이념 논쟁을 원내로 들여와 건전한 토론을 거치면서 국정운영과 연결되게 된 것도 매우 의미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우리 국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이 발휘된 선거결과라고 믿는다.

17대 국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각별하다.

국론의 심각한 분열, 정치판도의 근본적 변화, 세대간 엄청난 갈등을 초래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시험과정을 거치면서 성립되는 국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큰 비용을 치르며 성립되는 17대 국회에 가장 요청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즉 의회제도를 확립하는 역사적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의미의 의회제도 부활이 17대 국회에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 민주주의의 장래는 어두울 것이다. 경제적 발전도 아마 여기서 정체할 것이다. 확인할 길 없는 국민의 의사를 독점하는 거리의 정치가 의회의 정치로, 힘과 떼쓰기의 정치가 법이 지배하는 정치로 바뀌어야 한다.

모든 국정이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마무리되고 다양한 국민의사가 최종적으로 국회의 토론과정과 의결절차를 거쳐 수렴되고 그 결과에 온 국민이 승복하는 대의민주주의가 어찌면 처음으로 이 땅에 만개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 공히 신뢰받는 여당, 사랑받는 야당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여당은 총선 결과로서 나타난 국회의 의석분포가 국민의 정치적 결단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과거와 같이 일부 의원들의 이적(移籍)을 실현해서라도 보다 안정적인 원내 세력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지를 실현하겠다는 생각일랑 애초부터 갖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여당과 정부가 안정의석에 부족을 느낀다면 이는 국민들이 부여한 힘의 한계로 인식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이상의 과욕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야당도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정부 여당의 독주를 막고 견제와 균형의 묘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존립기반이 무너질 것이다.

17대 국회 재임기간은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 경제권으로 진입하는 확실한 방향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세계사의 주변으로 전락하는 길로 들어설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기간이 될 것이다. 한때 선진국 문

턱까지 갔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일부 국가들의 경험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들은 우리 경제가 생존하고 번영하는 길을 찾는 데, 또 우리 경제의 위기구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토론하는 데 밤을 지새우는 국회의원들을 보기를 진정 원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17대 국회의원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세계경제를 보는 안목이다. 세계경제의 흐름과 그 속에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경제시스템의 구조적 특성과 각국이 보이고 있는 경제적 성과의 관련성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문제를 구조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 정부와 더불어 대안을 찾아야 한다.

17대 국회는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견제기능을 보다 충실히 해야 한다. IMF 경제위기의 극복은 건전재정의 뒷받침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그러나 우리 재정은 이의 극복과정에서 건전재정 기반을 상실한데다 이미 빌트인(built-in) 된 사회복지 지출소요 등으로 가속적으로 재정규모가 늘어가는 구조가 돼있다. 재정의 건전성 부족은 그 자체로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앞으로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또 올 경우 최후 보루가 재정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 심각한 문제다. 경기부양 목적 등 끊임없이 재정확대에의 유혹을 받는 정부를 감독하고 견제하면서 건전재정으로의 복귀를 17대 국회는 실현해 가야 한다.

의회의 재정에 대한 기능은 입법권보다 선행되는 것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한경 다산칼럼 2004년 12월 13일

노무현 정부는 2004년부터 양극화 문제를 집중 분석하고 2005년부터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하여 왔다. 당시 중소기업 연구원장이던 필자는, 양극화 원인에 대한 성찰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양극화가 일부 정책왜곡에 의해서도 기인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 하나는 여러 부문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경제적 성과의 양극화(兩極化)현상이다. 이 현상을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이유는 없다. 어쩌면 경제의 발전, 세계화, 기술진보의 과정 등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 경제에 근본적인 충격이 될 수밖에 없고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이런 충격에의 대응 능력, 그 결과 초래되는 경제적 성과의 격차는 필연적으로 양극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경제 양극화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우선 그 진행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 확산의 범위가 너무 넓다. 또한 양극화 현상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선도부문의 성과가 낙후부문으로 원활하게 파급되는 과정을 걸어야 할 텐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그 괴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수출의 증대가 내수의 증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깨어지고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제 양극화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구조 구축, 산업과 기업의 혁신과 구조조정, ‘성장촉진형 재분배정책’ 등이 그것이다. 정부가 산업정책의 주파트너를 중소기업으로 하고 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논의되는 방안들이 일견 타당성이 있고 일정한 효과가 기대되기도 하지만, 필자는 우리 경제의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배경이나 원인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구조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중소기업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 현재 우리 정부는 247개의 재정지원 사업, 17개의 비재정 지원제도, 47종의 조세지원제도를 중소기업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금년에만도 8조1천억원의 재정이 중소기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로, 인력, 자금, 기술, 대기업과의 협력 등 중소기업이 당면한 각 분야의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물론 이런 정책수단들의 효율성이 문제되겠지만 그 보다는 다른 쪽에 이런 정책적 노력을 무력화시키거나 상쇄하는 본질적이고 구조적 요소가 우리 경제에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있다면 그것은 우리 경제·사회에 존재하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불리한 거대한 자원배분 구조일 것이다.

예컨대, 외환위기 극복 이후 경기의 인위적인 부양을 위해 시장의 수급상황과 괴리된 외환 및 환율정책을 전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로부터 초래된 우리 환율의 저평가 현상은 수년간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간 자원배분 구조를 수출산업에 엄청나게 유리하도록 왜곡시키고 가계의 실질소득을 떨어뜨려 내수기반을 약화시켜 왔다.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구조가 깨뜨려진 주요한 배경이다. 이 내수산업의 대부분은 물론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형성된 불리한 자원배분 구조는 어떤 중소기업 지원 수단으로도 만회될 수 없다. 이런 지원수단은 또 다른 구조적 왜곡을 가져온다. 오늘날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중소기업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교육정책, 지역균형개발 정책, 고용정책, 여성보호정책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야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이들 경우 피해자는 그 정책이 보호하려고 했던 대상, 즉 경제적 취약계층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장의 원리를 바탕으로 물 흐르는 듯한 경제운용 이상의 합리적인 자원배분 구조를 가져오는 길은 없다. 이런 구조 하에서만 경제 각 부문의 균형이 달성되고 경제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경제 양극화 현상의 근원적 해결방향도 여기서 찾아야 한다.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기에 앞서 ‘무엇을 하지 말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정부의 반성 위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각 부문에서의 양극화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을 때, 필자는 양극화의 가장 근본적 요인은 정부정책에 의한 왜곡된 자원 배분이라고 지적하고, 사회주의 국가들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각 부문에서의 양극화(兩極化)의 심화는 우리 경제·사회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중화학 공업과 경공업 간, IT산업과 비 IT산업 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등 산업 간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 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 등 기업 간 양극화, 그 결과로 초래되는 고용 및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이 현상은 균형이나 분배 차원에서 문제제기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가 대내외 충격에 어느 경제보다 큰 영향을 받는 취약점을 보이고 있고 경기의 회복이 지연되는가 하면 물질·인적 자본의 양성이 저해되어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어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회의를 낳게 하는 주요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 양극화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구조 구

축, 산업과 기업의 혁신과 구조조정, ‘성장촉진형 재분배정책의 확대’ 등이 주로 논의되는 방향이다. 현 정부의 주요한 정책 이념의 하나가 균형발전이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자는 양극화를 초래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은 우리 경제구조 내부에 점점 고착되어 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왜곡된 자원배분 구조라고 생각하며 이 구조의 배경을 밝히고 이의 근본적인 교정이 없으면 이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가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합리적인 자원배분 구조를 깨뜨리는 대표적인 힘은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인위적인 정부의 역할과 정책이다.

외환위기 이후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채택된 정책수단들 즉 시장의 수급상황이나 국제적 흐름과 역행하는 금리와 환율 등 거시정책 변수의 운용을 비롯하여 전 정부 때 주로 추진된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 가계신용 확장을 통한 인위적인 소비 촉진정책들이 그것이다.

대표적으로 위기 이후 최근까지 일관되게 유지돼 온 우리 환율의 저평가 현상은 수년간 수출과 내수산업 간 자원배분구조를 수출산업에 엄청나게 유리하도록 왜곡시키고 가계의 실질소득을 떨어뜨려 내수기반을 약화시켜 왔다.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선순환구조가 깨뜨려진 주요한 배경이다.

평준화 교육기조는 결과적으로 비평준화의 극치를 가져오고 있다. 지역균형정책을 추구할수록 수도권비대 현상은 심화된다. 비정규직

에 대한 보호 조치가 오히려 이들의 고용 축소로 연결되고 있다. 여성취업자에 대한 생산성과 괴리된 높은 보호수준은 오히려 여성의 신규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의 흐름과 괴리된, 시장논리와 배치된 정부정책이 초래한 왜곡된 자원배분의 결과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리고 이런 왜곡된 자원배분 구조의 피해자는 역설적이게도 대부분의 경우 그 정책들이 보호하려고 했던 대상 즉 경제적 취약계층이다.

이것이 시장의 원리다. 이 원리를 거부하고 정부가 인위적인 자원 배분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추구하려고 했던 사회주의 국가들의 참담한 실패에서 유효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이 구조적 문제에 점점 더 빠져들어 갈 것이다.

한경 다산칼럼 2005년 3월 18일

2005년 3월 18일자로 이현재 경제부총리 후임으로 산업자원부 출신인 한덕수 신임 부총리가 취임하였다. 부총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서 신임 부총리에 거는 기대를 정리한 글이다.

한덕수 신임 경제부총리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의 성공 여부에 우리 경제의 승패의 상당 부분이 걸려 있다고 믿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부총리의 역할에 대해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부총리 한 사람의 역량에 한국경제가 좌우되기에는 질적으로 너무 변화됐고 양적으로도 커졌다. 민간부문의 확대와 경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 변화를 감안, 부총리 역할 축소의 불가피성도 거론된다. 현 정부 들어 두드러진 정책조정 기능의 다원화로 부총리의 입지가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에 있어서 경제부총리의 비중은 여전히 크다. 최근 한 언론의 경제전문기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경제에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은 이현재 당시 경제부총리였다. 그 개인의 경력이나 역량과도 무관하지 않겠지만 아직도 한국경제에 있어서 경제부총리의 역할과 영향력은 그만큼 크다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금번 부총리의 임명을 전

후해서 우리 사회가 임명 과정과 결과에 대해 보인 비상한 관심도 이를 뒷받침한다.

신임 부총리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시장의 신뢰 유지를 통한 경제의 활성화로 집약된다. 경제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니 그럴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제를 한다고 하면서 성장률 등 거시지표를 목표로 설정하고 금융·재정 등 자원배분 구조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시장개입적인 정책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달성하려는 식의 경제운영 방식에 혹시라도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 경제 활성화는 경제의 구조적 개선과 경제운영 방향과 시장에 대한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의 신뢰가 초래하는 결과일 뿐이라는 데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하다.

경제부총리가 과연 어떤 종류의 일에 집중해야 하며 또 그런 일을 하기에 적절한 기능과 권한이 그 직책에 주어져 있느냐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경제의 최대 과제는 말할 것도 없이 대내적으로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경제를 비롯한 각 부문에 확산하고 정착시키는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이뤄내는 일이다. ‘경쟁적 시장’, ‘수요자 중심의 사고’, ‘개찰구 없는 국제화’의 세 요소가 경제구조에 뿌리깊게 자리잡도록 하는 일이다.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경쟁력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세계경제 속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해나가기 위해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경제부총리는 전 정부의 경제행정 기능을 이 방향으로 집결시키고 구체적 정책현안들이 이 방향에 맞게 조정돼 가도록 하는 틀을 만들고 유지해 가는 일을 집중적으로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상호 표리의 관계에 있는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 그리고 대외경제 조정 기능이 부총리의 핵심적 기능으로 부각돼야 한다. 지금까지는 다른 기능에 가려 이런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부총리나 재정경제부 스스로의 인식도 충분하지 못하고 정부조직 구조 등에서 나타나는 정부 차원의 인식이나 뒷받침도 매우 취약하고 불분명하다.

경제부총리는 한국경제라는 큰 숲을 가꾸어 가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스스로 경제의 단기적인 흐름이나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한다. 금융 또는 산업 등 개별 현안에서도 일단은 한 걸음 떨어져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신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본질을 규명하고 그 해결에 역량의 대부분을 쏟아부어야 한다. 그럴 의지나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럴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뒷받침도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부총리의 성공 여부는 우리 경제 경쟁력의 근원적 향상 여부로 가늠돼야 한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금과 같은 정책 환경에서 지금과 같은 역할과 기능을 가진 경제부총리에게 묻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그러려면 경제부총리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정부의 경제행정 조직 전반, 특히 경제정책 조정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2005년 초 정부가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경기심리 부양 캠페인을 폈지만 실적지표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경기심리가 다시 꺾인 바 있다. 필자는 취약한 경쟁력 구조에 근본적 변화를 주는 데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을 제언하는 한편 높은 경제실적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경계하였다.

올들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기대지수, 기업경기조사지수(BSI) 등 각종 심리지표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실물활동이나 경기선행지수도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유가의 지속, 환율 전망 등 불안 요인에다 소비의 완전한 회복, 설비투자의 증가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아 대부분의 연구기관이나 책임 있는 관계부처도 올 경제를 낙관하기에는 이르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터키 방문 시 “물가든 외환이든 경제성장률이든 실업률이든 모든 측면에서 한국경제는 완전히 회복됐다”고 선언했다.

경제의 전망이나 운영 방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의 피력이다.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자신감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런 자신감을 가졌다고 지금까지 무수히 해 온 것처럼 단기적으로

는 경기회복,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밝은 장래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 수준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깊이 생각할 문제다.

지난해 한국 경제가 실현한 4.6% 수준의 성장은 대통령의 공언에는 못 미치지만 결코 낮은 것이 아니다. 이 정도의 성장 수준도 대외 균형의 희생, 대내적으로는 다양한 부문 간의 양극(兩極)화 심화라는 구조적 문제점 위에서 얻어진 것이라고 본다.

이런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제쳐놓더라도 지난해의 외형적 경제 성과에도 국민이 만족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정부의 거듭된 낙관적인 전망과 호언에 비해 부진한 실적, 그리고 이에서 오는 상대적인 실망감 때문일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 당시 안았던 매우 어려운 국내외 여건과 정책 환경에는 아직도 큰 변화가 없다. 북핵 문제, 유가 급등,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제회복 지연 등 대외 여건이 그렇고, 벤처 정책 등 신산업정책의 실패, 가계 부채의 누적,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의 잠복, 잠재된 사회복지 지출 요인 증대, 재정 부담 능력의 한계 등 김대중 정부로부터의 유산을 비롯한 대내 여건의 어려움도 여전하다.

위기 극복의 어려운 현실과 명분 때문에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한 곳으로 결집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가 용이했던 김대중 정권에 주어졌던 유리한 정책 환경은 더 이상 이 정부의 것이 아니다.

현 정부 경제정책의 진정한 공과(功過)는 훨씬 훗날 논할 일이다.

다만 이 시점에서 굳이 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실현된 경제성과의 부진 자체가 아니라 이런 불리한 대내외 여건, 정책 환경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인식과 경제의 구조적 개선을 통한 경쟁력의 원천적인 향상보다 단기적인 경기회복에 집착하면서 이를 정부의 경제적 성과와 결부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그래서 실현될 수 없는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끊임없이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치를 높이면서도 실적은 이에 못 미쳐 국민적 신뢰를 상실해 온 점이라고 본다. 김대중 정부가 밝은 실패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진정한 문제는 취약한 경쟁력 구조에 있다. 이 구조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는 데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민의 의식과 역량을 이 방향으로 결집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경제를 운영해야 할 것인가가 경제정책의 주관심사가 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국민의 적절한 수준의 위기의식도 필요하다.

단기적 경제성과에 대한 정부의 집착과 경제 실적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수준은 결코 양립될 수 없는 방향이다.

제대로 경제를 운영하려면 먼저 경제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을 낮춰야 한다. 이것이 정치적으로도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한경 다산칼럼 2005년 8월 18일

2003~2005년 기간 동안 설비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2.5%로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필자는 이의 해결책으로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가정신으로 재무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우리 경제는 2002년 8월 이후 계속 하락 국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쓸 때에는 잠깐 반짝하는 듯하다가 바로 또 추세적 하락 행진을 계속한다. 이런 우리 경제의 흐름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단순한 경기순환 현상으로 보는 해석도 있으나 최근 들어 일본식 장기 불황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 나아가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본격적으로 노출되는 과정으로 보고 구조적 대응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다.

이 현상에 대한 해석 여하에 관계없이 이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기업의 투자부진이 있다. 경제의 하락 국면과 설비투자의 증가율 추세가 둔화되는 것이 거의 같은 궤를 그리고 있다.

즉, 2001년부터 작년까지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0.3%로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이 약 70조원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사상 유례없는 저금리 구조 하에서도 투자를 하지 않는 이 현상은 우리 경제 최대의 이슈가 아닐 수 없다. 이런

투자 부진 현상의 원인에 대해 경제계는 정부의 규제 때문이라 하고 정부는 기업의 수익 모델의 부재가 주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논쟁이 한창이다. 양쪽 다 일면의 진리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논쟁으로는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유효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집권 초기 당시 부정축재자로 지탄받던 대기업들을 경제개발의 주역으로 변신토록 유도했다. 그는 기업들을 그 시대 상황에 필요한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시키는 데 성공했다. 기업들은 낮밤 가리지 않고 뛰었다. 이 바탕 위에서 오늘의 한국경제는 이뤄졌다. 물론 그 기업들 스스로도 대부분 소위 재벌로 성장해 그 과실을 누렸다.

박 대통령은 오늘날 의미에서 시장주의자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시장경제의 핵심적 주체인 기업의 생리, 특히 기업의 이윤 동기를 깊이 이해했고 이를 인정하고 고무하는 바탕 위에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이 시대에 요구되는 기업가 정신, 소위 ‘global entrepreneurship’은 박 대통령 시대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도전적이다. 지식기반경제와 무한경쟁의 글로벌 경제구조, 특히 IMF 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구조적, 질적 변화를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이다. 또 그 때와는 달리 오늘날 기업가 정신은 기본적으로 기업 스스로의 몫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를 비롯한 우리 국가 사회 전체가 진정 기업이 투자하기를 원한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기업들이 이런 ‘global entrepreneurship’

으로 무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기업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 나가고 발휘하는 데 있어서 기업 환경과 경제운용 방식 등 경제시스템이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이의 유지 관리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몫이다.

대외 환경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을 만들고 시장원리가 경제의 각 부문에 작동하도록 하고 경제와 비경제 부문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일 것이다. 나아가 국가 사회 전체를 혁신과 창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대한 교육과 학습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어찌면 기업들이 원하건 원치 않건 그들을 글로벌 경제 환경에 내모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 우리 기업의 추가적인 국제화 과제가 제기된다.

우리 경제의 장래나 당면 문제인 투자부진의 해결책은 우리 기업을 어떻게 하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global entrepreneurship’으로 다시 무장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찾아야 한다. 그러면 길이 보일 것이다.

한경 다산칼럼 2005년 10월 14일

2005년 10월 5일 OECD가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OECD Economic Survey: KOREA)’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국경제의 장래를 좌우할 구조적 문제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모색해 보았다.

한국도 일본이 경험하고 있는 ‘잃어버린 10년’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는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다. 일본경제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요즘에는 조심스런 낙관론이 대세인 것 같지만 작년 초 이후만 해도 경기 상황에 따라 수차례 긍정론과 부정론이 엇갈려 왔다.

최근 방한한 한 일본 경제연구소장이 일본경제가 회생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 비결이 정부가 기업에 관여하는 정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것은 매우 흥미롭다. 사실 일본경제가 과연 장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느냐 여부보다 왜 장기침체에 빠졌으며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설명은 이에 대한 본질적 조건의 하나, 즉 시장 내지 기업에 대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을 말하는 것으로서 과거에는 일본 정부나 관련 경제전문가로부터는 들어보기 힘든 것이었다.

최근 OECD가 ‘2005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가 저성

장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경제성장 실적이나 한국경제가 가진 잠재력에 대한 평가에 인색하지 않으면서도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전망에 강한 회의를 표시하고 있어 그 간 계속돼 온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향의 논란은 별 의미가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본다.

우선 일본경제의 전망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의 장·단기 전망에 대해서도 국내·외 연구소나 경제전문가 또는 정부의 경제 예측치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맞아 본 적이 없다. 이 점에서는 OECD도 예외일 수 없다. 진정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한국경제의 장래를 좌우할 구조적 문제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다.

사실 이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성장전망 자체보다는 거시정책 분야를 비롯한 5개 부문 25개 과제에 걸쳐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과 권고를 제시하는 데 보다 비중을 두고 있다. 제시된 수많은 정책권고들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들 권고의 대부분이 매우 의미있는 것들이지만 사실은 그 어느 것도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는 점이다. 외환시장 개입 자제, 시장과 괴리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 경기부양 목적의 재정 운용과 종합투자계획에 대한 경계, 균형재정 달성의 중요성, 신규기업 특히 서비스 부문의 진입장벽 완화와 퇴출 메커니즘의 개선,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을 통한 대학의 구조조정과 외국교육기관의 진입 확대,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의 유연성 제고,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단계적 폐

지와 기업 경영권 시장의 대내외 개방 등이 핵심 권고 내용들이다. 그 어느 것도 우리 사회 내부에서 일찍이 제기되고 논의되지 않은 것이 없다. 해결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둘째, 다양한 내용을 가진 이 권고들을 일관하고 있는 흐름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대부분이 시장에서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돼야 할 문제임을 지적하고 그렇게 접근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 보고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모든 권고는 결국 그 배후에 있거나 있을 수 있는 ‘정부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위기구조의 본질은 자명하다. 경기의 흐름이나 전망의 좋고 나쁨 그 자체가 아니다.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 이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해결방향의 모색이 시장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일본의 전철이 타산지석(他山之石)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경제가 저성장 위기구조에서 벗어나려면 ‘시장으로 돌아가라’는 권고를 담은 OECD의 금번 보고서는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한경 다산칼럼 2006년 1월 20일

박정희 대통령 이후의 국가지도자들이 박 대통령을 비판하면서도 박 대통령의 ‘경제 제일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오늘날 우리의 국가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경제사상은 박 대통령을 성공으로 이끈 그것과는 달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발전에 대한 집념과 강력한 통치력의 산물인 ‘경제 제일주의’의 사고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경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박대통령은 분배 문제 등 경제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포함해 안보, 통일 등 주요 국가문제는 물론 심지어 집권과정의 정당성의 결여나 정치의 비민주성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정치적·사회적 갈등까지도 경제만 잘 해나가면 대체로 풀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문자 그대로 국정 최고의 우선순위를 경제에 둔 것 같다.

그가 다양한 국정 현안이 충돌할 때 대체로 경제우선의 원칙에 의해 문제를 풀어 간 경우를 발견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당시 경제정책 수립의 핵심에 있었던 이들은 경제논리가 정치, 심지어 국방·안보 등 비경제적 현안과 침예하게 충돌할 때 그가 경제하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 준 많은 사례들을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제일주의 사고는 필연적으로 높은 성장 목표의 제시와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한 경제 각 부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간여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강력한 연계 구조 등 한국적 경제운영 방식을 낳았다.

물론 이런 식의 사고는 정부에 대한 당시 국민들의 일반적 기대에 의해 지지되고 정부의 경제에 대한 역할이 수용될 수 있는 국제환경이 있어 가능했지만, 정권의 태생적 한계의 극복이란 차원에서 그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제시한 높은 장·단기 성장목표를 대부분 초과달성하고 오늘날 한국경제의 기반을 닦음으로써 그의 경제철학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했다. 적어도 국내적으로 그의 집권이 종료하기까지,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의 전면적 변화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까지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경제 제일주의가 지금도 우리 경제의 중심사상이 될 수 있을까?

국정 목표가 매우 복합적으로 되고 국민들의 가치나 사고체계도 다양해져 경제만 잘 되면 다른 국가적 문제들이 덮여질 수 있던 시대는 지났다.

다른 국가적 문제들과 관계 없이 경제가 독립적으로 또 선행적으로 잘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오히려 이제는 국정의 다른 부문의 경제에 대한 적절한 역할 및 이들과 경제의 조화로운 운영이 있어야 경제가 풀려 갈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특히 예측 가능한 정

치와 외교·안보 역량의 발휘는 경제의 선결요건이 되고 있다.

달라진 국제경제 환경은 정부의 경제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 이후에도 경제 제일을 역설하지 않은 정부가 없다. 또 높은 성장 목표를 제시하고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달성하려는 경제운용 방식에 집착하지 않은 정부도 없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경제와 다른 국정목표가 충돌할 때 경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접근방식은 오히려 크게 후퇴하고 있다. 특히 선거와 관련될 때에는 모든 국정현안의 관리에 있어서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하는 경우를 보는 것은 흔한 일이다.

오늘날 우리의 국가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경제 사상은 박 대통령을 성공으로 이끈 그것과는 달라야 한다.

우리 경제의 앞길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국민들을 경계하고 설득하면서 우리의 경제 시스템을 시장 원리에 맞게 재정비하고 우리 경제의 세계 경제와의 통합이라는 중요한 과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그 기본이 돼야 한다.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빼 놓을 수 없다.

이런 바탕이 이루어진다면 굳이 경제 제일을 강조하지 않아도 다양한 국정목표 간 우선순위는 오히려 경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조정돼 갈 것이다.

2006년은 세계경제가 연초부터 경기조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국내경제도 경기선행지수가 하향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출주도의 성장세가 지속되던 한 해였다. KDI가 발표한 2006년 경제전망을 보며, 필자가 생각하는 정부의 경제운영방식에 대한 생각을 적은 글이다.

KDI가 최근 발표한 금년도 경제전망은 일부 논쟁의 여지를 안고 있다.

우선 작년 말 발표한 당초 전망보다 높은 5.3% 수준의 성장전망은 필자가 책임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연구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민간 연구기관들의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시장의 느낌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본다.

한편 정부당국은 금번 전망에서 동 연구원이 아마도 진정 주고자 하는 “현재의 경기 확장 국면이 올해를 넘어서 장기화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우려스런 메시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모습이다.

재정부는 “최근의 경기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된 회복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어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하락세로 돌아 설 가능성은 낮다”고 낙관적으로 판단하면서 소위 더블 딥(double dip)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2003년 8월 8일 자 본란 ‘경제예측 무용론’을 통해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경제예측의 한계에 대해 언급한 바 있지만, 경기의 단기적 예측결과의 호·불호에 일희일비하거나 정부가 연구기관들의 경제전망에 예측 이상의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평소 생각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 그리고 이에 뒷받침된 경제의 전반적 모습이 어떤 추세 선을 그리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내년 이후의 우리 경제의 예상되는 모습에 대한 균형 있는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위기 수습 이후 겨우 5년 남짓한 기간에 우리 경제는 이미 각각 두 번에 걸친 경기의 상승과 하강을 거듭했고 2003년 이후에는 더블 딥 현상으로 경기의 단기적 부침이 거듭되어 왔지만, 이런 순환적 현상에 관계없이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추세가 2000년 상반기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향선을 그려 오고 있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작년 하반기 이후 금년 상반기에 걸친 경기의 확장 국면도 이 추세 선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측의 한계를 인정하는 전제 하에 경기순환적 관점에서 보거나 주요국 정부의 통화 신용, 재정 등 정책의 중립기조로의 전환 추세 등을 종합해서 보면 내년도 세계경제는 금년을 고비로 그동안의 확장기조에서 경기조정 국면에 들어서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아마도 금년도 1/4분기에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는 국

내 경기가 그 확장 기조를 지속해 갈 구조적 요인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간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 경기가 국내 투자·고용·소득·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고리가 단절된 상태에서 환율, 유가 등 대외변수가 우리 수출 경쟁력에 극히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금년보다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이런 상황과 인식을 전제로 한다면 정부가 끊임없이 낙관적인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려는 접근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우리 경제가 그 운영의 틀을 시장원리를 기본으로 철저히 재정비하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지는 경쟁구조를 바탕으로 경쟁력의 원천을 보강하면서 한편으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적절히 수용함으로써 세계경제와의 통합에 빠른 시간 안에 성공을 거두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앞날이 매우 어두울 수도 있다는 적절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를 국민들과 공유해야 한다.

정부는 많은 경제·사회 현안들을 이런 관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 특히 한·미 FTA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지금은 단기적인 경기 전망의 걱정 여부나 호·불호에 대한 논쟁, 그리고 경기호전에 대한 낙관적 기대보다는 내년 이후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모습을 좌우할 조건에 대해 적절한 문제의식을 가다듬고 이런 방향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가야 할 때다.

한경 다산칼럼 2006년 7월 21일

2006년 7월 18일 취임한 권오규 신임 경제부총리는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바꾸는 것은 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현재 5% 정도인 잠재성장률 범위 내에서 향후 성장률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 경제의 잠재력과 잠재성장률의 의미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정리한 내용이다.

신임 경제부총리의 취임을 계기로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장래에 대한 예측, 경제 성장을 추가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과 방법 등을 놓고 경제정책 입안자들 사이에 벌어진 그간의 논란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수준과 추이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발전되고 있다.

잠재성장률을 추정하는 데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느 방법이건 다 일정한 가정과 전제 하에 과거의 연장선 상에서 경제의 현재나 장래의 성장 잠재력을 예측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고 본질적으로 계량적 예측의 범주에 속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우수한 관·민 연구기관, 중앙은행, 우수한 경제학자들의 탁월한 분석기능도 경제의 예측에 관한 한 도무지 신뢰할 바가 못 된다.

이들의 예측능력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경제가 갖는 높은 가변적 속성, 우리의 예측이나 영향 밖에 있는 대외경제 환경에

대한 높은 의존성, 경제외적 변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절대성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따라서 어떤 방법에 의해 추정되었건 잠재 성장률도 예측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그 정확성에 큰 기대를 하거나 그 유용성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할 가치가 없다.

굳이 잠재성장률을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 경제가 저성장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1999년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추이는 2000년 상반기에 정점에 이른 이후 경기 사이클에 관계없이 추세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작년 말 OECD의 ‘2005년 한국경제 보고서’나 금년 5월 스위스의 IMD가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크게 추락한 것으로 평가한 것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低)성장 위기에 대한 외부의 진단이다.

문제는 경제의 구조다. 우리 경제와 같이 구조적으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경제도 없을 것이다.

IT, BT, NT 등 신 융합기술 분야의 강점, 한류(韓流)열풍에서 보는 것과 같은 서비스 부문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 꺼질 줄 모르는 세계 최고의 교육열 등은 밝은 면이다. 한국경제의 기술·지식 경쟁력의 가능성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농업부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을 포괄하는 거대한 저생산 부문의 온존(溫存), 이로부터 초래되는 경제성과의 격차,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인구 고령화 추세 등 어두운 면도 이에 못지않다. 도무지 되살아날 줄 모르는 저조한 기업의 투자의

육이 문제의 핵심에 있다.

우리 경제의 앞길에 구조적으로 밝은 면이 보다 부각되고 어두운 면이 잘 극복된다면 계산된 잠재성장률을 크게 뛰어넘는 추가적인 잠재력의 발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항상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어차피 숫자놀음에 불과한 잠재성장률에 얽매어 우리 경제의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을 찾는 데 소극적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재정의 추가적인 투입 등 인위적인 경기부양 노력은 우리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경제의 구조적 왜곡을 가져와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스템적 접근만이 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본다.

물 흐르는 것 과 같은 유연한 경제,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분명한 경제, ‘우리 식(式)’이 아닌 ‘세계 식’으로 운용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자발적 투자를 유인하는 방법 이외에 경제의 잠재력을 높일 길은 없다.

이러한 경제운용 방향과 이에 대한 국내외 시장의 호의적인 평가가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는 경제의 모습은 계량적인 예측 범위를 크게 뛰어넘을 수 있다.

우리 경제의 잠재력은 예측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의 대상이다. 그리고 그것은 시스템에 대한 선택이어야 한다.

2004년 11월 노무현 정부는 5% 경제성장률과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담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이후에도 경제는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필자는 문제는 기업투자 부진에 있으며 근본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요즘 여당의 지도부가 소위 ‘뉴딜’로 불리는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몇 차례 선거의 참패(慘敗) 원인을 경제의 실패에서 찾고 참패에서 온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 내년도 대통령 선거의 쟁점이 될 경제 문제의 고지를 선점하기 위함일 것이다.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재선 고지를 향한 현직 대통령 아버지 부시에 대해 크게 열세였던 촌뜨기 클린턴이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economy, stupid)”라는 자극적인 구호로 ‘경제 살리기’ 승부수를 던지고 서민층을 파고들어 승리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

안타깝다.

이런 노력이 주요 당사자인 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정부조차도 등을 돌리고 있는 점 때문은 아니다. 오죽 했으면 평소 소신이나 이념과는 거리가 먼 처방들까지 들고 나왔을까 하는 애처로운 생각 때문도 아니다.

진정 안타까운 것은 이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우리 경제문제의 핵심의 소재를 모르거나 알고도 이를 회피하고 있는 것 같아서다.

미국까지 볼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지도자들 중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한국적 ‘경제 제일주의’ 철학의 창시자 박정희 대통령은 말 할 것도 없고 IMF경제위기를 오히려 호기(好機)로 삼아 ‘준비된 경제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당선된 김 대중 대통령, ‘7% 경제성장’ 공약을 내건 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예외가 없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경제의 핵심 문제는 과거와 다르며 미국의 경우와는 더 다르다. 지금 정치권이 우리 경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경기의 침체, 특히 소비 부진과 내수부문의 침체, 일자리 창출의 부진, 소위 양극화의 심화 등은 핵심적 문제가 초래한 결과일 뿐이다.

이 모든 현상의 배후에 기업의 투자 부진이라는 핵심 문제가 있다.

지난 5년 간 기업의 설비투자가 거의 제자리걸음이다. 이와 같이 투자가 부진한 것이 과거와 같이 기업의 자금 부족에 그 원인이 있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가능 자금은 적게는 70조원, 많게는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해서 아직까지는 사상 유례가 없는 저금리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투자의 부진 원인을 우리 기업들이 변화하는 세계경제 환경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취약해진 기업가 정신

에서 찾기도 한다. 일리가 있다.

그러나 지금의 전반적인 투자 부진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적어도 오늘의 한국경제를 견인(牽引)하고 있는,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이런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

여당 지도부와 의 대화에서 경제계가 내세우고 있는 요구사항, 예컨대 출자 총액제의 폐지, 각종 규제의 완화, 이미 물 건너간 기업인 사면 등은 그 자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투자 기피의 진정한 이유로서 내세우기에는 충분하지도 적절하지도 않은 것 같다. 이미 오래 지속된 상황으로 어제 오늘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기업이 진정으로 말하고 싶은 것들을 드러내 놓고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일종의 핑계거리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이 들이 진정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만한 것들을 짐작해 본다.

“우리나라가 진정 기업할 수 있는 나라를 향해 가고 있나, 이를 향해 나라의 각종 시스템이 일관성 있게 정비(整備)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 경영 능력이 발휘되고 있나, 나라 장래의 안전보장에 대한 우려 없이 오로지 기업경영에 전념해도 될까, 이런 걱정 안 하도록 정치가 제 역할만 해 준다면 경제는 우리 경제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잘 할 텐데.”

“문제는 정치야, 바보야”

경제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아닐까?

이 글은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결산하면서 한신년 특별연설 중 경제성장 목표 문제 등 경제 부문에 대해서 필자가 느낀 아쉬움을 대통령의 가상 연설문이라는 방식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저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향후 10년간 연 평균 경제성장률이 7%로 유지되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것을 핵심 경제공약(公約)으로 제시 한 바 있습니다.

원래는 5% 정도의 안정 성장이 바람직하고 또 실현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경제전문가들과의 토의 결과 제가 집권하면 이보다 적어도 2% 정도는 더 높은 성장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당시 이회창 후보가 6% 성장 공약을 했기 때문에 7%로 올려 공약을 내놓게 됐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경제를 운영해 보니 취임 첫 해에는 매우 어려웠지만 둘째 해부터는 대부분의 지표들이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고 어느 정도 자신도 생겨 나머지 임기 동안 7%는 몰라도 6% 이상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와 같은 성장 목표를 제시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역시 경제는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잘 될 것 같던 경제가 고유가, 환율 등 제가 어찌 할 수 없는 대외 환경에 의해 큰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했고 북한 핵 문제 등의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나 그렇게도 간곡하게 요청해도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지 않고 전(前) 정부 시절 야기된 카드채 등 가계부채의 누적에서 오는 영향 등으로 소비의 회복도 기대같이 이루어지지 않아 성장은 주로 수출에 의존하는 구조로 고착돼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은 저의 임기 첫 해인 2003년의 3.1%를 시작으로 그 이후 4.7%, 4.0%, 5.0%와 금년도 정부목표 4.5% 수준이 달성 된다고 하더라도 제 임기 중 평균 4.3%에 그칠 것 같습니다.

저는 경제성장률에 대한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에 대한 인식을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의 경제성장률은 한 국민경제에 속한 수많은 경제주체들이 한 해 동안 행한 다양한 경제활동에 대한 종합 성적표입니다. 문제는 이 성적을 매기는 주체가 대통령이 아니고 시장이란 데 있습니다.

이 시장의 인식이 대통령의 인식과 같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성숙한 시장경제를 향해 갈수록 대통령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나 시장에 간여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저는 경제운영의 경험이 쌓여 가면서 이러한 시장과 시장경제의 본질에 대해 보다 더 깊은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저는 결국 높은 경제성장률은 경제가 질적, 구조적으로 개선되고 기업이 정신이 살아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 시스템이 정비(整備)되면 얻어지는 결과물이지 대통령이 목표로 설정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대상도 아니고 더욱이 공약으로서 국민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기 주자들이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우리 경제가 처한 대내외 환경에 대한 적절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근본적으로 도전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고 외형적으로 높은 양적 성장을 추구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약하는 한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 분들이 저의 경험에서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저와 제가 이끈 정부의 경제 정책의 진정한 공과(功過)가 경제성장률뿐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정당하게 역사에 의해 평가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최근에 행해진 노 대통령의 신년 특별연설 중 경제성장률에 관한 부분을 들으면서 필자가 가상해 본 이 부분의 바람직한 대통령의 메시지다.

만약 이런 유(類)의 메시지가 나왔더라면 국민경제와 차기 주자들에게 참으로 유익한 교훈과 충고가 되지 않았을까?

한경 다산칼럼 2010년 1월 1일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으로서 2년 반 만에 다산칼럼에 집필을 재개한 후 처음 쓴 글이다. 필자는 세계 각국이 미 금융위기로부터 촉발된 범세계적 경제위기에서 일단 벗어난 것 같으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운용의 초점을 유연한 경제의 구조적 토대를 닦는 데 두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새해 경제의 전망과 운영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지난 해 3/4분기부터 보이고 있는 OECD 국가 중 가장 강력한 회복국면이 금년에도 본격적으로 이어진다는 전제 하에 5% 내외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데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금번 경제위기의 특성에 비춰 볼 때 아직도 정확하게 현 상황을 판단하거나 앞날을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은 전문가들조차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다”고 폴 볼커(P. Volcker)가 위기의 진행과정에서 이야기한 금번 위기가 갖는 주요한 특징인 ‘불가지성(不可知性)’에 아직은 큰 변화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경제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전제와 가정 그 어느 것도 확실성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과학으로서의 경제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또한 앨런 그린스펀(A. Greenspan)이 ‘10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위기'라고 말할 정도의 심각한 위기가 그렇게 한두 해만에 수습이 되고 회복세로 간다면 그간의 논의는 지나친 호들갑이었던가?

범세계적으로 재정과 금융을 통해 퍼부은 돈이 없었더라도 과연 경제가 이 정도의 회복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언젠가 시행할 수밖에 없는 출구전략이 시행되었을 때에도 경제의 회복력이 유지될 것인가라는 물음이 당연히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최근 일부 경제지표의 호전이 우리 경제의 펀드멘탈의 개선을 반영한 측면도 있지만 경기회복을 위한 그간의 재정·금융 노력 특히 IMF가 분석한 바와 같이 세계 최대의 재정의 경기보완 기능에 뒷받침된 측면이 크다는 지적도 충분한 근거가 있다.

낙관적 전망을 가능케 하는 경기관련 지표, 예컨대 성장률, 경기의 동행·선행지수, 주가, 환율, 유가, 부동산 가격지수 등에도 불구하고 구조관련 지표 즉 고용·내수·가계 및 금융의 부채구조, 기업의 투자 심리, 소비심리 등에는 별 개선의 징후가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점이다.

따라서 도무지 정확할 수 없는 경제예측에 지나친 의미를 두고 예측의 호·불호(好·不好)에 따라 일희일비(一喜一悲)하면서 설정된 높은 거시경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는 식의 경제운용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진정 우리 경제에 중요한 것은, 전 세계가 당면해 온 위기의 본질과 그 배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유사한 위기로부터 구조적

으로 자유로운 경제, 또 예측할 수 없는 위기를 맞더라도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위기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연한 경제의 구조적 토대를 닦는 것이고 이에 새해 경제운영의 역점이 주어져야 한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안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고 한다. 미래는 과거에 대한 태도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금번 글로벌 위기의 과정에서 한국경제가 필요 이상의 추락을 경험하고 아직도 이런 불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10여 년 전 우리가 맞았던 외환위기의 배경과 본질에 대한 편견 없는 그리고 의미 있는 해석과 정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이후의 우리 경제의 운영방향을 설계하지 않은 데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해 나갈 금년 이후의 경제운영은 역사적 사실인 글로벌 금융·경제 위기의 배경과 본질에 대한 이해와 해석, 그리고 정리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특히 금번 위기를 겪으면서 범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지극히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적절하고 균형적인 시각을 정립하는 것은 세계경제의 문제인 동시에 한국경제가 극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Ⅲ. 외환·경제 위기

- IMF 외환위기의 교훈
- 위기의 본질을 모르는 위기
- 경제위기의 본질
- 외환위기 8년을 맞는 소회(所懷)
- 인식(認識)의 위기

한경 다산칼럼 2002년 11월 19일

외환위기 발발 5년째 되는 시점에서 쓴 글로,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의 본질적인 배경과 원인을 파악하여 교훈으로 삼으려 하지 않고 단지 위기극복 조기 달성을 과시하는 인기 영합적 방식을 취하는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내용이다.

IMF 위기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이 위기가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었는지, ‘역사가 준 선물’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때다.

지난해 8월 IMF에서 빌린 돈을 다 갚으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IMF 극복을 공식 확인한 바 있다. 또 그동안 우리 사회 스스로의 문제인식과 실천 능력에 비추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개혁 과제들이 위기 극복과정에서 추진돼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경제는 약간의 대내외 환경 악화에도 근본이 흔들리며 제2의 위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위기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자문해 보게 된다. 외환위기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본인식이나 대응방법은 최소한의 ‘지적인 사회’에 기대될 수 있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다. 위기발생의 배경과 원인을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구조적으로 밝히려는 국가적 노력이 전혀 없었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보고서 하나 나온 적이 없다.

외환위기 발생의 책임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는 계층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집권세력은 일부 관료와 기업만을 희생양으로 삼고, 정 권유지나 인기 관리에 필요한 정치인·노동자·농민·언론·각급 지식 인 등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이 모두에게 책임의식을 불리일으켜야 개혁에 동참할 터인데, ‘스탠드의 구경꾼’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하기가 국가지도자가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는 말을 한 적이 한번도 없는 데 어떤 도덕적 기반을 가지고 온 국민의 책임의식을 논할 수 있을까?

위기 규명을 위해 동원된 감사원의 특감, 검찰의 수사와 기소, 국회의 청문회는 그 수준이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짜여진 각본에 따라 집권자 의도에 맞는 연출만 함으로써 진실규명은 포기된 채 국력낭 비의 장이 되고 말았다.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할 일은 한’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동서고금(東西古今)에 유례 없는, 정채판단의 당부를 가리는 소위 ‘환란 재판’에서 항소심도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외환위기와 관련한 기소항목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부에 의해 이 나라에 ‘죄형법정주의’와 ‘증거재판의 원칙’이 살아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다행이나, 사안의 성격상 외환 위기의 모든 내용을 사법심사가 밝히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재판 결과에 접한 일부 국민들이 “그러면 누가 주범이란 말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 것은, 위기를 정치적 이해(利害)와 비이성적인 국민정서에 영합하는 기회로 이용함으로써 국민 대다수의 외환위

기에 대한 인식능력을 단세포 수준으로 떨어뜨린 정부와, 국민에 대한 교육기능을 부분적으로 포기한 언론과 지식인사회 때문으로 본다.

IMF 위기는 외형상은 외화유동성 위기로 닥쳐왔다. 하지만 본질은 세계경제의 대전환기에 그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미 효율성이 다한 정부주도 고성장주의와 기업들의 팽창욕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운용시스템을 고수하다가 국제 경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 발생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기다.

그러나 위기 극복과 관련한 경제정책의 기초는, 위기로부터 얻어야 할 교훈과는 달리, 경기부양에 의해서라도 ‘경제가 잘 된다’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전달하고, ‘위기극복 조기 달성’을 과시하는 인기 영합적 방식이었다.

그래서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개혁정책의 효과는 원천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었고, 국민들에게 더 이상 개혁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고통의 감내(堪耐)를 요구할 설득 논리를 정부 스스로 내버렸다.

성공적이라고 자찬하는 4대 부문의 구조개혁도, 가장 우선했어야 할 공공부문과 노사부문의 개혁은 오히려 후퇴한 측면이 많고, 결과적으로 기업과 금융 부문 개혁까지 발목이 잡히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5년 전 오늘, IMF 외환위기 발생 직전 공직을 사임한 이후, 단 하루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필자는 이 위기로부터 제대로 된 교훈을 우리 국가 사회가 얻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은 대외적으로는 대이라크 전쟁 발발, 아시아지역 사스 충격, 대내적으로는 카드채 대란 후유증 등으로 소비와 기업투자가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냈다. 필자는 2003년 말 시점에서 한국경제의 경제위기 구조의 세 가지 측면을 들어 그 극복방안을 제시하였다.

올해 성장 전망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내년 이후 회복 가능성도 경쟁 상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투명하다. 특이한 것은 내년도 전망을 놓고 국내 연구기관들의 예측이 해외 예측기관들보다 훨씬 낫다는 점이다. 이 때까지 보아 온 일반적 경우와 정반대의 현상이다.

‘경기예측 무용론’(2003년 8월 8일 자 본란)을 주장하는 필자로서는 숫자 자체보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해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일부 언론은 이런 현상을 우리 경제가 빠진 무력감과 패배주의의 표현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기관들이 계량화할 수 없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해외 예측기관들보다 더 주목한 결과라고 보고 싶다.

‘경제가 심각하다’, ‘위축된 투자와 소비심리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동북아 중심국가론’ 등을 외치면서도 우리의 투자환경에 그 어떤 실질적인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외국인투

자는 급감하고 반대로 우리 산업의 해외 이전은 러시를 이룬다. 이미 청년 실업의 심각성이 경제·사회의 최대 이슈로 등장했다.

신용불량자의 양산과 신용카드사의 부실은 금융시스템의 붕괴, 즉 금융위기로 발전될 소지를 안고 있다. 여기에 정치는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고 기업에 대한 정치자금 조사까지 겹쳐 기업의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앞친 데 뺀 격이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문제를 포함한 무수한 직·간접 경제현안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또 ‘한국경제 위기론’이 나온다. 그러나 필자는 경제의 외형적 모습보다 그 배후에 있는 우리 경제 위기의 구조적 본질, 최소한 다음 세 가지에 주목하지 않으면 위기 극복의 길이 보이지 않으리라고 본다.

첫째는, 우리 경제의 취약한 국제경쟁력 구조다. 주요 국제 경쟁력 평가기관들은 한국경제의 경쟁력이 IMF 위기 이후 2000년을 고비로 이전 수준을 다소 회복하다가 다시 2002년 이후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거나 오히려 하락세로 반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즉,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각 분야의 구조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경제의 외형에 맞는 경쟁력 구조를 만드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우리 경제의 최대 문제가 경쟁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부족, 그리고 이를 보장해 주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국가지도자들을 비롯한 다수 국민의 확신 결여 및 이로부터 초래되는 국정운영 원리의 불투명성 때문이다.

둘째로, 경제와 비경제 부문 간 국정운영 원리의 일관성 결여다. 노사관계,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경제와 표리 관계에 있는 비경제 분야와 경제는 그 운용원리의 기본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가 될 수 없다. 마치 어긋난 두 바퀴를 가진 차를 한 방향으로 몰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적어도 시장경제를 한다면 이런 분야에서도 가능한 한 시장원리에 의하거나 그와 조화되는 방향으로 문제해결 방식이 추구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원리에 의한 경제운용이라는 구호는 허구(虛構)에 불과하다.

셋째는, 세계경제의 흐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 흐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국민의식과 폐쇄적인 경제운용 행태다. 최초로 추진한 칠레와의 FTA조차 6년이나 끌고 있는 현실, WTO체제 성립 10년이 지나고도 대외관계와 최소한으로라도 조화되는 농업정책 방향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 등은 국정운영 시스템의 부재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우리처럼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경제의 흐름과 조화되는 경제운용 방식을 도외시하면서 생존과 발전의 조건을 찾을 길은 없다.

지금 외형으로 드러나 있는 모든 경제현안은 이상의 본질적 문제로부터 초래된 결과일 뿐이다. 이런 구조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어떤 대중적(對症的) 처방도 곧 한계에 부딪칠 것이다.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위기’ 이것이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의 진정한 성격이 아닐까?

2003년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 문제 등으로 극심한 내수침체를 겪은 후 2004년 들어서도 뚜렷한 경기회복 조짐이 보이지 않자 경제위기론이 다시 부각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제위기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일관성 있는 시스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경제학의 기초개념인 ‘수요·공급의 법칙’만 잘 이해하면 대부분의 경제현상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앵무새도 10분만 수요 공급을 따라 하게 하면 훌륭한 경제학자가 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그리고 보면 경제는 어쩌면 꽤 쉬운 분야인지 모른다. 그래서 그런지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연세대학교에서 한 강연이나 17대 국회 개원식에서 한 연설 등에서 경제위기론을 강하게 부정하고 비판하면서 금년도에는 5% 수준, 내년 이후 임기 동안 매년 6% 수준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낙관론을 폈다.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한국경제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강한 자신감의 피력이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경제의 세계에 있어서, 또 대통령의 이런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정부보다 더 중요한 또 다른 경제주체인 기업들과 소비자들로부터 우리 경제의 장래를 낙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와 생산 활동을 하거나 묶어 놔던 주머니를 풀어 소비를 확대하

려는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들의 생각과 대통령이 지도하는 정부의 생각 사이에 큰 괴리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이 괴리를 인정하고 이의 배경에 있는 위기의 구조적 본질을 이해해야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노 대통령은 앞의 강연과 연설에서 단기적으로 경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경기부양 목적의 정책 수단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점도 천명했다. 과거 정부에 있었던 경기부양 노력이 가져 온 문제점들도 날 낱이 지적했다. 매우 옳은 문제 인식이라고 본다. 필자도 수차례 본란을 통해 경기순환적 관점에서 조성되는 위기론을 경계하고 과거의 경기부양책이 우리 경제에 가져 온 구조적 왜곡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경제위기론에 대한 부정이나 비판이 우리 경제의 위기구조의 본질적 측면까지 과소평가하거나 부정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 경제의 취약한 국제경쟁력 구조, 경쟁력을 보장해 주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확신의 결여 및 이로 인한 경제운영 원리의 불투명성,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 하에서도 세계경제의 흐름에 대한 인식 부족, 이 흐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국민의식과 경제운용 방향, 경제와 비경제 부문 간 국정운영 원리의 일관성 결여 등이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구조의 본질이라고 보는데 이런 본질적 요소에는 그간 별다른 개선의 징후가 없었다. 북핵 문제와 한·미 공조관계의 향방 등 비경제적이나, 어쩌면 보다 더 본질적인 구조적 요인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구조적 요소들이 한국경제의 장래에 대해 대내외 주체들의 신뢰 저하 내지 상실을 초래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위기적 상황인식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분석일 것이다.

성장률의 저하는 물론 이의 바탕이 되고 있는 대내외 투자와 소비의 위축이나 국내 산업, 특히 제조업의 공동화는 이런 상황인식이 초래한 결과적 외형적 현상일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경제문제의 근원과 배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우리 사회가 맞았던 IMF 경제위기, 그리고 이의 수습 과정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를 허심탄회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 지난 경제위기는 우리에게 기존 경제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반성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어떤 의미에서 ‘위장된 축복(disguised blessing)’이었다.

그러나 전 정부는 이 위기의 배경과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인식을 주어 진정한 구조개혁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지난번 위기는 대가 없이 치른 비싼 코스트에 그쳐 버렸고 이 위기구조는 더 심화돼 왔다고 본다. 국가지도력의 한계였다고 본다.

지금 우리 국가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의 위기구조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라고 본다. 또 경쟁력을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확신과 매우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이에 대한 일관성 있는 선택이라고 본다.

이런 국가지도력이 갖추어지기만 한다면 오히려 경제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한경 다산칼럼 2005년 11월 17일

외환위기 발발 8년째 되는 시점에서 경제위기론이 또 다시 대두되는 것을 보며, 과거 외환위기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처리과정을 거울삼아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경제구조를 만들 것을 촉구하였다.

위기 발발 8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또 다른 경제위기’의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그치지 않는다. 우리 경제가 만성적인 ‘위기의 재생산 구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위기 당시 정치권, 정부, 언론 등 우리 사회의 주요 기구는 우리나라, 나아가 동남아 외환위기의 진정한 배경과 원인을 밝히고 이로부터 적절한 교훈을 얻음으로써 유사한 위기의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배제하려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노력보다도 국민들의 감정에 편승해 국민적 정서를 달래는 데 역점을 둔 접근방법을 선택했다. 정권의 불순한 의도가 이에 더해졌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니 뒷일은 보나마나다.

검찰은 국민정서와 정권의 의도를 등에 업고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정책판단의 당·부를 심리하는 소위 환란재판을 시작했다. 7년에 가까운 세월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위기와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 전부가 각급 법원에 의해 철저

히 부정됐다. 그러나 위기의 모든 내용, 특히 구조적 국제적 원인과 배경 등 본질적인 사항은 원천적으로 사법심사의 한계 밖이었다. 그렇다고 다른 국가 기능이 이를 수행한 사실은 지금까지도 없다.

재판 결과가 소위 ‘환란 주범론’으로 표현된 당시 사회의 일반적 인식들에 근본적인 교정을 가져왔는지는 의문이다. 온 사회를 들끓게 했던 이 사건의 역사적 재판 과정을 제대로 모니터한 언론이 하나도 없다는 데서 드러난 우리 언론의 직무유기의 결과다.

IMF 체제 이후 필요 이상으로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대량 실업이 발생하는 등 외환위기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증폭된 것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초(超)고금리와 긴축재정 등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거시경제 운용방향을 IMF로부터 요구당하고 이를 수용해 경제운용을 한 데 주로 기인한 것이다. 이는 98년 12월에 이미 IBRD에 의해 지적됐고 99년 4월에는 우리 정부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검토와 분석이 위기 규명의 핵심적 내용이 됐어야 하는데 전연 그러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국제적 측면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을 또 한번 드러냈다.

양식 있는 국제 금융사회의 전문가들은 아시아 외환위기의 발생에 있어서 국제금융의 구조적 문제와 국제금융 자본가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이와 관련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국제금융 정책의 문제점과 책임의 일단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 올 때를 대비해 국제금융 제도가 개선돼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 어쩌면 부분적이거나 아시아 외환위기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는 위기의 원인과 배경을 다루는 국가적 노력과 정에서 이런 국제적 측면은 논의조차 된 적이 없다. 국제사회에서 이해되기 어려운 나라였다.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까지 했던 IMF 위기의 본질에 대한 이와 같은 잘못된 인식과 처리과정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위기의 재생산 구조의 배경이 되고 있지 않을까?

또 다른 위기가 온다면 지난번 같은 외환위기의 형태는 아닐 것이다.

우리 경제 특유의 복합적인 위기구조의 배경과 원인에 대한 편견 없는 분석과 성찰, 이를 바탕으로 지난번보다 더욱 심각할 수도 있는 또 다른 위기의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로운 경제구조를 만들려는 노력을 우리 사회 전체, 특히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하고 있지 않다는 데에 진정 위기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긴 세월의 재판 과정을 끝내고 늦게나마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까지 받아 개인적인 질곡(桎梏)에서는 벗어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필자가 깊은 아쉬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소이(所以)다.

한경 다산칼럼 2005년 12월 16일

경기낙론이 고개를 들고 있던 2005년 말, 필자는 단기전망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보다 주목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돌이켜보면, 2007년 말까지 경기상승 국면이 이어졌으나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로 2009년까지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었다.

최 인호 씨의 베스트셀러 『상도(商道)』에는 주인공 임 상옥에게 스승 석 승 스님이 그의 미래에 닥칠 세 번의 위기에 대한 예언과 이를 벗어날 수 있는 비책을 알려주는 장면이 있다.

이 장면 중 다음의 대목이 특히 눈길을 끈다.

“문제는, 네가 첫 번째 위기는 위기임을 알겠으나 두 번째 위기는 위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위기를 위기로서 직감할 때에는 헤어날 방법이 있는 법이다. 그러나 위기를 위기로서 인식하지 못할 때에는 자신도 모르게 멸문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심하여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때가 혹시 무서운, 위험한 고비가 아닐까 생각하여라.”

위기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성공체험에 매몰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말이다.

내년 우리 경제는 금년보다는 좀 나아질 것이고 세계경제도 최소한 금년보다 불리하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 국내외의

일반적 전망이다.

내수가 조금 살아나는 것 같고 기업 활동에 대한 전망도 다소 나아진다. 일부 산업 분야, 일부 대기업들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특히 최근 주가가 계속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는 매우 고무되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되면 한동안 우리 사회의 화두(話頭)의 하나인 ‘또 다른 한국경제의 위기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잠잠해지게 마련이다. 증권가에서는 그동안 비관적인 시장전망을 내놔던 사람들이 설 땅을 잃고 심지어 직장에서 퇴출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의 이런 낙관적 전망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개선에 바탕을 둔 것일까?

일부 분야의 눈부신 경쟁력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부분의 서비스업을 포괄하는 웅대한 저(低)생산성 부문의 온존(溫存), 이로부터 초래되는 경제 전반의 경쟁력 즉 총요소생산성의 점진적 저하 추세, 기업의 투자욕 감퇴, 각 부문의 양극화의 심화 등 우리 경제의 앞날을 매우 어둡게 하는 부정적 요소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징후는 없다.

더욱이 경쟁력을 보장해 주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반의 취약, 세계최저의 출산율과 급속한 인구 고령화 추세 등 보다 본질적이고 구조적 문제점에 해결의 실마리가 오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은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주로

현상적이거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경기가 호전되고 낙관적 전망이 지배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우리 경제에 축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증시에서는 모든 사람이 낙관론에 빠질 때 오히려 증시 하락이 시작된다는 속설(俗說)이 있듯이 모두가 낙관론 쪽으로 몰리게 될 때가 위험 신호일 수도 있다.

한국경제는 전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제다. 가변적 요소가 너무 많을 뿐더러 경제외적 요인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경제의 장래가 경제전문가들의 예측 범위 안에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전혀 정확할 수 없는 경제의 단기전망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중에서 밝은 면을 증진시켜 나가되 어두운 면, 즉 위기적 요소에 주목하면서 이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이를 구조적으로 개선해 간다면 우리 경제의 장래는 밝을 것이고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실천과정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어두운 미래를 맞을 것이다. 경제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평범한 진리가 장기적으로는 결국 맞아떨어지는 영역이다.

우리 경제에 구조적 변화는 별로 없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어쭙잖게 약간 전망이 호전된다고 들뜨기 시작하면서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인식의 오류(誤謬)’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IV. 경쟁, 재벌, 소비자, 국제화 정책

- 재벌 문제와 정부실패
- 정부의 몫, 기업의 몫
- 경쟁시장 최대의 적(敵)은?
- 소비자 위한 국제화를
- 선진국 되길 포기할 것인가?
- 국제화 전략에 필요한 것들
- ‘한·미 FTA’, 일본서 배운다
- 정부가 경쟁시장에 걸림돌이 된다면?

한경 다산칼럼 2003년 1월 10일

2003년 초 노무현 대통령 취임 직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재벌정책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을 때, 재벌 정책에 우선하여 정부실패부터 교정해야 한다는 필자의 지론을 정리한 내용이다.

인수위원회가 구조조정본부의 해체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시작으로 갖가지 재벌정책 구상을 쏟아내 재계와 신경전이다. 거론되는 구상 중 어떤 것이 최종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재벌정책 수단으로 채택될지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새 정부가 다룰 가장 중요한 경제이슈가 될 재벌 문제에 대해 합리적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재벌 문제의 본질, 그리고 관련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

재벌 문제는 ‘한국경제 문제 그 자체’다. 재벌의 생성, 성장, 경제력 집중, 금융 및 정경유착 등 재벌과 관련된 제반 현상과 문제점은 한국경제의 역사적 흐름,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따라서 재벌에 진정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기업실패’에 못지 않게 ‘정부실패’의 결과다.

재벌은 그간 우리 정부가 집착해 온 ‘고(高)성장 신화’에 대응해서 대기업들이 추구한 ‘팽창 위주의 기업경영’을 위한 최적의 기업구조

였다. 거시경제 운영목표를 설정하고 시장에 간여하는 산업정책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고성장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 것은 고 박정희 대통령 이후 역대 정부의 일관된 경제운용 기조였고, 재벌은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이 경제운용 구조에 깊숙이 참여해 왔다. 정경유착도 이 구조의 당연한 소산이다.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로 이런 식의 경제운용 방식이 그 효용성을 다 했고, 당연히 시장을 중심으로 정부와 대기업 간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재설정됐어야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국민의 형평욕구 수용 등 주로 정치적 고려에 의해 재벌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돼 왔다. 이 역시 또 다른 ‘정부실패’였다.

김대중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이 정부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경제운용의 기조로 삼고 개별기업 단위의 경쟁력을 기본으로 하는 기업정책을 추구한다고 끊임없이 말해 왔지만, 이 정부의 재벌정책은 비시장적 접근의 표본이었다.

이 정부 집권기간 중 재벌구조가 상당히 변화한 것은 사실이나 그 중 바람직한 변화는 정부의 재벌개혁 노력 성과라기보다 IMF 체제를 맞아 변화된 경제 환경에 대응하는 재벌들의 자기적응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새 정부가 ‘국제경쟁력 제고란 경제적 당위성에서 재벌이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경제정책의 중점을 거시목표에 집착하는 성장 위주로부터 시장기능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는 구조정책으로 바꾸고, 산업정책 중심에서 경쟁정책 중심으로 전환해 경쟁력 있는 기업만 살아남는 기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진정으로 이런 정책방향

을 택하려면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정부의 조직원리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보다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는 기업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금융부문에서 기업신용평가와 여신심사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재벌의 변화를 위해 불가결한 선행과제다. ‘정부실패’부터 먼저 교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새 정부는 정부가 원하는 재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릴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앞에서 말한 기업환경은, 대기업들이 말로는 원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경쟁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대부분의 우리 대기업들에 사실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이런 환경이 조성되면 그들 역시 국내외적으로 생존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기업구조를 향해 스스로 변신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재벌들은 이미지를 공유하는 정도의 유연하고 느슨한 연계체제,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지주회사 형태, 재벌구조를 해체하고 완전한 개별 기업단위의 경영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돼 갈 것이다. 구조조정본부 또는 유사한 기구의 유용성도 이 과정에서 재벌들 스스로 판단할 문제다.

탈세나 내부거래 가능성 등 남는 문제가 많겠지만 이에 대해선 엄격하고 예외 없이 공정거래법, 증권관련법 또는 세법 등 관련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면 대부분은 해소되리라고 본다. 경제력집중 억제 제도를 포함한 공정거래법 체계의 전면적인 재편도 이런 방향이 선행된다면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과제다.

한경 다산칼럼 2003년 2월 14일

노무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새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필자는 전경련의 역할에 앞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 정립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재벌개혁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최근 발언과, 전경련에 대한 당선자 경제참모들의 개혁 요구 발언은, 향후 정부와 기업과의 관계 설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오랜 진통 끝에 선임된 손길승 전경련 신임 회장은 새 정부와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에서 그의 첫 과제를 찾고 있는 것 같다.

손 회장의 이러한 노력은 재벌정책을 중심으로 그간의 새 정부팀과 재계의 심각한 대립을 완화하고, 재벌개혁 등 경제정책 현안들을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와 기업 모두 시장경제에서 양자 간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과 관계 설정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노력을 하지 않으면 갈등의 근본 요인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며, ‘시장경제’는 한낱 수사(修辭)에 그치고 말 것이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갈등 요인들을 ‘바람직한 정부와 기업의 관계’ 재설정이라는 시각에서 살펴보자.

명색이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바뀐다고 기업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이렇듯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인가? 혹시 새 정부를 맡을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정상으로 인식하고, 지금과 같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우월적 지위에 흡족해 하고 있다면 크게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이다.

노무현 당선자가 “출자총액제한 제도 등 3대 개혁과제는 홍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밖의 것은 홍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인가? 정부 정책입안 과정이 다양한 의견수렴과 경제논리에 의한 토의과정이라기보다 주고받기 식의 정치적 흥정같이 들릴까 싶어 걱정된다.

책임안의 최종 결정은 ‘정부의 몫’이다. 누가 뭐라고 하든 정부는 그가 입안하는 정책이 옳다고 확신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다. 물론 정책의 합법성과 합리성, 그리고 관련 정책 간의 일관성을 유지할 책임은 당연히 ‘정부의 몫’이며, 이 결과는 선거과정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전경련의 역할과 개혁 필요성에 대해 새 정부를 맡을 사람들이 이런 저런 주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전경련은 대기업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는 임의단체다. 이 단체가 회원기업들의 의사를 어떤 식으로 집약하고 전달하든 전적으로 그들 기업의 ‘몫’이다. 또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전경련이 어떤 기능을 갖추든, 어떤 조직 형태를 갖든, 역시 그들의 몫이다. 만일 정부가 전경련의 존재 자체나 조직 및 운영형태에 대해 심각할 정도의 이의가 있다면 대화 통로를 전경련 대신 소속 회원사 등에서 바로 찾으면 된다.

정부가 먼저 걱정할 일은 전경련의 개혁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의 개혁이다. 전경련의 역할과 기능을 논하기에 앞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 정립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 대기업들의 투명경영을 요구하기에 앞서 정부 정책의 입안과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심해야 하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에 앞서 정부의 바람직한 권한 배분과 행사의 합법성, 권한과 책임의 일치 여부를 걱정해야 한다.

오늘의 경제상황은 대기업들에 정부와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업의 몫’이 있음을 환기시킨다. 새 정부와의 대화 통로 단절이 그렇게도 문제인가? 이에 앞서 이제는 기업 후원자로서의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를 버렸는지, 정부규제의 철폐를 외치면서도 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호막은 온존하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은지 그들은 반성해야 한다. 나아가 그들이 정부의 시그널보다 세계시장의 시그널, 즉 세계시장 경쟁자의 행동과 소비자의 선택을 더 의식하고 기업경영을 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문제가 되는 대북 비밀자금 지원 과정은 어떤 법제, 경제논리나 상식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최악의 정부·기업 관계다. 이 문제의 확실한 정리와 청산이 새 정부의 기업정책 성패를 가름할 것이다. 시장을 중심으로 정부는 ‘정부의 몫’을, 기업은 ‘기업의 몫’을 하는 정부와 기업 간 새로운 역할분담과 관계 설정이 새 정부 대기업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동시에 신임 회장에게 거는 전경련 회원사들의 기대가 돼야 한다.

한경 다산칼럼 2005년 6월 10일

2005년 공정위가 KT와 하나로 텔레콤이 시내전화 요금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경쟁제한적 조치가 정부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최근 KT를 비롯한 통신사업자들 간의 다양한 공동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도 높은 조사와 심판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KT와 하나로텔레콤 간의 시내전화 요금 담합은 사상 유례가 없는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아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거의 모든 나라의 경쟁법은 사업자들 간의 공동행위를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로 규정짓고 강한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금번의 엄격한 심판 결과도 통신사업 분야의 공동행위 소지를 없애려는 공정위의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 이해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시장의 형성과 발전과정 그리고 통신사업자와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 시장이나 사업자들에게 공정거래법 상 공동행위에 대한 일반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데 있다.

우선 통신사업은 오랫동안 공기업 형태의 독점 사업으로 운영돼 오다가 민영화와 개방을 추진하면서 경쟁을 비롯한 시장요소를 도입

하고 있으나 아직도 과도기에 있는 사업이다. 정보통신부는 다양하고 강력한 법체계를 가지고, 때로는 경쟁촉진의 명분까지 동원하면서 이 분야의 사업을 구석구석 규제하고 지도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인위적으로라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외견상 일반적인 경쟁원리와는 전적으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정책 수단들, 예컨대 후발 사업자가 일정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까지 선·후발자를 구분해 지원하고 규제하는 소위 ‘비대칭 규제’ 까지도 서슴지 않는다.

금번 시내 전화요금과 관련해 KT와 하나로텔레콤 간 담합으로 판정된 사안의 배후에는 후발 시내전화 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의 시장 경쟁력을 키워 주기 위해 정통부의 ‘비대칭 규제’가 행정지도의 형태로 있었던 것은 충분히 짐작되고도 남는다. 금번 공정위의 심판결과에 대해 당해 사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근거다.

이런 배경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통신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경쟁법 원리와 통신사업에 적용될 특유의 경쟁촉진 수단과의 조화를 위해 공정위와 정통부 간에 적절한 정책조정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 마련된 제도나 정책수단들은 투명하게 관련 사업자들에게 제시돼야 한다. 그래야 사업자들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이해하고 충분한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통부가 이런 노력을 먼저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면 공정위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의 이런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나 과정이 전연 없는 상태에서 공정위가 사업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한지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이다.

정통부뿐 아니라 대부분 정부 부처들의 경쟁시장에 대한 이해는 매우 낮다. 그들은 관장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때로는 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때로는 영향력 아래 있는 각종 사업자 단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간여와 규제를 하고 있다.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경쟁제한적 조치가 정부 각 부처에 의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고 사실상 정부 각 부처가 공동행위의 온상이 돼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63조는 정부 각 부처가 경쟁제한적 법령을 제정하거나, 사업자에 대해 경쟁제한적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에 의해 이뤄지는 무수한 법적·제도적·정책적 차원의 경쟁제한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공정위에 강력한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경쟁시장의 조성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공정거래법 중 가장 중요한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공정위가 이 규정의 취지대로 기능하려면 거의 전 정부부처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싸움을 벌여야 할 테니 단독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다. 그러나 이 기능을 포기하거나 소극적으로 하면서 사업자들의 경쟁제한 행위에만 주목해서는 경쟁정책의 효과는 한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경쟁시장 최대의 적(敵)은 정부 자체다.

한경 다산칼럼 2007년 4월 20일

2007년 4월 2일자로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국내 일각에서 반대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앞으로 정부와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미 FTA는 앞으로 의회의 비준(批准)을 거치는 과정에서 두 나라 모두 각계각층의 많은 반대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을 남겨 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협정의 결과 추정 손익계산이 우리 경제에 플러스로 나온다고 해서 이런 설득 과정이 쉬우리라는 보장은 없다.

많은 전제와 가정(假定)이 필요한 이해득실에 대한 계산보다는 이 협정이 궁극적으로 가져 올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 이 변화가 초래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의 향상, 그리고 이 과정을 감내해 갈 수 있는 우리 경제의 체질에 대해 주목하고 이에 대한 인식과 믿음을 국가 사회의 지도자들은 물론 국민 대다수가 공유해야만 이 협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진정한 국제화의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저해요소는 경제의 본질적 문제를 소비자 내지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지 않는 사고(思考),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각종 정책과 제도, 관행

에 있다. 이번 한·미 FTA의 타결 과정과 그 이후에 양국 내에서 공히 일어나고 있는 일부 국제화의 시각에서 수용될 수 없는 국익 우선의 주장과 이해계층이나 특정산업 보호 논리들은 바로 이런 사고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머지않아 추진될 한·중 FTA에 이어 한·일 FTA도 하게 될 것이다. 필자의 경험과 판단에 의하면 이 나라들과의 FTA 협의 과정은 미국과의 경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나 이 나라들 모두 아직도 공고(鞏固)한 공급자 위주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더욱 그렇다.

개방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핵심적 어려움은 바로 해당국들이 갖는 경제구조의 본질적 문제점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한·미 FTA를 시작으로 계속될 각국과의 FTA를 성공적으로 타결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경제가 보다 심화된 국제화의 장(場)을 열어 가려면 경제주체들의 획기적인 인식전환이 선행돼야 한다.

그것은 바로 경제운영의 궁극적 목표를 소비자 후생 증대에 두고 모든 문제를 소비자 중심으로 사고하는 소비자주의(消費者主義)의 확립이다.

정부에 요구되는 것은 지원과 보호를 통해 공급자에 대한 배려를 우선하는 공급자 위주의 경제구조에서 과감하게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의 경제제도 및 관행을 국제규범에 적합하게 개편할 수 있으며, 세계를 조망하는 국가 경영전략의 수립도 가능해진다.

나아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고 경쟁

력을 조장·자극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산업이나 품목을 주요 기준으로 편성돼 있는 정부의 조직원리에 근본적 변화 역시 불가피하다.

기업은 글로벌 경쟁시대의 주역(主役)으로서 세계의 우수기업과 겨루려면 무엇보다 세계시장의 변화나 세계 방방곡곡의 소비자 선호의 변화를 잠시도 놓쳐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소비자 지향적인 경영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조직과 경영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제 기업은 정부의 ‘지원이나 보호’와 ‘규제’는 표리(表裏)의 관계에 있다는 깊은 인식을 가지고 정부에 대해 갖고 있던 종래의 기대를 재고(再考)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의 시그널’보다 ‘시장의 시그널’, 즉 경쟁자의 행동과 수요자의 선택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다.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 능력은 이 모든 것의 전제(前提)다.

판별력 있는 유권자가 유능한 정치가를 양성하듯 현명하고 합리적인 소비자들의 보이지 않는 압력이 없이는 경쟁력 있는 기업도 합리적인 경제운용 방향도 나올 수 없다.

한·미 FTA의 타결로 또 다른 단계의 국제화의 길로 들어서서는 우리 경제는 국제화의 노력을 소비자주의의 확립과 병행 추진할 때에만 진정 그 실(實)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한경 다산칼럼 2004년 1월 12일

2003년 말에 이어 다시 2004년 1월 8일 칠레와의 FTA 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를 무산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국제화의 흐름과 괴리된 ‘우리 식’ 경제운용으로는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010년 5월 현재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량은 3.3배 늘었으며, 이 중 수출은 4.8배, 수입은 2.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를 지난해 말에 이어 지난 8일 다시 무산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화 수준이 또 한번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 이후 무한경쟁과 단일시장으로 특징지어지는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는 이 흐름과 조화되는 나라 운영, 경제운용 측면에서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국가적 규모의 경제위기를 겪음으로써 국제화의 흐름과 괴리된 ‘우리 식’ 경제운용, 기업경영을 해온 대가를 단단히 치렀음에도 말이다.

농업정책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이런 ‘우리 식’ 경제운영의 대표적 분야다. 우리의 농업과 농촌이 갖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회피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보다는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호도하거나 핵심에의 접근을 유예하는 등 인기영합주의가 이 분야의 정책방향을 지배해 왔다.

국제가격과의 차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구조개선을 근본적으로 유도하여 개방의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그러나 그간 농산물 가격정책은 이런 방향과 전적으로 역행하는 것이었고, 지난 10년간 70조원 이상의 농업구조개선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구조개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의문이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업부문에서 ‘잃어버린 10년’ 세월의 절반이라도 건졌더라면 오늘 우리나라가 국제화 목표에 비추어서 너무도 늦은 최초의 FTA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온 나라가 소동을 벌이고 상대국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세계의 주목거리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다른 분야인 외환 수급 및 환율 관련 정책을 보자.

외환위기를 겪고도 이 분야는 시장원리나 국제적인 흐름과는 크게 괴리된 방향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본다. 국내경기의 진작을 위해 이들을 주요 정책변수로 활용한 대내균형 우선의 사고가 관련 정책방향의 근저에 있다.

아마도 금년도 경제운영에 있어서 최대의 문제점은 우리 식 외환·환율 정책에 대한 미국 등 바깥 세계의 문제 제기와 그로 인한 국가간 갈등이 될 것이다.

갈등을 해소하지 않은 채 또 이로 인한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 가능성의 상당부분을 외면한 채 언제까지 마이 웨이(my way)를 계속할 것인지? 시장원리에 적합하고 국제적인 흐름에 동승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는 경우 이런 갈등은 해소되겠지만 일시적인 수출 경쟁력 약화와 성장의 후퇴는 불가피할 것이다. 정부로서는 매우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다.

지금 세계는 한 나라의 경제운영 방식과 세계경제의 흐름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 유형의 나라들로 확연하게 갈라지고 있다.

대외균형과 대내균형이 충돌할 때 대내균형을 우선하는 나라, 어떤 부문의 개방이 문제로 대두되었을 때 자국이 해외에서 획득할 새로운 시장에는 주목하지 않고 이로 인해 잃을 국내시장에만 집착하는 나라, 전체 국익과 부문별 이익이 충돌할 때 후자가 정책결정의 기준이 되는 나라, 개방이 불가피하고 대세가 되고 있을 때에도 이런 기회를 관련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의 호기로 활용하지 못하는 나라,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해관계 집단의 목소리만 들리고 이에 대한 바른 방향을 정립하고 이들에 대한 설득과 교육 기능을 포기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 운영을 하고 있는 나라, 그 어느 나라도 경쟁력 있는 경제를 운영해 가는 경우가 없다.

반대의 경우는 예외 없이 세계시장의 승자가 되고 있다.

칠레와의 FTA 체결 문제는 협정 내용이 갖는 의미나 영향을 넘어 우리나라의 국제화 수준과 의지 그리고 대외정책의 신뢰성이 세계시장에서 시험당하는 결정적 기회가 되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우리나라가 어떤 유형의 나라에 속할 것인지를 분명히 선택해야 된다.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선진국 줄’에 분명하게 설 것인지, 아니면 쉬운 길을 걸으면서 선진국 되기를 포기할 것인지.

한경 다산칼럼 2005년 4월 15일

2005년 3월 29일부터 시행된 '주식 보유에 관한 5% 룰'에 대해 『파이낸셜 타임스』가 국수주의라고 비판한 일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우리의 국제화 의지와 노력이 국제사회가 수용하고 평가할 만큼 충분한지 반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최근 '주식보유에 관한 5% 룰'의 개정을 둘러싸고 우리의 국제화 의지가 세계시장에서 또 한번 시험을 당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물론 이와 관련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 등 외국 언론의 기사는 그 논거나 사실 파악에 있어 상당한 오류가 있어 정부가 강한 반론을 제기한 줄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그간 우리나라가 끊임없이 표명해온 대외개방, 투자환경의 개선 등 우리의 국제화 의지를 국제사회가 충분히 수용하고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또 그 원인이 우리의 각종 제도나 정책, 그리고 행태를 정부가 천명하는 국제화 의지에 부합되도록 개선하지 못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 깊은 반성이 필요한 때다.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대외 관련 경제·사회 현안들 중 어느 하나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미국 하버드대 의대가 송도 신도시에 병원 설립을 검토했다가 포기하고 대신 상하이와 두바이로 옮겨 가도록 만든 의료시장 개방 문제,

난항에 부딪친 경제자유구역 등에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문제, 오래된 현안으로 한·미 투자협정의 전제조건으로 제시된 스크린쿼터의 폐지 내지 축소 문제 등이 그 예다. 여기에 최근에는 높은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 외국인들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등에 대한 비판여론에다 외국자본 폐해론이 제기되는 등 재계와 금융권에 외국자본 배치 분위기마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5%룰의 개정방향이 제시됨으로써 문제가 뒤섞여 버린 감이 없지 않다.

앞에서 언급한 현안들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우리 내부의 경제운용 과제들도 국제화 방향과는 괴리된 채 진행돼 왔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10조원 이상의 농업구조개선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결과적으로 ‘잃어버린 10년’이 돼버린 농업정책이 대표적인 예다. 칠레와의 최초의 FTA 체결 과정에서 드러난 국론의 분열과 국정운영 능력의 한계, 그리고 이로 인한 대외신뢰도의 추락이 그렇다.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급격한 환율하락과 이에 따른 수출기업의 경쟁력 문제도 시장원리나 국제적인 흐름을 도외시하고 환율을 국내경기의 진작을 위한 정책변수로 활용해 온 대내균형 우선 사고의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의 취임과 더불어 ‘선진 통상국가’를 지향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표명됐다. 이번 발표는 경제활동과 관련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벽을 철폐하고 대외협력의 바탕 위에서 경제운용을 하겠다는 것으로, 종래보다 훨씬 적극적인 국제화 의지의 표명이다. 지극히 옳은 방향이긴 하지만 정부의 공언이나 의지의 천명으로만 될 일은 아니다.

선진 통상국가로의 길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선택이 되려면 정부 자신과 국민에 대해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물음을 던지고 “그렇다”라는 답변을 얻을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어떤 부문의 개방이 문제로 대두됐을 때 이로 인해 잃게 될 국내시장에만 집착하기보다 해외에서 획득할 새로운 시장을 더 주목할 준비가 돼 있는지? 전체 국익과 부문별 이익이 충돌할 때 전자를 정책결정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개방이 불가피한 선택이고 대세라면 이를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호기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거시경제 운용을 함에 있어서 대외균형과 대내균형이 충돌할 때 대외균형을 우선할 각오가 있는지? 대외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이해관계 집단의 목소리가 커지더라도 정립된 바른 방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이들을 설득 교육하겠다는 결심과 실천 의지가 있는지?

‘한국경제의 국제화’는 여전히 멀고 험난한 길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현재 국제화 수준에 대한 허심탄회한 반성을 바탕으로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부의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만 실현될 수 있는 과제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점에 필요한 진정한 국가지도력의 요체다.

한경 다산칼럼 2006년 2월 17일

2006년 초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의지를 표명한 데 이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협상출범 선언으로 한·미 FTA에 대해 찬반 양론이 극렬히 대립되는 가운데 쓴 글이다. 한·미 FTA가 한국경제의 구조개선의 획기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 FTA는 오래 전의 ‘미·일 구조조정 협의’를 생각하게 한다.

1989년 개시되고 이듬해 최종보고서가 채택된 이 협의는 외형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이 양국 간의 무역과 국제수지 조정 상 상대방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장애요소들을 지적하고 서로 고쳐 가기로 협의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 초점은 일본 측의 문제였으며 일본의 경제정책 및 제도의 시장경제화, 개방화와 일본 특유의 기업 관행의 대폭적인 개선이 주요 과제였다.

일본 내부에서 미국의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이 컸지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이 협이가 당시 일본경제가 안고 있던 본질적 문제점인 전근대적인 일본식 경제시스템을 청산하고 요즈음 식 표현으로 하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수용함으로써 세계경제와 통합을 이루는 결정적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를 가졌었다.

이 협의 이전에도 일본경제의 근대화 내지 개혁 과정 중 중요한 것들은 일본 스스로의 자각과 의지가 동인이 된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

터의 압력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본인들은 이런 외압(外壓)이 밀려올 때 마다 대체로 수용하고 소화시키는 방향에서 이를 극복함으로써 나라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는 지혜를 보였다.

1854년 페리 제독이 이끄는 흑선의 압력에 따른 문호개방을 시작으로 2차대전 이후 맥아더 정부에 의한 개혁, 80년대 1,2차 석유파동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이행, 1985년 플라자 합의 결과 초래된 ‘엔고’에 따른 경제의 전면적 구조조정 과정 등 어느 것도 이에서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일본인들의 지혜는 이 협의 결과의 실천 과정에서는 거의 발휘되지 않았다. 이렇게 된 데는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은 80년대 말부터 시작되는 문명사적 세계 경제패러다임의 전환기에 경제 시스템을 글로벌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 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이런 상황에서 배태되고 있었다.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도 미국으로부터 세계경제와 조화되지 않는 우리 식 경제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초점은 농업과 서비스 부문 특히 서비스 부문에 집중될 것이며 이 부문에 있어서 정부 기능, 그리고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를 새로이 설정하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 될 것이다.

우리 경제에 있어서 거대한 저생산성 부문의 실체를 이루고 있는 서비스 부문으로서는 위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부문의 획기적인 구조조정 없이 한국경제의 희망출구가 찾아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은 물론 당면한 일자리 창출, 나아가 양극화의 해소도 어쩌면 이 부문의 구조 조정의 성공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하기에 따라서는 한·미 FTA는 우리 스스로의 자각과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구조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외부로부터의 유효한 충격이 될 것이다. 일본의 예는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될 것이다.

플러스로 나온 협정 결과의 추정 손익계산서는이 협정의 성패를 가름할 국민설득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협정의 본질은 상호 시장의 추가 개방에 따른 이해득실의 계산에 있지 않다. 또 국민설득도 이런 식 설명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이 협정이 가져 올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의 불가피성과 변화가 초래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의 향상 가능성, 그리고 이 과정을 감내해 갈 수 있는 우리 경제의 체질에 대해 주목하고 이에 대한 인식과 믿음을 국가사회의 지도자들은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유하여야만 이 협정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선진국 줄에 분명하게 서야 한다.”

한·미 FTA는 우리가 이 줄에 분명하게 선다는 의지의 표현이어야 한다.

중앙일보 2010년 2월 8일

필자는 사업자들의 공동행위가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나 정부 주도 또는 행정지도에서 기인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것을 시장경제 하에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사업자들이 가격·수량·판매조건·판매지역 등의 결정 과정에서 서로 짜고 경쟁을 배제하는 공동행위는 경쟁시장의 형성과 유지에 결정적 위해를 가하는 대표적인 경쟁 제한 행위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경쟁법을 가진 모든 나라가 이의 위반에 대해 매우 엄격하다. 미국은 체형까지 가한다.

그런데 이 공동행위가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스스로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면 놀랄 일이다. 우리 정부의 각 부처는 대부분 많은 각종 사업자 단체를 거느리고 있고 이들이 정부 정책의 통로 구실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통해 사실상 광범위한 관·민 통합형 공동행위가 눈에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관료들은 일반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 인식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을 소속 부처 본연의 기능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정부의 행정지도를 계기로 또는 이를 빙자하여 사업자 간에 공

동행위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행정지도는 원래 행정기관이 법적 근거는 없으나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사실행위다. 정부가 경제성장을 주도하던 과거에는 행정의 각 분야에 있어서 행정지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정부와 국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법률 행위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던 때도 있었다. 경제 운용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많이 달라진 지금도 여전히 행정지도는 각급 정부기관에 의해 매우 선호되고 있는 행정 작용의 한 형태로 남아 있다.

행정절차법이 규정하는 순수한 의미의 행정지도는 강제성이 없어 요청받은 자는 자신의 의견 개진을 통해 행정기관과 의견 조정이 가능하고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충돌이나 대립 없이 자발적인 국민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입법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고, 법으로 모든 사항을 규율할 수는 없는 법과 현실, 정부와 시장 사이의 간극을 메워 주는 윤활유와 같은 기능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행정지도가 상당한 강제성을 수반하거나 특히 규제 산업을 중심으로 사업자들에게 일정한 경제활동을 하거나 또는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는 데 있다.

특히 정부의 행정지도가 있었다는 것을 빌미로 사업자들이 별도의 합의를 통해 가격 등에 대한 담합을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설

사 선의의 목적으로 시작된 행정지도라도 시장에서 왜곡돼 경쟁 원리가 혐오하는 악성의 공동행위로 발전되는 것이다. 최근 10년간 공정거래법 집행으로 처벌을 받은 공동행위 중 20여 건의 주요한 사건이 이런 유형의 공동행위라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경쟁법 집행이 강화되면서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공동행위를 이유로 천문학적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우리 정부의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사실이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장경제 하에서는 시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해서는 안 될 일은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라면 불필요한 정부 규제와 더불어 정부 주도의 공동행위와 공동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행정지도도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인식해야 한다. 경쟁당국의 기능이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범정부 차원의 인식과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의 ‘시장’과 ‘경쟁’의 유효성에 대한 믿음의 토대 위에서만 우리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은 가능하다.

V. 대북 경제협력 정책

- 북한 '시스템 실패'의 비극
- '생즉사 사즉생(生即死 死即生)'의 개성공단

한경 다산칼럼 2004년 5월 14일

2004년 4월 22일 발생한 북한의 용천 열차사고는 북한의 ‘시스템의 실패’라고 진단하는 한편으로 참여정부의 대북 인식과 대응 방향을 비판하였다. 사후 이 사고가 김정일 암살 음모로 이루어졌다는 추측도 나온 바 있다.

용천 열차 폭발사고와 일련의 수습과정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우선 무수한 인명과 북한 기준으로는 엄청난 물질적 손실을 가져온 사고의 비극성과 사고 이후 복구와 구호 과정에서 다시 드러나는 북한의 참담한 실정이 주목을 끈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기피대상인 북한에 대해 구호와 치료, 시설의 복구를 위해 모든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현상도 예사로운 일은 아니다.

특히 우리 남한으로부터의 지원은 그 신속성, 규모, 열성에서 그간 우리 스스로 경험했던 그 어떤 재해나 사고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지원을 능가한다고 생각한다.

북한 당국이 이 엄청난 사고의 원인과 배경을 조사해서 밝히고 그 책임을 추궁하는 노력을 전연 보이지 않는 점이나 사고 이후 이와 관련한 북한 당국의 자세나 남쪽에 대한 태도는 상식으로는 이해되기 어렵다. 사고 직후 이 엄청난 국가적 비극의 현장을 옆에 둔 채 북한 당국은 조선 인민군 창건 72돌 축하행사를 예정대로 성대하게 거행

했다. 또 북한 당국은 일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남쪽으로부터 지원될 구호 물품과 장비와 관련해 너무나 당연한 육로 수송을 거부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해상 수송을 고집했다. 세계 각국으로 도움의 손길을 받고 있는 동안 북한의 최고 국가 지도자가 사고 현장에 나타나 피해 상황을 살피고 피해자들을 위무하는 장면도 없다.

필자는 이런 모든 불가사의(不可思議)의 중심에 북한의 ‘시스템의 실패’가 자리잡고 있다고 믿는다. 철도를 경영한 경험이 있는 필자에게는 사고 직전 그 지점을 통과한 북한 최고지도자의 방중(訪中) 귀환 특별열차를 위해 열차시간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검토돼야 할 모든 요소들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 사고의 원인일 것이라는 일부의 추정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바로 북한체제의 절대성·경직성·비논리성이 갖는 이런 한계, 이에서 초래될 수 있는 엄청난 비극의 개연성은 시스템적 시각에서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사고 이후 북한 스스로나 대남관계에서 보인 납득하기 어려운 일련의 자세나 태도도 이 ‘시스템의 실패’의 연장선 상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일 것이다.

정말 심각하고 구조적이며 지속적으로 초래되고 있는 북한의 비극은 북한경제의 실상이다.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남쪽보다 오히려 높았던 1인당 국민소득을 가졌던 북한경제가 약 한 세기 동안에 남쪽의 약 30분의 1인 세계 최빈국 수준으로 전락하고 이로부터 그 국민의 대부분이 아사와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게 된 경제의 추락도 이 ‘시스

템의 실패’로써만 설명 가능하다.

북한경제의 침체는 일시적 현상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결과가 아니고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일반적인 비효율성에다 북한이 스스로 ‘우리 식’이라고 부르는 북한 식 국가와 경제운용 방식이 더해져서 초래되는 구조적이고 추세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 남쪽의 인식과 대응 방향이다. 북한 당국이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밝히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또 납득할 수 없는 자세나 어떤 대남 태도를 보이건 이에 대한 비판도 없고 대북 지원 열기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식의 조건 없는 대북지원 방식이 과연 정상인지, 또 장기적으로 북한 주민을 빌트인(built-in)된 구조적 비극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향으로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하고 균형 있는 분석과 토론도 우리 사회에서 실종돼 버렸다.

‘시스템의 실패’의 교정 없이는 북한의 현 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없고 나아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남북관계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시간은 걸리더라도 또 완곡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북한의 이 실패의 교정을 조금이라도 유도하는 방향이 대북정책의 기초가 돼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현실은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우리도 북한과 같이 ‘시스템의 실패’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국경제 2010년 6월 18일

천안함 사태의 수습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소위 '5.24 성명'으로 5대 대북 제재방침을 발표했다. 필자는 여기에 개성공단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보고 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북협력의 기본자세에 대해 언급하였다.

천안함 사태 이후 5.24 선언에 천명된 대북한 제재내용 중 북한이 실질적으로 가장 아파할 것은 아마도 경제협력의 중단일 것이다. 그런데 교역의 중단과는 달리 경제협력의 핵심인 개성공단사업은 우리 정부 스스로도 분명한 입장을 정립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터에 오히려 북쪽이 폐쇄압박을 하고 있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이 벌어지고 있다.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고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면 일관성 있는 대북자세를 견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필자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사업 등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상징적인 경제협력 사업들을 보면서 “국가가 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진다. 말 할 것도 없이 국민의 안전을 내외의 위험과 위협에서 보호하는 것이다. 두 사업은 당초부터 문제가 생겨도 어떤 대안도 구제수단도 우리 측에게는 없고 북한 당국의 전적인 자의(恣意)에 우리 국민과 기업의安危를 맡겨 놓는 구조

를 갖고 출발했다. 금번 사태 이전에 이미 금강산과 개성공단에서 벌어진 무수한 터무니없는 일들, 그리고 금번 사태 이후 북한의 태도는 그들의 속성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대북 경제협력이란 명분과 실리가 국민과 기업의 안위를 지켜야 할 국가의 기본적인 직무를 대신해 줄 만한 것일까? 나라가 기본직무를 유기(遺棄)해 온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측이 겪고 있는 고민은 주로 이전 두 정부에 의한 것이지만 우리 측이 스스로 초래한 측면이 크다. 이에 대한 반성이 없이 단기적이거나 경제적 시각만을 가지고 이 부분만은 적당히 봉합하고 또 저들의 억지를 수용하여 전체 남북관계를 재정립하는 데서 예외로 하려고 한다면 또 다른 더 큰 실패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문제가 이렇다면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데서 개성공단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개성공단에서까지도 철수할 수 있다는 결단을 분명히 하고 이를 행동으로 보여 주지 않으면 어떤 대북관계 재정립 의지도 북측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 손실은 회복 가능하지만 남북관계의 원칙과 기본을 다시 세우려는 나라의 의지가 입는 손상은 회복 불가능하다.

이런 우리의 각오와 자세가 분명하면 단언컨대 북한의 자세도 달라질 것이다. 북쪽으로서도 현재로서만 약 4만 명의 일 자리와 한 해에 포기해야 할 약 4천만 달러의 인건비가 그들에게는 결코 적은 돈

이 아니기 때문이다. 양측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우리 남쪽이 입을 손실에 비해 북한이 입을 손실이 훨씬 크고 진행 중인 교역의 중단에 더해 북한경제에 치명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협상의 주도권은 당연히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생즉사 사즉생(生即死 死即生), 살릴려고 하면 죽고 죽일 각오까지도 하면 오히려 살릴 수 있는 것이 개성공단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전 휴전회담의 초대 연합군 측 수석대표였던 터너 조이 제독이 그의 저서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협상하는가』에서 설파한 바와도 같다.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극도로 악화돼 가는 남북관계는 4세기경 로마의 전략가 플라비우스 베케티우스의 유명한 경구(警句)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를 생각하게 한다. 평화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전쟁에 대한 준비, 전쟁을 치를 각오 없이 지켜진 평화 없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2차 대전 직전 영국의 챔버린 수상이 히틀러와의 평화협약을 국민들에게 흔들며 국민을 고무시켰지만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으로 평화학은 곧 전쟁학이다.

VI. 산업정책

- 중소기업을 세계시장으로
- 서비스업, 한국경제 '희망출구'로
- 글로벌 중소기업을 꿈꾸며
- 벤처 잇단 좌초...신화에서 깨어나자
- 산업·경쟁 정책의 컨버전스
- 중소기업, 과연 위기인가?
- 이제는 '기업가 정신'이다

필자는 중소기업연구원장 재직 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문제 해결 방안 모색에 연구 역량을 모았다. 결국 중소기업의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려면 그 실마리를 국제화 쪽에서 찾아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고 이 점을 강조하여 쓴 글이다.

중소기업 문제 해결 없이 한국경제의 미래가 없다는 데에 우리 사회의 공통인식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 최근에 와서는 중소기업과의 적절한 협력관계 내지 역할의 분담이 없이는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을 하는 대기업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중소기업 문제는 바로 한국경제 문제 그 자체이다.

중소기업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문제로 귀착된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무수한 현안들, 예컨대 판로의 한계, 금융의 어려움, 대기업과의 문제, 환율 등 대외변수에 대한 적응능력, 인력 확보 상의 애로 등 모든 문제를 파고들어 가면 결국 해당 중소기업의 경쟁력 문제에 봉착한다.

우리 중소기업은 국민경제 상 높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취약한 경쟁력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 중소기업의 이 같은 취약성이 한국 중소기업의 태생적 한계라고 보고 싶지는 않다. 70년대 이후

국제기능올림픽의 금메달을 휩쓸 정도로 우리의 기능 인력은 우수하다. 한때 우리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일본보다도 더 개인주의적인 특성은 미래에 더욱 심화될 IT 경제 하에서는 오히려 큰 경쟁력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중소기업 경쟁력의 취약성은 태생적 한계라기보다는 바로 중소기업의 사업 환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소수 대기업에 자원을 몰아줘 키우다 보니 비대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약한 중소기업 구조가 만들어졌다. 자본과 인력이 대기업에 몰리도록 돼있는 여건에서 중소기업의 생존은 대기업에 매일 수밖에 없다. 막강한 노조를 안고 글로벌 시장에서 가혹한 경쟁을 하는 대기업으로서는 이윤을 창조하기 위한 손쉬운 일이 중간재 비용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은 막대한 이윤을 내고 그 이윤으로 우수한 인재와 자본을 몰아가고 있으며, 대부분 중소기업은 박한 이윤에 자본과 인재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의 취약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왔다.

이런 여건에서 그간 정부는 그들에 대해 재정자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정거래 제도로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노력을 해왔다. 그렇지만 각종 지원책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궁극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고, 중소기업으로서 대기업에 생사가 매인 터에 불리한 거래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소기

업 문제는 영원한 미해결의 과제인 것같이 보인다.

이제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문제를 구조적인 데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생기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경쟁구조 내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만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중소기업의 국제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세계시장 환경에 더 많이 접근하도록 촉진하는 동시에, 싫건 좋건 이런 환경에 더욱 더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기존시장(Red Ocean)에서부터 무한한 가능성의 새로운 세계시장(Blue Ocean)으로 눈을 돌리도록 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원천적으로 길러질 것이다.

멀고 험난한 길이지만 우리 중소기업의 국제화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면 과제가 돼야 한다. 한편으로는 이미 피할 수 없는 대세이기도 하다. 최근 대기업을 능가할 정도의 혁신적 중소기업의 출현을 드물지 않게 보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 성공한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치열한 국제경쟁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키워 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중소기업을 세계시장으로 이끌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할 때다.

영세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대형할인점 규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을 때, 규제보다는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경쟁시장에서 규모의 경제와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대·중소 서비스업 간 업무 영역이 조정되고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향상돼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점포 설립을 규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기업의 활동 시간과 공간을 제한하고 발을 묶어도 국내 서비스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또 입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의도대로 영세 중소 서비스업의 생존이 보장될까?

대체로 선진국은 국민소득과 고용의 서비스산업 의존도가 이미 70% 수준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는 거의 모두 서비스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서비스 산업이 고용의 65%를, 국민소득의 55% 정도를 차지하는 데 그친다. 지난 5월 OECD 각료회의가 채택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이탈리아·스페인·폴란드와 함께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미흡한 국가로 지목됐다. 규모가 영세하고 생산성이 낮은 게 우리 서비스산업의 실상이다. 우리 경제의 한계다.

그러나 이 같은 서비스업이 경쟁력 있는 부문으로 거듭날 수만 있

다면 한국경제 특히 중소기업에 희망의 출구가 될 것이다. 즉 선진국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육성이 관건이다.

서비스산업 경쟁력은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가 핵심이다. 우선 문화적 감각과 지식기반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이 출발이다. 최근 들어서는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보기술(IT)이 강조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서비스 강국의 기본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저생산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뭘까. 앞서 언급한 OECD 각료회의는 서비스산업 성장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가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이라고 견해를 모았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세 서비스산업을 살리기 위해 대기업을 규제하는 방식은 문제의 해답이 아니다.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 시장을 키워 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정부 개입이 자제되는 가운데 시장원리를 통해 전통서비스업에서도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사례는 국제적으로는 흔하다. 최근 유럽의 유통시장에서 급부상한 이른바 ‘초(超)할인점(hard discounters)’인 Aldi사가 그 예다. 이 업체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미국·호주 등에서 5천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영업시간과 주차공간을 줄이고, 다수의 소규모 매장을 주거지역에 밀착해 개설하고 있다. 특히 품목별로 소수의 제품만을 취급하면서 셀프서비스를 가미해 파격적으로 싼 값에 팔아 기존 대형 할인점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원칙을 중시하고 시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 모든 서비스 사업자를 다 끌고 가겠다는 식의 발상을 버려야 한다. 서비스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와 전문화를 위한 구조조정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승자 기업과 패자 기업으로 갈려질 수밖에 없다. 결국 패자기업의 인력은 성장 기업에서 추가로 창출된 유망한 일자리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

서비스산업이 한국경제의 희망 출구가 될 것인지, ‘제2의 농업’으로 전략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 서비스산업에서 한국경제의 성장 돌파구가 마련되고 중소기업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토론과 연구가 절실한 때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현황과 나라별 비교를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가 중소기업 경쟁력 문제의 해결방향을 인식하고 글로벌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글이다.

최근 중소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우리 중소기업의 문제는 한국경제의 문제이며 중소기업 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국경제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현재 중소기업들이 직면해 있는 여러 문제들, 예컨대 판로의 한계, 금융조달의 어려움, 대기업과의 문제, 환율·유가 등 대외변수에 대한 적응능력, 인력 확보 상의 애로 등 모든 문제는 본질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대기업들은 자의든 타의든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통해 몸집을 줄이고 대외여건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 왔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 및 경쟁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취약한 경쟁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성장원천(핵심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채 범용기술에 의존한 주력상품 생산

및 내수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수준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2004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에 따르면, 세계 최초 개발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8.8%에 불과하고, 국내 및 신흥공업국에 보편화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43.3%로 나타났다. 또한 보유제품 기술은 제품의 생명주기상 도입기 제품기술이 12.1%, 성장기 39.2%, 성숙기 36.3%, 쇠퇴기 12.5%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개발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처럼 우리 중소기업들은 차별화된 독자 기술을 확보하지 못해 해외시장 진출은 어렵게 되고 내수시장에 집중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내수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해 오던 여러 제도들을 정비한 결과, 내수시장의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졌다. 이로 인해 과당경쟁이 발생하여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날로 악화되는 추세에 있다.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율이 IMF 경제위기 이전에는 6%대를 기록하였으나 2003년에는 4.6%로 하락하였다. 여기에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부진과 투자부진이 겹치면서 중소기업이 최악의 경영난에 내몰리게 되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지금처럼 내수시장에 머물러서는 희망이 없다. 세계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중소기업의 취약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제경쟁에 더 많이 노출되어서 야성을 키워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중소기업들 중에는 일찍이 세계시장을 겨냥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글로벌 중소기업들이 많다. 글로벌 중소

기업들은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른바 블록버스터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세계적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직은 이러한 글로벌 중소기업들이 소수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일본은 부품·소재 산업 등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 싱가포르 역시 2010년까지 자국 중소기업의 1/15을 대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소기업 육성 10개년 계획(SME 21)’을 추진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도 글로벌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2007년까지 3만 개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중소기업들이 기술역량이나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3만개 혁신형 중소기업 중에서 약 10%는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키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중소기업은 정부의 정책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생산 혹은 모방할 수 없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해야 하며,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제품생산에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와 기업 내 모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의 열린 사고가 전제되어야 한다. 한 우물을 파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갈 수 있는 용기, 기업가 정신이 결합되어야만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중소기업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불굴의 기업가 정신의 회복이 우리 중소기업의 살 길이다.

중앙일보 2005년 10월 29일

2005년 중반 이후 대형 벤처기업들이 분식회계 사건으로 잇달아 좌초하였다. 필자는 이 사건을 두고 벤처기업 주변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내실 있는 벤처기업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최근 로커스, 터보테크 등 1세대 대형 벤처기업들의 연이은 좌초로 올해 들어 간신히 회복세에 접어든 벤처 분위기가 위축되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한때 선망의 대상이던 이들 성공신화 주인공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어렵사리 일으키려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기업가 정신이 또 한번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가 앞선다.

벤처기업이 좌초할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실패 그 자체보다 분식회계다. 로커스, 터보테크뿐만 아니라 2, 3년 전의 새롬기술, 골드뱅크 사건도 분식회계가 문제였다. 벤처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벤처기업의 분식회계로 인한 사고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벤처기업의 분식회계 문제를 단순한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중요한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퇴행성 신드롬으로 인식하고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분식회계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기만하여 이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힐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투자 위축은 물론 나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 이 때문에 국가 신뢰도와 시장경제 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분식회계는 문제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해 있지도 않은 자산이나 매출을 고의로 부풀리거나, 회사 돈이나 자산을 사용(私用) 내지는 횡령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장부를 조작한다. 그리고 한번 저지른 분식은 계속 분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물론 회사와 개인 자신을 구별하지 못하는 벤처기업인 개인의 도덕적 해이나 기업윤리가 문제이고 당사자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회적·제도적 문제 때문에 벤처기업인들이 분식회계의 유혹에 빠져들게 하는 요소에 대해서도 심각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벤처기업의 특성이 고려되어 변칙 플레이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원활한 금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이 작동하고 있는지, 인수합병(M&A)시장이 형성되어 적절한 투자 회수가 가능한지, 벤처기업이나 기술에 대한 금융기관의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벤처 전문경영인과 벤처캐피털리스트가 육성되고 있는지, 건실한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적절한 유인과 함께 시장과 정책당국의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회계감사 등 회계제도 상의 결함은 없는지, 혹시나 정부의 과도한 지원이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요소는 없는지 등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작금의 분식회계로 인한 벤처기업 실패의 근원적인 배경에는 개인·기업·정부 등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아직도 남아 있는 ‘고(高)성장 신화’에 대한 집착이 있다고 생각한다. 벤처사업은 미지의 사업 영역에 도전하는 것이기에 그 속성상 성공 확률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벤처토양이 잘 갖추어진 미국도 벤처기업의 성공률은 5% 수준이다. 실패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공신화에의 집착은 불법을 행해서라도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통념, 이른 시간 내에 많은 벤처기업을 양산하고자 하는 정부의 과욕 등을 불러온다. 이런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벤처기업들로 하여금 분식회계를 해서라도 무리한 성공을 얻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하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야 한다.

벤처산업이야말로 성공에 대한 보상과 실패에 대한 책임이 강하게 작동하는, 즉 시장경제원리가 제대로 작용돼야 할 영역이다. 바로 그것이 건실한 벤처기업 발전의 동인이다. 디지털 지식기반 경제의 선도자이자 혁신주도 경제의 활력소 역할을 할 중소 벤처기업이 무리하게 화려한 성공신화를 만들기보다는 내실 있게 진정 ‘벤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경제주체의 생각을 정리할 때다.

선진국의 경우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립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원인과 양 정책의 컨버전스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에서 특히 글로벌경제 환경 하에서 산업정책의 유용성은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다.

말 할 것도 없이 산업정책의 유효성의 주된 논거는 ‘시장의 실패’다. 여기에 설정된 경제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그리고 격변하는 국제경제 환경,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 국민경제와 기업을 내팽개쳐 놓을 수 없는 정부의 사명이 추가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장경제가 성숙한 국가일수록 산업정책의 여러 수단들이 가져오는 가격체계의 왜곡과 그 결과 초래되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등 소위 ‘정부의 실패’가 지적되고 대안(代案)으로서 경쟁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에 있다.

선진국들에 있어서 이 양 정책방향은 극단적 대립보다 구체적인 경제정책 입안 과정에서 대체로 조화(調和)되고 있는데, 그 비결은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구체적인 정책입안에 있어서 시장분석의 기초가 확립돼 있기 때문이다.

대내외 환경의 변화로 한국경제는 기존의 ‘경제의 운영 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받고 있다. 이는 바로 산업정책의 유용성에 관한 문제 제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쟁점에 대한 충분한 문제의식과 부각,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접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한편으로 종전의 산업정책은 계속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질적 내용으로 자리잡고 있는 반면 산업정책적 제(諸) 수단에 대해 경쟁정책적 관점에서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기업과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정책 입안 현실이다.

각 분야의 산업정책 관장 부서들은 그간 변화된 국내의 시장 구조, 이에 대응하는 기업역량의 엄청난 변화, 소비자 의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원과 규제, 가격 기구에의 간여, 정부 주도 하의 사업자단체를 통한 정부 의지의 관철이라는 종전의 산업정책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채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한계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경쟁당국 역시 그간의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시장분석 능력의 취약, 시장의 핵심 요소인 산업과 기업 그리고 소비자 문제에 대한 불충분한 인식, 나아가 현실적 대안제시 기능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어 관련 산업정책과 조화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의 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경제정책이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주요 이유의 하나도 여기에 있다.

시장구조와 관련 산업의 문제점과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정부 역할의 모색이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양면에서 동시에 추구되지 않는

한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특정 산업, 품목과 관련된 시장의 구조적 성격을 공급 측면에서는 경쟁성을 중심으로, 수요 측면에서는 수요자 선택원리를 기준으로 엄밀하게 분석, 규명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시장구조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산업과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경쟁촉진적 수단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는 과정은 경쟁정책의 주 관심대상이 되고 시장의 불완전성의 보완을 산업과 기업정책의 역할과 가능성에서 찾는 과정은 산업정책의 주 영역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은 두 가지 정책 영역의 자연스러운 컨버전스로 이어질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노동·복지 등 소위 비교역재(非交易財) 부분도 같은 문제인식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가는 데에는 우리 정부의 조직원리가 큰 애로다. 우리 정부의 조직은 아직도 기능별 역할보다는 산업별·품목별 위주의 조직원리로 편성되어 있고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있어 이런 방향으로의 전환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경제가 글로벌경제와 지식산업화의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시장분석 기법의 축적과 경제행정 조직의 재편을 바탕으로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컨버전스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6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에 따른 중소기업 위기론이 불거질 때 쓴 글이다. 경쟁력 취약이 중소기업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기의 중소기업’ 거의 매일 언론의 경제면에서 다뤄지는 내용이다.

과연 우리 중소기업들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90년대 이후 중소기업의 영세화 추세가 끝없이 진행되고 있다. 다산다사(多産多死)형 창업활동과 창업기업의 성장 정체가 주요인이다.

계속 저하돼 온 노동생산성은 이제 대기업의 1/3 수준으로 추락하여 대기업과의 간격은 확대일로에 있다. 대기업의 2/3 수준에 그치는 임금 수준으로, 구직난을 겪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체로 심각한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직접금융시장에는 거의 접근하지 못한 채 간접금융 즉 은행권에 편중된 자금 조달원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기업 자체의 순수 신용에 의한 자금 조달은 10%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수요는 여전히 살아나지 않는 반면 해외상품의 유입은 증대되어 내수시장의 위축은 여전하여 중소기업의 판로확보가 심각하다.

최근 중국 등은 가공무역 금지 품목을 확대하고 공해산업과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해외에 진출해 있는 중소기업 상당수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 한·미 FTA를 비롯한 각 지역 간 FTA 타결의 확대는 우리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과거와 다른 적극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게 하고 있고 그러지 못하면 생존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도록 대외경제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는 대내외 환경과 관련지표들이 열거됐지만 이들은 모두 우리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여러 가지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말할 필요 없이 중소기업 문제는 곧 한국경제의 문제다. 중소기업 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국경제의 장래가 있을 수 없고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문제해결 없이 중소기업 문제만 해결해 나갈 방법도 없다.

이 양자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경쟁력의 취약이다. 어떤 경우에도 위기의 본질이나 성격을 정확히 알면 어떻게든지 극복해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법이다.

만약 우리 중소기업들 스스로와 각종 중소기업 단체들 그리고 관련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이러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헤쳐 갈 길이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물론 중요하다. 적절한 기업 환경의 조성과 지원정책 모두 절대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는 2004년 소위 7.7 이후 경쟁력 향상 위주의 중소기업 정책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우리 중소기업의 본질적 문제를 전부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인 스스로의 기업가 정신이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간 국내외 경쟁자의 행동과 수요자의 선택이라는 시장의 시그널에 얼마나 귀를 기울여 왔는지, 혹시 이보다도 정부의 시그널에 더욱 귀를 기울여 온 것은 아닌지, 우리 중소기업들은 과연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 및 경영 패러다임에 대한 적절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환경의 변화가 바로 내가 영위하는 사업과 바로 직결된다는 투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설사 내수기업이라도 이런 환경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허심탄회하게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기업가 정신만 충분히 작동한다면 우리 중소기업들은 지금 일견 위기적 요소로 보이는 많은 것들을 오히려 도전의 대상으로 그리고 기회의 요인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혁명적 발전으로 흔히 중소기업의 최대의 약점이라고 보는 기업 규모의 대소에 따르는 정보처리상 기술적 갭이 소멸되고 있다.

글로벌한 시각에서 볼 때 시장과 산업구조가 완제품 위주에서 부품 위주로 그 큰 흐름이 변화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바탕으로 지금 세계는 새롭게 조명되는 중소기업의 가능성과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런 가능성과 역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도전하는 중소기업인들 스스로의 자세, 정부의 정책, 대기업의 인식과 협조, 일반국민들의 이해 정도에 달려 있다.

한국경제와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을 다 같이 깊이 생각해야 할 때다.

2007년 호주에서 열린 국제중소기업협의회(ICSB) 연차총회에 다녀온 후 쓴 글이다. 취약한 경쟁력이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이라고 보았고, 중소기업 정책의 주 대상을 기업 또는 산업으로부터 기업인 또는 기업가 정신 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중소기업 문제라는 데 이의를 갖는 사람은 없다.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은 정부도 없었다. 그래서 역대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와 결과적으로 우리는 중소기업 정책과 지원 측면에서 가장 완비(完備)된 제도를 가진 나라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문제는 여전한 미해결의 과제다. 우리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거나 축소되는 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의 배경과 본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정확한 인식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방법은 있게 마련이다.

이 전제가 적절하다면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출발이 되는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식을 우리 사회가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은 우리 중소기업 대부분이 경쟁력의 문제에 구조적으로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의 본질이 이렇다면 문제의 해결방향도 자명(自明)하다.

첫째는, 경쟁력을 배양(培養)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고 다음은 중소기업인 스스로의 정신과 능력의 배양이다. 전자는 바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의 영역이며, 후자는 우리 중소기업가들의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의 문제다.

중소기업 문제가 진정한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두 분야 모두에 있어 우리 사회가 중요한 인식의 오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정부가 중소기업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정부는 스스로 가진 직접적인 지원과 보호의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를 달성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경쟁력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는 평범한 진리가 잊혀지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바람직하고 가능한 시장적 접근방법에 대한 모색은 배제되거나 소홀히 되고 있다. 우리 중소기업 정책이 갖는 문제점의 핵심이다.

다음은 중소기업인들 스스로가 갖추어야 할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없이 중소기업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에 있어서는 기업가 정신이 중소기업 문제의 핵심적 논의 주제로 자리잡고 있고 이를 배양하고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소기업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중심에 있다.

필자가 최근 다녀 온 ‘국제중소기업협의회(ICSB)’의 연차 총회를 매년 관통하는 기본적인 논의 주제도 바로 이 ‘기업가 정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의 문제의 해결방향을 찾는 과정에서 기업가 정신이 갖는 의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고려가 근본적으로 부족하다. 더욱이 과거와 다른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필요한 기업가 정신으로 보다 심화, 발전돼 가야 할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한 인식은 크게 미흡하다고 본다.

가열되는 경쟁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어느 것도 우리 중소기업인들의 능력과 기업가 정신의 배양이 그 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의 주 대상을 ‘기업 또는 산업’으로부터 ‘기업인 또는 기업가 정신’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 전체가 기업가 정신에 가치를 두는 분위기로 탈바꿈되고 전 사회가 ‘기업가 정신의 학습장’으로 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기업가 정신의 체계적 배양을 위해 특별한 교육시스템에 대한 구상도 필요하다. 기업가 정신에 대한 문제 인식을 정부와 기업인들을 비롯한 온 사회가 공유해야만 성취 가능한 일이다.

늦어도 10년 이내에 세계 일류의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의 실현 여부에 한국경제와 우리 중소기업의 장래가 달려 있다.

VII. 금융정책

- 환율변동 일회일비 말자
- 공자금 조사에 앞서 할 일
- 환율정책에 대한 반성
- 외환보유고는 다다익선?
- 예견된 환율 쇼크
- 금융문제 해법, 규제냐 시장이냐
- '한은 독립'의 허구성

원-달러 환율이 2001년 4월부터 급락하자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에 나섰다. 필자는 환율 변동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부는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환율정책을 운용하라고 촉구하였다.

최근 정부는 대미 환율의 급락을 경제 운용의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시장 개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환율의 변동이 너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여기에 투기적 요소까지 상승 작용한다면 환율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역할 모 두를 반 시장적이라고 단정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는 생각해야 할 것 같다.

먼저, 요즘과 같은 환율 급변에 있어서 투기적 요소를 너무 과장하지 말았으면 한다. 혹시나 수출 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환율 하락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책목표에 지나치게 집착해, 환율에 대한 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전망을 기초로 한 외환 수급조차도 투기적인 수급으로 단정하고 대응한다면 오히려 수급 불안을 촉진할 뿐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정부나 언론 그리고 우리 국민 대다수가 현재의 환율이 절상되는 이 상황을 우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

고 정부가 환율시장에 개입해서라도 지금의 추세를 돌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이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우리 돈의 대외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종합적으로 보아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국제수지 상태가 흑자이거나, 종합적인 경제상황이 비교 대상 국가에 비해 호전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단기적으로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경제라면 절상된 환율 수준에서 새로운 균형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원화의 절상 현상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어쩌면 훨씬 더 일찍 서서히 왔어야 했다. 어떤 이유로 지체되어 왔기 때문에 최근 들어 급등하게 된 것이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98년 이후 우리 정부가 환율의 움직임을 다른 정책적 고려 없이 대체로 시장의 수급원리에 맡기는 한편 필요 이상의 많은 외환보유액을 갖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환율은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절상된 상태에 와 있을 것이다.

필자는 현 정부가 외환위기를 극복한 주요한 증거의 하나로 제시하는 충분한 외환보유액의 확보나 99년 이후 국제수지의 흑자에 뒷받침된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의 상당 부분이 어쩌면 원화 가치의 절상으로 얻을 수 있었던 많은 장점을 희생하고 얻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시장원리에 충실한 경제운용, 기업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 경쟁력의 근원적인 향상, 적절한 통화 공급으로 인한 물가수준의 보

다 안정적인 관리 등을 그 대가로 잃어버렸다고 본다.

기업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정부 당국자들과 심지어 경제학자들 중에도 환율에 관한 한 매우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본다. 국제수지 적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원리에 의해 당연히 환율이 절하되어야 국제수지의 균형이 달성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99년 이후 국제수지의 흑자가 몇 년씩 계속되면서도 환율의 절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않은 것이다.

97년 외환위기가 오기 직전의 외환시장은 외환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외환시장은 환율의 가격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최악의 마비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이러한 시장상황을 도외시하고 당시 환율을 더욱 절하해 외환수요를 조절하지 않아 외환 부족을 초래했다고 해서 당시 환율정책은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99년 이후 계속되어 온 국제수지의 흑자현상은 당연히 우리 원화의 절상요인이 되어 왔다. 이를 적절하게 수용해 갈 수 있는 시장조건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다른 정책목표를 앞세워 환율정책을 시장원리에 거슬러 운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문제점은 제대로 제기되지도 않았다. 이런 식의 모순된 환율관이 이번 환율 문제 대응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보여준 성장과 국제수지의 흑자가 경쟁력의 본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구조적 변화에 뒷받침된 것이었다

면, 이제 더 이상 거시지표의 단기적인 변동과 그것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일희일비할 필요 없이 일관성 있게 경제를 운용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기업들은 상황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적응할 태세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 정부가 더 초조해 하고 단기적인 시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회는 2002년 9월 2일 공적자금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였다. 필자는 이에 대해 위기극복 과정에서의 비용 규모, 정책수단과 조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더불어 위기의 본질, 위기의 배경과 원인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야 간에 오랫동안 논란이 돼 온 공적자금 국회조사특위 활동이 시작됐다. ‘사상 최악’이라는 태풍 피해 추계치가 5조 원대인 데 비해, 직·간접적으로 국민부담과 관련 있는 자금이 무려 156조원이나 투입됐으니, 국회가 따져야 할 소재로 이 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없다.

천문학적 규모가 그러하고, 끊임없이 제기돼 온 자금운영의 난맥상, 비리나 유출 가능성, 회수불능 부분에 대한 국민부담 등 모두 국회가 관심과 흥미를 갖기에 충분하다. 이제 특위활동이 시작됐으니 사소한 문제 제기나 비리 적발에 그치지 않고, 공적자금 조성 규모의 적절성과 사용의 효율성을 밝히는 본래의 목적에 최소한이라도 부합되는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필자는 벌써부터 이번 특위활동이 별로 기대할 게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갖고 있다. 문제에 대한 인식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이 잘못 됐고, 여·야간 동상이몽(同床異夢)의 정치적 동기에 의해 조사활동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자금은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위기극복 과정에서 드러난 금융과 기업의 부실을 떨어내기 위한 비용으로 지불된 것이다. 따라서 이 비용의 규모가 적절했는지,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는, 이 비용을 써서 하려고 했던 위기극복 과정이 적절했는지, 또 이를 위해 채택한 정책 수단과 조치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떠나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정책방향이나 정책수단들은 그에 앞서 우리가 맞았던 97년 외환위기의 본질, 그리고 사태 발생의 배경과 원인이 종합적으로 밝혀지지 않으면 그 적절성 여부가 평가될 수 없다.

그러므로 공적자금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있어야 할 이 일련의 분석과정의 하나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 이상의 수순에 따라 본질적이고 선행돼야 할 문제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바탕 위에서 이 조사가 진행돼야만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적 측면에서 본 97년 위기의 본질은, 오랫동안 축적돼 왔으나 그 상당부분이 잠복돼 온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부실이 국제 금융사회에 노출되면서 신뢰를 상실해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금융시장이 시장답게 작동되지 못하고 우리 금융산업이 산업으로서의 독자성과 능률성을 갖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의 역할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금융 구조조정 성공 여부는,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금융시장으로 변모했는지, 그리고 금융산업이 과연 스스로 위험부담의 주체가 돼 금융수요에 대응하고 시장경제를 주도하는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으

로 변화됐는지 여부로 판별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시장에 대해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은 절대로 안하는 정부로 바뀌었는지도 성공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공적자금 사용의 타당성이나 적절성도 이러한 기준 하에서 분석돼야 한다.

현 정부는 집권 이전 정권인수 준비를 할 때부터 외환위기의 원인을 밝히는 작업을 했지만,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 이후 위기의 극복과정이 제대로 된 길을 걸을 수 없었다고 본다.

공적자금 조사에 보다 큰 열의를 갖고 있는 야당도 현 정부가 범한 잘못을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금사용 과정의 비리나 의혹을 밝히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중요하겠지만, 현 정부 집권 기간에 이를 충분히 밝히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여당이 현 정부 집권기간 내에 이 조사활동을 끝내고 싶어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자명하다.

차기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에도 우리의 금융시장이 시장답게 작동하지 못하고, 금융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재편되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장래는 비관적이다.

따라서 야당이 집권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지금은 공적자금 조사 그 자체보다, 이 자금을 사용해 추진해 온 금융 구조조정 노력으로 변화돼 온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의 현 주소 및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 역할의 참 모습을 확인하고, 이로부터 다음 정부의 금융정책 입안을 위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1150~1250원대 수준에서 움직이고 대외적으로 원화절상 압력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쓴 글이다. 필자는 환율운용은 정책적 의도보다 시장원리에 따라 경기중립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대내균형보다 대외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환율의 하락(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원화의 절상)을 요구하는 미국과 EU의 압력이 현실화되고 우리 상품 대부분의 수출경쟁력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우리 경제는 맞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차제에 환율 문제의 복잡성 그리고 환율이 우리 경제와 갖는 관계를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그간의 우리의 환율정책이나 환율 문제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냉정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경제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환율정책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implication)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미국 등의 절상압력에 적절하게 대응하려면, 그들이 주장하는 환율 수준이 시장원리를 반영하여 결정되는 균형수준 즉 단기적으로 시장에서의 외환의 수급사정을 반영하고 장기적으로는 비교대상 화폐의 구매력 평가를 반영하는 수준과 괴리된다는 점을 지적해야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의 압력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의 환율 수준이 이런 관점에서 보는 균형적인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환율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간 우리 정부가 취한 관련 정책이 과연 적정했는지에 대한 솔직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

필자는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우리의 환율 수준은 주로 두 가지 정책적 고려로 대체로 균형적인 수준보다는 상당히 절하된 상태에서 운용되어 왔다고 보고 있다. 그 하나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상품의 국제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의 유지를 위한 정책적 고려이며 다른 하나는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고를 확충하려는 정책방향이다.

98년 이후 계속되어 온 큰 규모의 경상 수지의 흑자는 당연히 우리 원화의 절상요인이다. 외환위기 이전과는 달리 이를 적절하게 수용해 갈 수 있는 시장조건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의 인위적 유지를 위해 환율정책을 시장원리에 역행해서 운용해 왔다고 본다.

또 97년의 외환위기는 달러 부족이란 현상으로 표면화되었을 뿐 그 근본 원인은 우리 경제의 축적된 구조적 문제점의 노출과 이에 따른 국제금융사회의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의 상실이었다. 그런데도 위기의 본질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결여됨으로써 전 정부 때부터 외환보유고의 확충을 위기극복의 중요한 징표로 생각하고 관련 정책을 운용해 왔다.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하여 과도한 외환보유고(9월15일 현재 1380억 달러)는 당연히 환율의 절하 운영을 초래하고 나아가 현재 문제되고

있는 통화, 금리, 부동산 등 관련 부문의 심각한 왜곡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해 온 것이다.

그간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또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학자들이나 연구소의 입을 빌려 수 년 전부터 원화의 절상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하여 왔다. 그런 의미에서 금번의 원화절상 압력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애써 회피하며 구조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하지 않은 우리 정책 당국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정부·기업·언론 나아가 우리 국민 대다수가 환율이 절상되는 상황을 우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현상으로만 받아들이고 정부가 외환시장에 깊이 개입해서라도 이런 추세를 돌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정말 문제다. 이는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우리 돈의 대외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종합적으로 보아서는 바람직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국제수지, 물가를 비롯한 종합적인 경제상황이 비교 대상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인 호조에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 단기적으로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 경쟁력의 근원적 향상, 적절한 통화 공급, 보다 안정된 물가관리, 기업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 등 지금 한국경제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바로 그 것들이다.

또 시장의 힘이 우리 원화 가치의 절상을 요구한다면 이를 거스를 길도 없다. 환율안정을 위한 시장개입의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며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은 경제운영을 제대로 해 본 사람이면 다 안다.

이제부터라도 환율운동은 시장원리에 따라 경기 중립적으로 해야 한다. 변동되는 환율수준에 따라 우리 경제가 새로운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경제의 구조개선 노력에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대외의 존도가 큰 우리 경제는 대외 균형이 대내 균형보다 훨씬 더 중요함을 이번 기회에 깨달아야 한다.

2004년 'OECD 한국경제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쓴 글이다. 필자는 외환위기 이후의 고환율정책과 외환보유고 확대 정책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고, 외환보유고와 환율운동은 시장원리에 따라 경기중립적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최근 '2004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우리 정부에 대해 통화·재정·환율 등 거시정책에 매우 의미 있는 권고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나치게 많은 외환보유고와 이 보유고를 늘리고 원화의 절하운동을 목표로 한 인위적인 환율시장에의 개입 정책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특히 눈길을 끈다.

적어도 외환보유고와 이와 관련된 환율정책에 관한 한 우리 정부의 그간의 정책방향은 OECD의 진단이나 권고와는 전연 다른 길을 걸어왔다. 필자는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우리의 환율 수준은 주로 두 가지 정책적 고려로 대체로 시장의 수급상황을 반영한 균형적인 수준보다는 상당히 절하된 상태에서 운용돼 왔다고 생각한다. 그 하나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상품의 국제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적 고려이며, 다른 하나는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고를 확충하려는 정책방향이다.

98년 이후 계속돼 온 큰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는 당연히 우리 원화

의 절상요인이다. 외환위기 이전과는 달리 이를 적절하게 수용해 갈 수 있는 시장조건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의 인위적 유지를 위해 환율정책을 시장원리에 역행해서 운용해 온 것이다. 외환위기는 달리 부족이란 현상으로 표면화됐을 뿐 그 근본 배경과 원인은 우리 경제의 축적된 구조적 문제점의 노출과 이에 따른 국제금융사회의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 상실이었다. 그런데도 위기의 본질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결여됨으로써 전 정부 때부터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기극복의 중요한 징표인 듯 관련 정책을 운용해 왔다.

결과적으로 OECD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최근 1년 동안에만도 무려 30%나 늘어나 8월 15일 현재 1,707억달러에 달한 외환보유고는 어떻게 봐도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다. 이 확충 과정과 원화의 절하 운영은 통화·금리·부동산 및 수입물가 등 관련 부문에 큰 주름살을 끼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적절하지 않은 환율 수준에 힘입은 가공(架空)의 경쟁력에 근거한 경제와 기업운영이 구조조정 방향에 역행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 배양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등 구조적 왜곡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지 않는지 깊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번 OECD가 기업 외채 700억달러에 달하는 한국경제에서 이런 식의 환율 운용이 기업의 외채상환 부담 증대와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를 초래해 내수부진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은 경청할 만하다.

이상하게도 우리 정부·기업·언론 나아가 우리 국민 대다수는 원화

가치가 절상되는 상황을 우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정부가 외환시장에 깊이 개입해서라도 이런 추세를 돌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모순된 사고가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과 결부될 때에는 더욱 힘을 얻는다. 이런 식의 사고는 정말 문제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우리 돈의 대외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종합적으로 보아서는 바람직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이런 현상은 국제수지, 물가를 비롯한 종합적인 경제상황이 비교 대상국가에 비해 상대적인 호조에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 단기적으로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 경쟁력의 근원적 향상, 적절한 통화 공급, 보다 안정된 물가관리, 기업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 등 지금 한국경제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바로 그것들이다.

또 수급사정을 반영한 시장의 힘이 우리 원화 가치의 절상을 요구한다면 이를 거스를 길도 없다. 환율안정을 위한 시장개입의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며 큰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은 경제운영을 제대로 해본 사람이면 다 느낀다.

다른 거시변수의 운용도 그러하지만 환율운용은 이제부터라도 시장원리에 따라 경기 중립적으로 해야 한다. 변동되는 환율수준에 따라 우리 경제가 새로운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경제의 구조개선 노력에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는 대외균형이 대내 균형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한경 다산칼럼 2004년 11월 24일

원-달러 환율은 2004년 이래 1190~1140원대 수준에서 유지되다 10월 중순부터 급락하기 시작하여 연말에는 1035원까지 떨어졌다. 당시 정부는 역외차액선물환시장(NDF)에 무리하게 개입하여 고환율 정책을 폈는데, 이는 결국 환율이 급락하는 후유증을 유발했다.

미 달러 가치의 급락으로 세계경제가 출렁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경제가 받는 영향이 제일 크다. 우리 스스로의 인식도 그렇고 세계경제의 평가도 그렇다. 이런 결과가 미국의 글로벌 달러 약세 정책 때문에 초래된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 지금 같이 우리 경제와 기업이 받는 급격한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을 미리부터 할 수 없었는지 심각하게 반성해야 제대로 된 극복 방안이 보일 것이다.

최근의 달러에 대한 우리 원화 환율의 절상은 대내외적으로 충분히 예견된 것이다. 2002년부터 감지되기 시작한 글로벌 달러 약세 추세는 작년부터 더욱 뚜렷해졌다. 미국이 막대한 재정과 경상수지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소비 중심의 경제회복을 추구하는 한, 달러 약세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추세에 대응해 다른 나라의 환율 추이와 보조를 같이 함으로써 이에서 오는 영향을 조금이라도 흡수해 가면서 이 영향이 다른 통화와의 관계로가

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대응 노력을 해왔어야 했다. 금년 들어서는 그나마 유지되던 원·엔 동조화(同調化)조차 포기하는 등 이런 방향과는 역행하는 방향으로 환율정책이 운영돼 왔다.

대내적으로도 97년 외환위기로 일시적으로 크게 절하됐던 우리 환율은 98년 이후 계속돼 온 큰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와 이를 반영한 우리의 외환 수급 사정 때문에 지속적으로 절상돼야 할 상황에 놓여져 왔다. 또 구매력 평가에 기반을 둔 실효환율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했다. 외환 수급 측면은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고 기준 시점이나 계산 방식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실효환율 측면에서도 쉽고도 좋은 예가 있다.

97년 10월 29일 외환위기 직전 외환시장이 매우 불안정하고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던 상황에서 당시 무역협회는 수출기업의 재산성이 보장되는 적정 환율 수준을 달러당 917원으로 정부에 제시한 적이 있다. 기관의 성격이나 당시의 외환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무역협회가 구매력 평가 측면에서 적정 수준보다 결코 낮게 제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외환위기를 과연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면 그간 정부는 환율 수준에서 이런 수급 사정을 반영하고 외환위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균형에서 벗어났던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려는 노력을 하면서 환율 수준이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방향에 대해 우리 기업들에 적절한 메시지를 줘 대비하도록 했어야 했다. 위기 이전과는 달리 원화의 이런 절상요인을 적절하게 수용함으로써 외환 수급의 균형 속에서도 적절한 거시경제 운영이 가능한 경제여건과 시장조건이 형성돼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경제와 기업이 미국의 달러가치 하락의 영향을 단기적으로 가장 급격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시장조건과 괴리된 환율운영을 해 온 우리 정부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시와 그린스펀의 말이 엇갈리지만 미국의 달러 약세화 정책은 지속되리라고 본다. 이런 정책 방향에 대해 원칙적인 우려 이외에 유효한 공동노력이나 대응도 금번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합의되지 않았다. 주요국의 대응방향이 주목되나 우리가 이런 추세를 되돌려 놓을 수 없다면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어렵지만 달러당 1,000원 내외의 수준에서 견딜 수 있는 경쟁력을 구조적으로 갖추는 것 이외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길은 없다. 우리 기업들 중 일부는 내부적으로 이미 이런 전제 하에서 경영을 하려고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와 기업 모두 이번 환율 쇼크를 기업과 경제의 경쟁력을 키우는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는 각오를 가져야 산다. 기업 차원에서 환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이 활용돼야 하겠지만 이런 전제 하에서만 유용할 것이다. 새삼 환율방어를 위해 중앙은행의 발권력까지 동원하는 방안을 정부와 중앙은행이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

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엄청난 엔화 절상을 경제와 기업의 구조조정 기회로 삼은 일본의 예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한경 다산칼럼 2010년 1월 29일

미국이 금융위기에 대한 반성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잡혀 가는 과정에서, 금융부문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시장주의적 철학에서 멀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필자의 생각을 담았다.

지난 주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기존의 금융자유화 기조를 크게 바꾸어 1999년 이전 글라스-스티걸법 체제로 사실상 회귀하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기능이 분리되는 결과가 초래될지도 모를 일련의 금융개혁에 관한 구상을 발표했다.

오바마에 의해 볼커의 법칙(Volker Rule)으로 명명된 이 개혁안의 발표 직후 세계시장은 주가가 급락하는 충격을 나타냈고, 이 조치가 금융기능을 위축시키고 미국경제 나아가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하는 논조가 미국 내외에서 나오고 있다.

감독 기능의 강화를 수단으로 금융의 공급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유사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겠다는 이런 식의 개혁방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심각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지금의 금융시장은 과거와 달리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대형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에 금

용전반에 대한 규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둘째,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과 금융거래 기법이 너무 다양해져서 규제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설사 실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획일적 규제가 창의적인 금융상품의 생산이나 거래 기법의 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 경제 전반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위축을 초래하여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크지 않을까?

셋째, 금융위기 해결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가 금융공급자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규제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런 접근법이 문제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것인지?

세 번째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필자의 견해를 밝힌다.

금번 위기를 통해 드러난 금융문제의 본질의 하나는 금융상품에 있어서 심각한 안전성의 문제점과 금융의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시장실패’적 요소다.

역사적으로 보면 비금융상품의 세계에 있어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장경제 국가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상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정보 체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각국은 이제는 상당히 완비된 제도적 장치를 갖추게 되었고 이 제도적 장치에 의해 관련한 대부분의 소비자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금융부문의 제도개선 노력은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극히 부족했다.

그 배경은 문제의 본질을 금융소비자 문제가 아니라 금융공급자에

대한 감독의 문제로 보고 시장적 접근보다 행정규제의 강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그간 주류를 이뤄 왔기 때문이다. 금번 미국의 금융개혁안도 이와 같은 기조에 입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미 채택하고 있는 위해정보보고 제도, 리콜 제도, 위해요소중점관리 제도, 제조물책임 제도, 단체소송, 집단분쟁조정 제도 등 일반상품의 안전성과 정보체계에 있어서 발전된 다양한 소비자보호 장치는 금융상품과 금융시장에도 원용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물론 금융상품과 금융시장의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는 필요할 것이다. 특히 종전의 사전적·행정적 규제 대신 자기책임 원리 하에 시장원리에 의해 안전문제를 해결하려는 철학을 가진 제조물책임 원리의 금융 부문에의 원용 가능성은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할 과제다.

이런 방향에서 심층적인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발전이 이뤄져야만 금융 문제의 본질적 해결에 다가 갈 수 있을 것이다.

‘규제냐, 시장이냐’, 끊임없이 부딪치는 문제다.

어떤 경우에도 규제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은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 큰 규제 비용, 규제로 인한 생산자의 창의성과 시장의 위축, 결과적으로 경제활동의 축소로 귀결되게 마련이다.

미국이 시장주의의 철학에서 멀어질 가능성은 진정 우려의 대상이다.

한경 다산칼럼 2010년 3월 26일

2010년 4월 1일 신임 김종수 한국은행 총재 취임을 앞두고, 꾸준히 제기되는 ‘한은 독립’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다.

신임 김종수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는 취임 전부터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관한 소신과 능력에 대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준금리의 상향 조정이라는 정책 현안이 이 같은 소신과 능력을 테스트하는 대상이 되면서 이미 내정 단계부터 검증이 시작된 셈이다.

우리 사회에서 ‘한국은행의 독립’ 처럼 당연한 명제로 인식되면서도 개념이나 본질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것도 없다. 독립이라도 대체 누구로부터의 독립이란 말인가. 또 독립의 실질 내용이 돼야 할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어떤 성격의 기능인가. 구체적으로 행정권의 일부인지, 국가의 통치기능(넓은 의미의 정부기능)에는 속하나 행정권과는 무관한 즉 입법·행정·사법·헌법재판·선거관리 다음의 제6의 국가 기능인지, 국가의 통치기능과는 무관한 별개 기능인지의 문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의문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위의 물음을 중심으로 1997년 금융개혁 과정에 깊이 관여했던 필자

의 생각을 밝힌다.

한국은행의 기본기능인 통화신용정책 수립에 관한 권한은 본질상 「헌법」 66조 4항이 규정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즉 행정부)의 권한인 행정권의 일부다. 두 번째 해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은은 헌법에 설립근거를 두는 헌법기관이 돼야 한다. 세 번째 해석은 애초에 성립될 수 없어 논외로 한다.

따라서 한은의 중립성을 규정한 「한국은행법」 제3조의 의미는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기능은 대통령이 최종책임자인 행정기능의 일부지만 행정부 내의 다른 기관 예컨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는 독립해 중립적으로 수립하고 자율적으로 집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한은 독립의 의미와 한계, 즉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기능의 본질상 관계 정부기관과 협의의 당위성, 대통령 권한과의 관계 등이 자명해진다.

이렇게 정의한다고 해도 행정권의 일부인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권한을 행정부의 구성기관이 아닌 별도 법인인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헌법」 규정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가능하냐 라는 주요한 쟁점이 제기된다.

사실 1989년과 1995년의 한은법 개정 논의 시에 이와 같은 문제 제기가 있었기에 1997년 금융개혁 당시에는 중앙은행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면서 이러한 본질적이고 법률적으로 쟁점이 발생할 소지를 완전히 해소하면서 중앙은행제도의 본래 취지에 적합한 중립적인 중앙은행을 만들려고 한 것이 당시 정부와 한은, 금융개혁위원회 책임자가

합의한 당초 구상이었다.

그 구상은 기관으로서의 한국은행보다 시스템으로서의 중앙은행제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는 통화신용정책의 결정기관인 금융통화위원회에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부여하고 특수법인인 한국은행을 그 집행기관으로 해 중앙은행제를 구성하게 하되 금융통화위원장이 한은 총재를 겸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였다. 당연히 설치 근거법은 「중앙은행법」으로 해 기존의 「한국은행법」을 대체토록 했다.

그렇지만 이 같은 개혁안은 입법과정에서 우여곡절 끝에 현행의 모습으로 굴절, 변질되고 말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간 우리 사회가 마치 당연한 듯 기대하는 무한정의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기대수준대로 충족한 총재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던가. 한은 출신 여부를 막론하고 말이다. 이런 결과가 자연인인 역대 총재들의 소신·능력의 문제인지, 잘 못 설정된 본질과 개념 그리고 잘 못 부여된 역할에 의해 역대 총재들이 평가돼 왔기 때문이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탁월한 경제전문가인 신임 한은 총재와 그가 이끄는 금통위가 합리적인 의미의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소신 있게 지키고 제대로 평가받는 첫 케이스가 되었으면 한다.

VIII. 고용, 노사, 복지정책

- '주5일근무제'와 시장논리
- 고령사회와 인사정책
- 새 경제팀에 거는 기대
- 시장원리와 조화되는 노사정책
- 여성고용 문제, 시장에서 풀자
- 국민건강, 정부가 책임질 수 있나
- 연목구어(緣木求魚)
- '정책'으로 풀어야 할 고용 문제

2002년 8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주5일근무제’에 대한 합의 도출이 무산된 직후 쓴 글로서, 주5일근무제의 내용과 입법 과정을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분석, 비판하였다. 이 제도는 2004년 7월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노사정위원회에서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합의안 도출이 무산되면서 정부는 단독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경제계·노동계 나아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고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 시점에서 이 제도의 본질이나 이 제도와 경제운영 기본방향과의 관계에 대해 정부를 비롯한 노사 양측이 갖고 있는 인식이 적절한지, 그간의 추진 방식에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주5일근무제’는 정부가 법제화를 서두르고 시행을 강제할 일이 아니다. 이 제도는 어느 경제·사회나 경제적·문화적으로 성숙해지고,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경제적 소득보다 여가의 가치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보편화될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제·사회적 현상이다. 법제화가 앞서갈 일은 아니다.

‘주5일근무제’에 따르는 쟁점의 본질은, “근무시간 단축에 따르는 실질적 임금인상 요소를 노사 어느 측이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있

다. 이것을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이 새로운 임금인상 효과를 흡수할 수 있는 기업의 경쟁력 유무와 정도의 문제이며, 노사관계 측면에서 보면 이 인상요소를 두고 겨루게 될 노사 양측 협상력의 문제이다. 이 양 면이 다 개별기업을 전제로 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

따라서 설사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는 전 산업, 전 기업에 일률적으로 시행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그 구체적 내용은 개별기업 단위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노사 간 협의와 협상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그래야만 개별 기업의 경쟁력을 기본으로 하여 기업구조를 재편하려고 하는 이 정부의 기업정책 기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이 제도 시행의 전제가 되는 사회·경제적 진보 단계에 대한 사회적 확인 내지 합의 이상이 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노사정위원회가 구체적 내용까지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제화를 추진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자 단독 입법으로 밀고 나가려는 정부의 추진 방식은 시장원리에 기초한 경제운영의 기본방향이나 기업정책의 기조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또한 노측이건 사측이건 이 제도의 강행 추진을 반대하는 이유를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무산된 사실에서 찾는 것도 문제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도대체 ‘노사정위원회’라는 기구를 상설화하고, 구체적인 주요 노사 현안 문제의 대부분을 노동시장에서가 아니고 이 기구를 통해 일괄 타결하겠다는 정부의 노사정책 기조부터가 같은 정부의 경제운영

기본방향과는 전혀 조화되지 않는 것이었다.

‘노사관계 개혁’은 이 정부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돼 온 4대 개혁 과제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동안 주요 노사 현안의 어느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미루어졌고, 노사 갈등은 계속 증폭돼 왔다. 그래서 초래된 불안정한 노사관계는 아직도 우리 기업 환경에 대한 외국투자자들의 부정적 시각의 주 요소가 되고 있다. 나아가 노사관계 개혁 부진은 다른 부문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모든 결과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시장이 할 일’과 ‘정부가 할 일’을 가리지 않은 데 근본요인이 있다.

물론 노사관계의 특성상 노동시장의 역할과 기능이 보통의 경제제 시장과 차이가 있고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겠지만,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한 여기에도 시장이 할 일과 정부가 할 일은 반드시 구분돼야 한다. 그간 이 ‘주5일근무제’를 추진해온 방식은 시장경제 원리를 추구하는 정부라면 절대로 택해서는 안 되는 방식을 택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만약 우리나라가 주5일근무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정도로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성숙됐다고 믿는다면, 이제라도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일단 손을 떼고, 노동시장을 믿고 그 시장 안에서 개별기업 단위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그 구체 내용을 합의해 가는 과정을 지켜보아도 된다. 법제화는 그 뒤로 미루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일수록 정도(正道)에 따라 풀어야 한다. 이 경우 정도는 바로 노동시장을 존중하고 시장원리를 따르는 길이다.

이 글은 노무현 정부 초반 ‘코드 인사’ 논란 등으로 인사정책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분위기에서 작성되었다.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 인사정책이 이에 미칠 영향을 언급하고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안목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북한 핵 문제가 우리 국민 최대의 관심사항이 돼 있지만, 핵폭탄 못지않게 국가 경제·사회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칠 문제가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낮은 출산율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6% 수준으로 ‘고령화사회’의 초기에 있다. 하지만 오는 2019년에는 이 비율이 14%를 넘어 소위 ‘고령사회’로 이행하고, 이로부터 불과 7년 후인 2026년에는 20%가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01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부인 한 사람이 일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수)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1.3으로, 현재의 인구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체출산율 2.1에 크게 미달한다.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로 고민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평균 1.6에도 못 미친다.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출산율 높이기 대책들이 별 실효성이 없었고, 의학이나 생명공학의 발전이 앞으로 10~20년 안에 비약적으로 이루어질 것도 확실하므로 이런 추세를 뒤바꾸거나 늦출 수는 없어

보인다.

고령사회에서의 경제 모습은 자명하다. 우선 공급 측면에서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로 노동생산성이 저하해 경제성장이 둔화된다. 그리고 분배 측면에서는 비생산적인 많은 인구, 특히 노령자에 대한 사회적 지출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수요구조도 건강·의료·복지서비스 분야의 확대와 다양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제활력은 전반적으로 떨어지며 경제구조의 엄청난 변화가 필연적으로 초래된다는 이야기다.

일해서 돈 벌 사람은 줄어 들고 돈을 벌지 못해 나라나 가족으로부터 부양받아야 할 사람은 급격히 늘어나,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인구 비율이 2000년 10명에서 2010년 15명, 2030년엔 36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등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고령화 진행 속도가 세계 유례없이 빨라 국가사회 전체로나 개인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를 할 틈도 없이 이런 인구구조가 고착되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초래할 가공할 사태에 대해 국가 사회적 인식이 결여돼 있고, 정부가 수립 시행하는 정책들은 이와 같은 추세에 역행하고 있어 상황이 악화될 것 같다는 점이다.

새 정부의 인사정책도 이런 관점에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능률 추구’란 명분 아래 새 정부가 창안한 유행어인 ‘코드가 맞는’ 한두 사람을 발탁하고, 그 이외 동급 대부분을 퇴출시키는 인사정책의 폐해는 심각하다. 많은 직업공무원들이 신분보장 정신에 반해 사실

상 강제퇴직을 당하고 있다. 심지어 임기직 공무원조차 법에 명시된 사유에 관계없이 퇴직을 강요당함으로써 초래되는 ‘법치주의’의 손상, 정부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퇴출된 공직자들의 자리 마련을 위해 그 영향권 아래 있는 기관들이 겪는 인사의 불안정성과 심리적·사회적 갈등, 그리고 이런 인사가 결과적으로 형성하는 정부와 관계 기관·사업자단체 심지어 민간조직 간의 관민통합형 담합구조와, 이로 인한 경쟁체제의 심각한 훼손 등 이루 다 열거할 수 없다.

이런 ‘혁명적 인사정책’의 영향은 이제 정부부문을 넘어서 정부의 직·간접 영향 아래에 있는 각급 국책기관, 금융회사로 파급되기 시작했다. 이 파장은 끝없이 지속될 것이다. 심지어 민간기업들도 그 영향권에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특성이다. 퇴출된 고위공무원이 국영기관이나 금융권으로 전출되면 그 개인은 실업을 면하겠지만, 최종적으로 민간기업의 어느 힘 없는 한 사람이 밀려나 실직될 때까지 그 파장은 지속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의 평균 고용기간은 줄고, 평균 고용연령도 낮아지게 된다.

한 세대 남짓한 기간 내 닥쳐 올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구조에 조금이라도 근접하기 위해 지금 반드시 고려해야 할 고용정책의 기본방향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새 정부가 이런 인사정책을 쓰면서 제시한 명분인 ‘효율의 추구’와, 앞에 든 장기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신중히 비교 검토하며 조금이라도 고민한 흔적은 엿보이지 않는다. 새 정부는 5년의 수권(授權)을 받은 ‘임기가 있는 정부’다.

새 경제팀에 거는 기대

- 고용 문제를 중심으로

한경 다산칼럼 2004년 2월 12일

2004년 2월 10일 노무현 정부 2기 경제팀으로 경제부총리에 이현재 전 재경부장관, 노동부장관에 김대환 인하대 교수, 국무조정실장에 한덕수 산업연구원장이 임명되었다. 고용문제를 중심으로 새 경제팀에 거는 기대를 담은 글이다.

경제정책 기조의 전환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총선에 출마하는 각료의 후임을 임명한 소폭의 개각이지만, 이번 개각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신임 이현재 경제부총리는 많은 경제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받았을 뿐 아니라 성격이나 그간의 경력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의 정책 전환도 예견되기 때문이다. 우연이지만 경제부총리와 함께 국민들의 최우선 관심사인 고용정책을 추진해 나갈 노동부장관까지 같이 바뀐 점도 흥미롭다.

높은 실업, 특히 청년실업의 증가가 경제·사회의 최대 이슈가 되면서 일자리 만들기 묘안 경연대회라도 하듯 정부 각 부처가 정책구상이나 발표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대체로 별 효과가 없는 일과성이나 전시성 정책들로 비판받는 터이기에 새 경제팀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더욱 크리라고 본다. 이들이 고용 문제를 다루는 방향을 보면 우리 경제의 위기구조에 대한 인식이나 이에 대응할 정책기조와 무수한 현안과제의 해결방향을 짐작할 수 있기에 고용 문제를 중심으로 새

경제팀에 몇 마디 고언과 함께 기대를 밝힌다.

고용의 주체인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땅에 떨어져 있다. 그나마 투자동기가 있는 기업들도 주로 해외에서 투자대상을 찾고 국내 투자는 최대한 기피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 소위 ‘고용 없는 성장’이 불가피해지는 쪽으로의 산업구조의 변화와 이에 적응하는 기업경영 방식의 변화 현상이 가세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경제가 당면한 고용 문제의 본질이다.

문제가 이렇다면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고용을 늘리는 길은 오로지 개별기업이 경쟁력 향상을 바탕으로 생산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투자를 증대하는 길밖에 없다. 산업구조가 고용절약형으로 바뀔수록 더욱 더 질적 투자가 느는 것 이외에 진정한 의미의 고용이 증대될 길은 없다.

민간기업들이 보유한 자금이 300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꺼리는 것은 ‘불확실성’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본다.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려면 우선 경제 외적으로 북한 핵 문제, 한·미 간 공조관계의 균열 등 안보상 불안요인이 근본적으로 제거돼야 한다. 또 현재의 정치시스템이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 즉 정치안정에 대한 전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경제 내적으로는 무엇보다도 시장원리에 의해 경제를 운영한다는 믿음을 주고 경제정책을 비롯한 관련 정책을 일관성 있게 운용해야 한다. 정부는 예측 가능한 시장규율과 경쟁의 틀을 제시하고 시장에 대한 신뢰와 인내를 가지고 그 틀 안에서 기업들이 스스로 뛰도록 유도하는 것만이 경제를 활

성화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길이다.

우리 기업인들 대부분이 이 땅에서 계속 기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고용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위기구조에 대한 깊은 인식에 바탕을 두고 일관성 있는 경제와 관련 정책방향이 채택되지 않으면 그 어떤 ‘일자리 늘리기’ 대책도 무의미할 것이다.

문제의 본질을 이렇게 본다면 최근 노·사·정 대표가 합의한 소위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거는 기대도 자명하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설사 핵심인 당사자들의 준수의지가 확인되고 구체적 실천방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이 협약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심각한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의 본질과 배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결돼야 할 무수한 다른 경제현안과 마찬가지로 실업문제 역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기의 외형적 표출이며 경제문제를 시장원리에 의해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이 정부 정책기조의 결과이다. 또 경제의 적 위기상황 역시 이 정부가 상당부분 스스로 조성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이에 대한 깊은 반성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기조의 재정립과 경제현안 해결 노력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신임 경제부총리의 어깨에 혼자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과제가 지워져 있는 것 같아 안쓰럽다.

그간 몇 차례 정부가 바뀌어도 노사정책과 노사관계는 시장원리와 조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왔다는 문제인식 아래, 우리의 경제운용 방향과 조화되면서 노사관계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안정과 개선을 가져 올 정책방향에 대한 필자의 소신을 피력한 글이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나는 변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민노총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은 일반적으로 노조 편향적이라고 알려져 있던 그의 기존 노사(勞使)관이나 정부 노사정책의 변화를 암시한 것 같아 기대된다.

노사관계의 안정 내지 개선 없이 우리 경제의 장래가 없다는 것은 일찍부터 내외 경제전문가들이 공감해 왔다. 문제는 우리의 경제운용 방향과 조화되면서 노사관계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안정과 개선을 가져 올 정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그간 몇 차례 정부가 바뀌어도 노사정책과 그로부터 이뤄지는 노사관계의 근저에는 시장원리와 조화되지 않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한 분명한 문제인식과 반성이 선행되지 않으면 바람직한 노사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첫째, 노사관계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이해가 상반되는 두 당사자 간의 갈등 관계인데 이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노사정책의

기본이 돼야 할 대화와 협상에 의한 문제 해결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규범의 마련은 이러한 갈등관계를 전제로 할 때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화해니 대타협이니 하는 협력적 노사관계는 이를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에서 추구돼야 할 과제다. 그런데 오히려 이 과제가 먼저 추구됨으로써 노사관계의 규범적 성격이 모호하게 되고 정치적 접근이 주를 이루는 파행을 낳고 있다.

둘째, 노사관계는 노동의 공급자인 근로자들과 노동의 수요자인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수요 공급의 문제, 즉 시장에서 해결돼야 할 경제문제인데 이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혀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통성에 문제가 있었던 군사정부가 그렇다손 치더라도 선거에 의해 정통성을 확보한 정부에서도 여전히 노사문제를 주로 정치·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세번째 특징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정부의 잘못된 역할이다. 정부는 개별기업의 노사가 법테두리 내에서 협상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개입해서라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 노사 당사자나 언론, 일반국민들이 정부에 거는 기대도 그렇다. 정부가 노사현안의 당사자로서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다반사가 되다 보니 노사관계는 노정(勞政)관계로 바뀌고 노사관계 규범 제정자, 노사분쟁 심판자로서의 정부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네번째는, 노사문제를 개별기업 단위보다는 업종별·산업별,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가 노(勞)와 사(使)로 편가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

로 보는 시각이다. 이미 세계경제는 개별기업의 경쟁력을 기준으로 재편되고 있고 이를 향해 각국은 생존 차원에서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IMF 사태 이후 강력하게 추진한 기업개혁의 본질도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기업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노사관계는 개별기업의 문제로 보기보다 집단적인 방식에 의해 해결할 문제로 인식하는 모순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업별 노조 중심이나 상설의 ‘노사정위원회’에서 주요 노사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바로 이런 잘못된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고 본다.

이 외에도 한국 특유의 노사관계나 행태들, 즉 매우 저조한 노조 조직률에도 불구하고 극히 전투적인 강성 노조의 존재, 끊임없이 기업 경영자를 공격하면서도 기업으로부터 임금을 받는 전임 노조 간부의 존재와 이들의 귀족화 현상, 있어서는 안 될 사업장 내에서의 쟁의 행위와 이로 인한 기업 활동의 대안 없는 중단 등도 앞에서 쓴 기본적인 특징에서 파생된 것들이다.

국정책임자로서 변했다는 대통령의 말이 이상의 문제인식에 바탕을 두고 시장원리와 조화되는 방향으로 노사정책의 방향을 재검토할 것을 암시하는 발언이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노사관계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은 여전히 요원할 것이고 그의 발언은 오히려 새로운 갈등요인이 될 가능성이 클 뿐이다.

한경 다산칼럼 2005년 2월 18일

최근 여성파위가 약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성고용이 본질적으로 확대되지 않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여성인력의 고용 증대를 가져 올 근본적 방안과 여성인력의 생산성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주요 공직이나 전문 직종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등 여성파위가 약진하고 있다. ‘여풍(女風)’이라고 언론은 표현한다. 여성의 능력축적이라는 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나타내는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지않은 장래에 도래할 고령사회가 겪을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을 보완할 거의 유일한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여성인력이 다하리라는 전망은 서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은 아직도 50% 미만으로 남성의 3분의 2 수준에 머물고 있고 국제비교를 해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정도에 비추어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고용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력의 최대 수요처인 기업이 일반적으로 여성채용을 기피하는 데 있다. 공공부문이나 특정 직종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기업부문에서의 여성 취업률은 여전히 저조할 뿐 아니라 저임금·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현실이 이를 말한다. 전반적

으로 우리 기업들이 여성을 고용함으로써 그들이 갖는 생산성에 비해 남성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요소가 우리의 여성고용이나 임금구조에 있다면 기업은 전체적으로 여성고용을 기피할 것이다. 시장의 원리나 기업의 생리에 비춰 볼 때 자명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여성의 고용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이런 기업의 시각이나 입장에 대한 이해나 고려가 충분했는지 반성할 여지가 크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특유의 모성보호 관련법규들이 기업이 여성고용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는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사회보험에서 부담하는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총 출산휴가 90일 중 60일분에 대한 급여를 기업이 부담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는 유급 생리휴가제도로 연 12일의 근로일수 손실 혹은 비용을 지금까지 기업이 부담해 왔다. 이 밖에도 다양하고 강한 모성보호 관련 규정들을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다.

이미 취업을 하고 있는 여성에게는 더 할 수 없이 좋은 이런 보호제도들을 비롯한 생산성 증가와 무관한 여성 근로조건 개선 노력이 새로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여성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여성이 임신·육아 등 남성과 다른 특별한 생리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갖는 불가피한 생산성의 차이를 법과 규제에 의해 해당 기업의 부담으로 해결하려는 식의 사고나 접근방식으로는 여성고용의 확대는 기대할 수 없다.

여성이 기업 내부에서 남성 못지않은 생산성과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만이 여성의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궁극적인 길이다. 여성의 고용증대 노력은 이런 방향에 따라 공급과 수요의 양 측면에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공급 면에서는 여성들에게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흔히 이 부문에서의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라이프스타일이나 고용형태 등에서 다양성이 크게 높아진 오늘날에는 고객의 필요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참여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본다. 기업들이 보육서비스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나 가격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

수요면에서는 기업들이 생산성이라는 잣대로만 여성을 고용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비용 등 한국 특유의 기업부담을 최소화시켜 경쟁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모성보호 비용을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이 쉬운 방법이겠지만, 이 사회보험 역시 기업이 절반의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담주체나 적정 부담률에 관해서는 좀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여성고용을 근원적으로 저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경쟁과 수요자 선택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을 만들어 가야만 보호를 통해서는 활성화될 수 없었던 여성고용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다.

한경 다산칼럼 2005년 7월 15일

‘제2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시점에 쓴 글로 지나치게 사회보험적이고 소득재분배 가능에 치우친 의료서비스는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의료서비스가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봉쇄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전제 하에서 공적보険인 국민건강보험 제도와 이에 바탕을 둔 의료수급체계를 근간으로 국민건강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제도들과 이에 뒷받침 받는 국민건강의 오늘의 모습은 어떤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통합이 초래한 도덕적 해이로 정상 소득자들의 높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일반재정 지원 없이는 유지해 갈 수 없는 구조적 적자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암 등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에는 너무 낮은 건강보험 보장수준 때문에 본인 부담이 너무 높은가 하면 일부 질병에 대해서는 과잉진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획일적 의료수가 제도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고 정말 어렵고 중요한 분야의 전문의는 심각한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정작 큰 병에 걸렸을 때는 여유 있는 계층부터 외국에 나가 수술이나 치료를 받는 현실이 점점 일반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경쟁력 있고 잠재력이 큰 우리 의료서비

스가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국민의 건강문제를 정부가 만든 하나의 틀에 넣어 정부 책임 하에 해결하려는 정책방향이 가져 온 필연적 결과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 유세 중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가 아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집권하면 채택할 국민의료와 건강보험에 관한 정책과 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는 기술한 바와 같고 심지어 장기적으로 제도의 존속이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최근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산업화를 추구하고 병원의 영리법인화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공공성과 시장성의 조화를 시도하고 의료수급체계를 정상화하려는 일련의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이러한 논의의 시작을 환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많은 국론의 분열을 경험하게 될지 걱정이 앞선다.

이렇게 쟁점이 많은 국민건강과 관련된 본질적 이슈들이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해결 방향을 찾아가기 위해선 우리 사회가 다음에 제기하는 몇 가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편견 없이 대답을 구하고 이에 대해 최소한의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시장에서 의료서비스를 획득해 스스로 자신의 건강문제에 대처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건강문제까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나? 또 그럴 능력이 과연 정부에 있나? 전 국민의 건강문제를 정부가 모두 책임진다는 발상 때문에 정부의 집중적인 관심 대상이

돼야 할 사람들의 건강 문제는 오히려 소홀히 다뤄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자기책임과 위험분산이라는 보험 본연의 기능에서 너무 떨어진 모습이 돼 있고 지나친 사회보험적 성격과 소득재분배 기능에만 치우친 제도는 아닌지? 그래서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보험과 보호 기능, 즉 시장과 정부 역할의 구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건강보험에 있어서 정부의 기능과 시장의 기능을 보다 조화롭게 재설정할 여지는 없는지? 즉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조화롭게 재설정하지 않고도 의료수급체계를 의료소비자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국민건강보험재정의 파탄을 막는 것이 가능할지?

정부의 의지가 선하다고 해서 그것이 유효한 정책으로 성립되고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는 높이 살 만하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 지구상에서 국민의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진 정부가 존재한 적이 없다. 정부의 기능과 역할의 한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문제해결의 시작이다.

한경 다산칼럼 2006년 9월 22일

김대중 정부에 의해 3년 유예돼 온 노사관계 2대 개혁과제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기업단위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의 시행을 노무현 정부가 경영계와 노동계의 합의를 바탕으로 또 다시 3년 유예하려는 상황에서 이의 문제점, 특히 경영계의 문제인식을 촉구한 글이다.

경총과 한국노총은 소위 노사관계 로드 맵 상의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와 ‘기업단위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의 두 핵심 쟁점 과제를 같이 묶어 또 3년 유예(猶豫)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도 이에 동의한 상태다.

정부나 노조 측 태도는 대체로 예상돼 왔기에 일단 접어 둔다. 문제는 경영계의 이 과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의지다. 우선 경영계가 기업단위별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대등한 비중의 문제로 생각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식 교환의 대상으로 생각했다면 이는 분명히 단견(短見)이다. 기업단위 복수노조는 피할 길이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이미 양대(兩大) 노조로 구도가 굳어져 있고 이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차제에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 복수노조의 원칙을 수용하되 합리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관철하는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필요사항을 사

전에 정하는 것을 전제로 이 제도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전제만 충족된다면 이 제도는 노조원들의 노조 결성과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내지 지지 의사가 전제돼야 작동할 수 있고 또 노조간 경쟁이 유발되어 노조활동이 정상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원칙은 이와는 비중이나 성격이 전혀 다르다. 우선 입법단계를 볼 때 전자의 경우와는 달리 추가적인 입법조치의 필요 없이 오직 시행시기만 유예된 상태로 법제화가 완료돼 있다. 이 원칙은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노사관계의 대 원칙의 일환으로 반드시 관철돼야 할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노사관계 정상화의 전제가 되는 핵심적 제도 개선 과제다.

우리 경제운영과 기업경영에 암적 요소가 되고 있는 한국 특유의 노사 관계와 노동운동 행태들, 즉 매우 저조한 노조 조직률, 이에 불구하고 극히 전투적인 강성(強性) 노조의 존재,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의지 없는 노조의 출현과 과다한 전임(專任) 노조 간 부의 존재, 그리고 이들의 귀족화 현상, 사업장 내에서의 쟁의 행위와 이로 인한 기업활동의 대안 없는 중단 현상 등은 대부분 이 원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또 복수노조로의 이행이나 세계적 경향과 역행하는 산업별 노조로의 전환 추세 역시 이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노조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 의사가 없어도 노조의 결성, 노

동운동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돼 있는 한 노조의 민주화, 노사관계의 정상화는 결코 이룰 수 없다.

조합원들의 이런 의사는 노조의 운영과 활동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임자의 임금과 파업에 대비한 파업기금의 축적 등이 이 비용의 핵심이다.

노조가 이 원칙을 절대 수용하지 않으려는 것은 부담능력 부족이나 준비 미흡 때문이 아니고 이 원칙의 시행으로 초래될 노조와 노동운동의 개혁 가능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경영계로서는 어떤 비용을 치루더라도 이 원칙을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해야 한다.

경영계가 이 원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미 확립된 원칙조차 관철할 의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교환돼서는 안 될 조건과 쉽게 교환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식과 해결의지가 결여된 경영계, 노동운동의 특권화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노조, 무책임한 정부 세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이 담합으로 우리 경제는 사실상 10년이나 누적돼 왔고 언제 해소될지 기약 없는 악성부채를 계속 짊어지게 됐다.

이 부채의 해소가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의 첫 걸음이다.

이런 노사관계를 가지고도 기업이 계속 투자하고 경제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연목구어(緣木求魚)다.

한경 다산칼럼 2010년 2월 26일

고용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와 산업구조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제언을 담은 글이다. 원화환율의 인위적인 저평가와 외환보유고 확대 정책에서 탈피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소비수요를 확대하고 내수와 수출의 균형적 발전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어떤 문제라도 해결을 하려면 문제의 발생 배경과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 한국경제의 최대과제로 등장한 일자리 창출도 예외가 아니며 다음의 인식이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의 고용 문제는 한국경제의 최대의 문제점이라고 할 산업구조와 지출구조의 불균형에서 초래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다.

둘째, 이런 산업구조와 지출구조의 불균형은 대기업 중심의 수출 위주의 성장기조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수단들과 깊이 연계돼 있다. 즉, 오랜 기간에 걸쳐 한국경제에 내재된 시스템적 문제다.

셋째, 세계시장에 있어서 노동의 주요 공급이 중국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뿐 아니라 모든 시장경제국들의 고용이 이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글로벌 경제질서다.

한국경제가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을 하거나 글로벌 고용질서를 벗어나 운영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의 산업구조가 고용이 추가적으로 유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 이외에

고용의 확대를 가져올 근본적인 처방을 찾기 어렵다.

고용유발 효과가 큰 내수산업, 서비스산업, 중소기업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된다는 것은 수요 측면에서 보면 국민총지출 중 내수, 그 중에서도 소비의 비중이 확대되는 쪽으로의 지출구조의 변동과 맞물려 있다.

현재의 경제구조에서도 성장이나 국제수지 흑자의 효과가 국민들의 실질소득의 증대와 직결된다면 소비수요가 증대될 수 있다.

현재의 한국경제는 이 순환구조의 첫 단계가 깨어져 있다. 경제성장과 국제수지 흑자의 효과가 국민들의 실질소득의 증대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경제의 외형적 성장에 비해 실질국민소득이 낮을 뿐 아니라 내수 부문이 수출 부문에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은 구조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에 걸쳐 지속돼 온 수출 위주의 성장 방식이 이런 구조를 만들어 왔고 이를 뒷받침한 가장 실효적인 정책수단은 우리 원화의 저평가(低平價)를 기조로 하는 외환수급과 환율정책이었다. 수출경쟁력 유지와 외환보유고 확대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신설된 국가고용전략회의가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대통령 주재로 두 번이나 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 대책들을 쏟아 놓았다.

각 부처 차원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다 담았다는 점에서 ‘종합적’이라 할 만하지만 대책이란 이름이 갖는 한계와 공급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어 근본적 한계가 있다.

대책이 아닌 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보다 수요 측면

에서 고용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우선 우리 원화의 제 값을 회복하고 위기 대처를 위해서는 외환보유고의 확대보다 외환시장의 육성과 발전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등 국민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소비수요의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방향이 채택돼야 한다. 이런 방향이 전제된다면 최근 수립된 일자리 창출 대책들도 상당한 보완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책은 고용의 증진뿐 아니라 한국경제가 추구하는 다른 주요 목표 즉 구조전환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나 불균형의 시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될 일시적인 수출의 축소, 성장의 정체 그리고 경쟁력 없는 수출산업이나 기업의 구조조정 등 매우 큰 고통을 감내(堪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경제의 세계에는 트루먼 대통령이 찾았다는 상충되는 경제적 필요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외팔이 경제 전문가’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에 있어서 고용 확대는 부처 차원의 대책을 넘어 경제 전반의 구조 전환을 이루는 장기정책 방향의 선택과 이 전환 과정의 고통을 감내하는 정책적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이뤄질 수 있는 과제다.

IX. 인력, 교육 정책

- 인적자원 문제의 해법
- 교육에 시장원리를
- 교육 수요자가 선택해야 한다
- 사람 낭비하는 사회

대졸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과 관련하여, 필자는 취업난이 시장원리에 반하는 교육정책에서 초래된 측면이 크다고 판단하고 인적자원 정책은 경쟁구조에 의한 수요자선택 원리로부터 개선책을 찾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언뜻 보면 고등교육 인력의 공급 과잉이, 다른 한편으로는 충분한 고등인력을 수용하지 못할 정도의 기업경기의 부진이 문제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적자원과 관련한 문제는 이러한 정도의 단순하고 단기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인적자원의 질과 양의 양면에서 심각하고도 다양한 형태의 수급 불일치 현상이 확대 심화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아 경제 전반의 경쟁력 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다.

인적자원의 최종 최대 수요처라고 할 기업이 인적자원에 대해 갖는 문제의식은 다양하다. 우선, 배출되는 고등인력의 질이 기업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은 대학이 배출한 인력을 채용하면 거의 처음부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을 재교육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 비중이 선진국 수

준에 가 있고, 당장 고등교육 인력의 공급이 넘치고 있는데도 부문에 따라서는 필요인력이 오히려 부족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IT 분야의 인력은 이미 4만 명이 부족한데, 앞으로 3년 안에 18만 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해결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걱정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인적자원과 관련한 문제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간 IMF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자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제2 위기’로 상징되는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 배경에는 바로 이 인적자원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우리 경제의 진정한 위기극복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 구조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며, 이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바로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 각국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지적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고, 인적자원의 축적과 활용의 극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계적 생존경쟁에서 낙오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한 인식을 모든 나라가 갖고 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 가는 나라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은 우리가 마련하는 최고의 경제정책’이라고 한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의 말은 문제의 정곡을 찌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인적자원 문제의 본질이나 그 중요성에 대해 충분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바른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지적 후진성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상황이다.

필자는 우리나라 인적자원 문제의 본질이 대중융합적이고 규제 위주의 교육정책이 초래한 인적자원의 하향평준화, 공급자 위주의 교육 시스템, 수요자의 교육시장 참여기회 제한, 수급조절 시스템의 부재 등 시장원리에 반하는 요소가 교육의 전 부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문제의 본질을 이렇게 본다면 교육,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한 수많은 문제는 기존의 사고나 접근방법으로부터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근본적 해결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인적자원개발의 세 분야, 즉 양성·교류·활용 모두에 시장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방향이다. 이는 동시에 그간의 공급자 중심 접근방법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기업을 비롯한 인적자원 수요자가 이 시장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이들 간의 경쟁을 유도해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부처의 기능과 역할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인적자원과 관련한 많은 문제는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일관성 있게 검토돼 개선책이 찾아져야 한다.

그러나 경쟁구조를 두려워하고 수요자선택 원리를 꺼리는 우리 국민의식에 변화가 없는 한, 시장논리를 기본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국민의식의 변화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국가지도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2003년 '10.29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직후 부동산시장 과열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공교육 황폐화 문제를 생각해 보았다. 고교 평준화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중등교육 기조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이 강북지역에 특수목적 고등학교 설치 등 교육정책은 빠진 채 발표됐다. 경제부처와 교육부처 간에 심각한 의견대립을 보였던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은 교육부처의 손을 들어 준 셈이다. 하기가 부동산투기 억제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나라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교육정책이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주장도 말이야 옳은 이야기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중등교육의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이제에는 고교 평준화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현 중등교육 기조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등교육에 있어서 공교육이 황폐되고 이 자리가 사교육에 의해 대체된 지 오래다. 사교육비 부담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방비와 맞먹는 수준(GDP의 2.7%)의 엄청난 자원이 왜곡 배분되고 낭비되고 있다. 조기유학, 교육이민, 기러기 부부 등 망국적 교육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 모든 현상은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와 조화되지

않는 평준화 정책기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믿는다. 경제력 있는 교육 수요자들의 강남 집중과 이로 인한 강남 집값의 이상 폭등도 평준화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음은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중·고교 평준화정책의 채택 이후 30년간 중등 공교육은 한편으로 교육 수요자의 수요를 도외시하고 한편으로 경쟁요소를 배제하면서 세계의 교육추세에는 눈과 귀를 닫은 채 끝 없는 하향 평준화의 길을 걸어왔다. 이 과정에 소위 ‘열린 교육’, ‘참 교육’이란 이름의 논의가 이 추세를 더욱 촉진시켰다.

평준화정책이 추구했던 목표들, 즉 국민교육비 부담의 경감, 공교육의 정상화, 지역간 교육 균형발전 도모, 학생인구의 대도시 집중 억제, 경제력에 관계 없는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 등은 오늘의 교육 현실에서 완벽하게 반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장원리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사회의 운영원리와 경쟁에서 이기 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 특히 엄청난 ‘교육열’로 반영되는 우리 국민들의 교육수요의 특성, 수월성(秀越性) 있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육수요자들의 욕구와 전적으로 상반되는 정책방향이 초래한 이 모든 결과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경제논리를 떠나서라도 어차피 사회는 경쟁 요소로 충만돼 있다. 경쟁 없는 교육을 추구하는 것은 경쟁 없는 사회를 전제로 할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수요가 공교육을 통해서 충족되기 불가능할 때 교육수요자들이 선택할 길이 무엇일까?

고교 평준화정책 기조에 대한 재검토는 교육에 있어서 시장원리를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 교육을 비롯한 비경제 부문과 경제 부문에 있어서 국정운영 원리의 일관성을 어느 정도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이제는 학교가 그 건학 이념에 따라 제공할 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학생의 선발권도 학교에 돌려주어야 한다. 이것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돌려주는 것과 교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의 공급자인 학교와 교사,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에게 경쟁의 원리가 다시 도입되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와 교육시장의 문을 열고 세계의 학교와 세계의 학생과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교육 문제가 이미 교육 자체의 문제 영역을 넘어서 나라 전체, 나라경제 전체를 끌어안고 붕괴되기 시작한 지 오래다. 더욱이 오늘날 세계변화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가 ‘지적(知的) 사회로의 이행’이라고 한다면 교육에 있어서의 실패는 곧 국가 전체, 국민경제 전체의 추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교육현실을 그대로 두고 빠른 시간 내 2만달러 국민소득을 달성하겠다는 이 정부의 목표는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불과할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경영자들이 문제를 직시하고 시장의 원리를 기초로 한국교육의 틀을 다시 짜지 않는 한 한국, 그리고 한국경제의 장래는 없다.

한경 다산칼럼 2004년 9월 17일

평준화 교육정책에 의한 공교육정책의 실패는 경쟁적 구조와 수요자선택 원리를 외면한 데서 연유한 것이므로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해결의 길이 없다는 필자의 평소 생각을 담아 기고하였다.

“교육비 총액에 있어서 세계 1위, 국방비 수준을 능가하는 사교육비,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교육비 비중이 일본의 3배, 고등학생 이하의 조기유학에 따른 외화지출 20억달러, 경제규모(13위)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지는 국가경쟁력(27위)과 중·고등 교육의 경쟁력(41위), 대졸 신입사원의 재교육비용 1인당 1,330만원”

우리 ‘교육의 실패’를 웅변으로 말하고 있는 통계자료들이다.

중·고교 평준화 정책의 채택 이후 지난 30년 이상을 이 나라의 공교육은 교육 수요자의 수요와는 담을 쌓고 한편으로는 경쟁요소를 배제하면서 세계의 교육추세와 역행해 끝없는 하향의 길을 걸어왔다. 또 평준화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들, 즉 학생들 학력의 균등한 향상, 국민교육비 부담의 경감, 공교육의 정상화,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학생인구의 대도시 집중 억제, 경제력에 관계없는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 등은 오늘의 교육현실에서 완벽하게 반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사례의 하나가 지난 9일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는 초·중·고교생의 지역별 학교별 학업 성취도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뚜렷하게 나타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수치화한 데 의미가 있을 뿐 새로울 것이 없다.

평준화를 추구하는 교육정책 기조 하에서 이렇게 학력차이가 지역별·학교별로 나타난다는 사실도 문제지만, 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엄연한 객관적 사실이나 이런 현상이 초래되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입시제도나 기타 교육정책에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고 하는 교육정책 당국의 태도다. 최근 정부는 내신을 강화하고 수능을 등급화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대학들이 서류전형이나 내신에서 고교 간 학력차를 반영하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대학들이 보고서 형태의 논술이나 심층 면접을 치르는 것도 금지하겠다고 한다. 대학들은 눈감고 학생을 뽑으라는 것이라고 반발한다. 이 가운데 서울 지역의 주요 대학들은 대학이 학생 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가져야 한다는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앞으로 무수한 대안을 놓고 벌일 논란이 야기할 엄청난 혼란, 사회적 갈등과 낭비는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 국가 사회의 최대 이슈는 경쟁력이며 이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고 믿는다. 교육도 이런 원리로부터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한편으로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지적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고 인적자원의 축적과 활용의 극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세계적 규모로 진행되는 생존경쟁에서 낙오하고 말 것이라는 데 대해서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

우리 교육의 문제는 온 세계가 추구하는 위의 두 가지 목표에 눈과 귀를 닫은 채 시장의 기본원리와 괴리된 교육제도에 끝없이 집착하는 ‘정부 실패’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 실패가 교정되지 않으면 교육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요자 선택의 원리’에 돌아가는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학교 선택권을, 학교에는 학생 선발권을 돌려주는 것’이 그 출발이다. 학교들이 그 건학 이념에 따라 교육의 내용을 학교별로 정하고 다양한 학생선발 기준을 제시한 가운데 학생들이 본인의 적성과 능력을 감안해 적정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교육제도의 세부 내용이 모색돼야 한다. 이제는 대학의 학생 선발 능력과 학생의 학교선택 능력을 신뢰해도 좋다고 본다. 또 객관적으로 학교와 학생의 수급구조도 이를 가능하게 하도록 바뀌어 왔다.

다양성의 바탕 위에서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이 양성될 수 있는 기반을 이룩하고 얽히고설킨 교육에 관한 우리 사회의 상반된 견해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룩해야 한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교육에 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여기서 또 실패하면 10년 후의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담하다.

한경 다산칼럼 2005년 1월 14일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 1월 4일 6개 부처 장·차관 인사가 있었고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은 이기준 교육부총리는 결국 4일 만에 사퇴하였다. 이 사태를 보며 인적 자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금번 개각의 후유증이 크다. 당초 교육부총리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부터 청와대의 인사 검증시스템에 대한 비판, 개편론으로 비화되더니 급기야 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의 책임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가적 낭비를 경험하고 있고 연초 벽두부터 정부 권위의 실추도 만만찮다.

이 모두 문제가 아닐 수 없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 과정에서 드러난 사람을 아끼지 않는, 인적자원의 가치가 경시되는 우리 사회의 풍조다. 그리고 이렇게 비싼 코스트를 치르면서도 우리 사회는 이 과정의 배후에 있는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나 우려가 거의 없다는 점이 진정한 문제다.

그간의 한국 특유의 빈번한 정치적·사회적 격변 과정은 언제나 많은 유능한 인재들의 강제 퇴장을 동반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의 낭비 과정을 무수히 보면서도 이를 별로 아쉬워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이번에만 하더라도 교육부총리 당사자의 도덕성에 대한 평가나

그 개인의 명예와는 별개로 교육정책의 책임자라고 대통령과 총리가 생각했고 누가 봐도 우리 사회가 배출할 수 있었던 최고 수준의 인재 중 한 사람을 공직사회가 영원히 잃게 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논의는 전연 없었다.

보다 안타까운 사실은 개각 당시 장수(長壽) 장관의 교체 배경에 대한 설명에서 드러난 대통령의 인적자원에 대한 인식이다.

“2년쯤 일하면 아이디어도 다 써먹을 만큼 써먹고 열정도 조금 식고, 경우에 따라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

국가지도자의 이런 사고, 이런 표현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장·차관 2년 정도 하면 지적(知的)으로나 나라에 대한 헌신에 있어서 밀천이 드러날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의 사람밖에 없고 당사자들에게도 그 이상은 기대하지도 말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셈이다.

현대 경영학의 대부 피터 드러커는 나이 많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생산성에 관해 참으로 고무적인 말을 하고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는 “생각해 보니 60세부터 90세까지 30년간이 나의 전성기다”라고 이야기해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96세인 그는 최근 수년간에도 *Next Society*를 비롯해 수많은 저술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고 이 저작들이 과거 그의 수많은 저작들보다 더 높은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인간의 능력이 나이를 초월해 점점 더 빛을 발하는 경우는 드러커 이외에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은 드

러커가 이야기하는 전성기 이전에 생산적인 활동에서 완전히 퇴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수명의 획기적인 연장으로 급속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고 이런 추세가 바뀌거나 늦춰질 가능성은 없다. 앞으로 우리 경제·사회의 활력을 좌우할 인적자원의 공급원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나이 든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사장(死藏)하지 않고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하는 것과 더불어 이 과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 될 것이다.

이 시대 특징의 하나인 ‘지식사회’란 인적자원의 가치가 어떤 경제요소의 가치보다 더 크고 생산적인 것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국경제의 가장 본질적 문제인 경쟁력 문제에 대한 해답도 인적자원의 양성·교류·활용에 있어서 우리가 국제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을 경시하고 낭비하면서도 그것이 가능할까?

인적자원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하고 사람의 축적된 지혜와 경륜을 아끼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풍토와 지도자들의 인식에 변화가 와야 한다. 이것이 우리 경제의 앞날을 밝게 하는 중요한 전제다.

X. 부동산 정책

- 진퇴양난의 부동산 정책
- '8.31 부동산 대책'을 넘어서
- 무위이 무불위(無爲而 無不爲)
- 오페라 원가는 공개 안 하나?

한경 다산칼럼 2003년 9월 26일

2003년 한 해에만 세 차례의 큰 부동산 대책(5. 23 대책, 9. 5 대책, 10. 29 대책)이 나오는 상황에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과 그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포함하는 보다 본질적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 서술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런 예측은 상당 부분 현실화되고 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경제정책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질 것 같다.

첫째는, 말할 것도 없이 과열된 투기를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막아야 할 과제다. 부동산투기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과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및 재건축 시장의 가격 상승과 이의 파급에 따르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의 파괴는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지난 2년간 정부는 큰 것만 해도 일곱 차례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고 급기야 지난 9월 5일에는 ‘재건축시장 안정 대책’이란 이름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특단의 대책까지 내놓고 있다.

둘째는, 소위 ‘부동산 버블’의 붕괴 가능성과 이로부터 초래될 우리 경제 전반에 올 가공할 영향에 대처해야 할 과제다. 금융통계는 2001년 2분기부터 가계부문이 금융자금의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아파트와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급상승은 가계부문의 과도한 투기뿐 아

나라 이 투기를 유발하는 왜곡된 금융자금의 흐름, 즉 저(低)금리 기조에 영향받은 가계의 자산운용 방식과 예금은행의 무차별적인 부동산 담보대출의 확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 결과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한 가계의 금리손실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부동산 버블’의 실체다. 그래서 한 민간 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도 일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 버블의 붕괴 가능성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붕괴하면 기업부문에서 시작된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보다 더 큰 영향을 우리 경제에 미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간 계속된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가려 아직 이 부동산 버블의 실체는 잘 인식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 두 과제가 상호 모순적이라는 점이다. 버블이 붕괴되지 않고 가계가 파산위험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가계의 금리 손실을 상쇄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가 뒷받침돼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부동산 버블의 붕괴 시기는 미뤄질지 모르지만 국민 주거생활 안정의 심각한 파괴와 자원배분의 왜곡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진퇴양난(進退兩難)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이런 부동산투기, 그리고 왜곡된 금융흐름의 주범(主犯)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이라고 본다. IMF사태 이후 잘못된 거시경제 운영으로 98년도에 -6.7%라는 과도한 경제 침체(overkill)에 당황한 당시 김대중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절대로 쓰지 말아야 할 경기 부양

책을 내놓았다. 투기억제 제도를 대부분 무력화시키면서까지 부동산 경기를 자극하는 조치부터 시작했다. 그 결과는 그냥 두어도 회복될 수밖에 없었던 99년, 2000년의 거시경제 모습을 각각 10.9%, 9.3%로 끌어올렸지만 IT 버블, 가계의 신용카드 버블과 더불어 부동산 버블을 우리 경제에 안겨 준 것이다. 2001년에 또 다시 경기가 가라앉자 그 해 하반기에는 ‘제한적 경기조절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일련의 경기부양책을 쓴다. 앞서 언급한 왜곡된 금융흐름과 결부된 가계의 부동산 투기 버블이 본격적으로 생기고 금융지표상으로도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 때부터다.

현 정부도 집권 이후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자 이의 구조적 원인에 주목하기보다 손쉬운 경기부양책으로 단기 대응에 급급하고 있다. 경기전망이 계속 낮아지던 터에 태풍 등 자연재해까지 겹쳐 성장률이 3%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 대통령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정부는 또 다른 경기부양책을 들고 나올지도 모른다. 경기부양책이 필연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유발하는 것은 과거 30년의 경제 운용 경험이 말하고 있고 이론적으로도 그렇다. 부동산 투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정책을 계속 쓰면서 한편으로 또 다른 투기억제책을 계속 내놓는 모순을 거듭하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투기와 관련하여 정부가 당면하게 될지 모르는 진퇴양난의 처지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결과다.

한경 다산칼럼 2005년 9월 15일

2005년 8. 31 대책(종부세 대상 6억원 초과로 강화, 재산세 과표적용률 상향,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2007년 초까지 상승세가 지속되어 과열현상을 보였다. 필자는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8. 31 대책’으로 정부가 확신하는 것같이 부동산투기는 끝날 것인가? 이번 대책은 보유세와 양도세 중과 등 강력한 규제수단을 동원하고 수요에 대한 규제뿐 아니라 다량의 물량 공급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당분간 숨을 죽이고 상황 전개를 관망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이 이번 대책으로 확실하게 그들에게서 등을 돌렸다고 속단하기엔 너무 이르다.

설사 이번 대책으로 투기 억제에 성공한다 해서 부동산정책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국민 전반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이 이뤄질까? 특히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주거수준이 보장될 수 있을까?

이제까지 나온 무수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진 것은 그간의 대책들이 부동산 문제의 복합적 성격과 배경에 대한 본질적 규명을 결여한 채 결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한 대응요법으로서 입안됐기 때문이다. 8.31 대책 역시 그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름이 말하는 바와 같이 대책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의 본질과 복합적 성격에 주목하면서 기존의 발상을 벗어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몇 가지만 생각해 본다.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누구나 자산의 증식에 관심을 갖게 마련인데 부동산 형태의 자산 증식은 대부분 투기로 간주되는 것이 적절한가? 현실세계에서 투기와 투자의 구분은 거의 불가능하고 실제로도 무의미하다.

부동산 투기의 주요한 배경은 부동산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고 운용하는 것이 다른 자산에 비해 수익률이 큰 데 있다.

이렇게 한계 수익률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자산운용시장에 큰 왜곡 내지 결함이 있다는 방증이다. 이를 그대로 두면서 부동산시장으로 가는 자금의 흐름을 막을 수 있을까? 공영개발 위주의 주택공급 방식이 투기 억제를 위해 채택된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 소득 수준의 향상과 생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할까? 또 기업의 이윤동기를 활용하지 않고 원활한 물량 공급이 가능할까? 시장이나 기업에 결함이 있어도 그 기능을 정부가 대신할 수는 없다.

이제까지 입안된 부동산 대책의 근저에는 토지는 재생산 불가능한 자원이라는 사고가 깔려 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5.6%만 도시화돼 생산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토지는 용도와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재개발, 용도전환 등 보다 생산적으로 토지자원을 활용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경제적 시각에서 본다면 재생산과 다

를 바 없다. 토지의 재생산성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바탕으로 한 토지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가 부동산 정책의 기본이 돼야 한다.

투기가 억제된다고 주택보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이 이뤄질까?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는 임대제도의 발전과 활성화가 해결의 관건이다. 관련 세제 등의 재정비를 바탕으로 다주택 보유자들을 적극적으로 주택 임대업의 주체로 전환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동산 투기를 유발해 온 주범은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다. 역대 정부는 힘들게 도입해서 그때까지 자리잡혀 있던 합리적인 부동산 투기억제 제도를 경기부양을 위해 뿌리부터 흔든 경우가 많다. 개발이익 환수제도나 1가구 다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 제도의 변질이 대표적인 예다. 오늘날 부동산 문제가 악화된 주요한 배경이다. 이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부동산에 관한 한 ‘대책’만 있었을 뿐 ‘정책’은 없었다. 이제는 ‘8.31 대책’을 넘어서 ‘부동산 정책’을 생각할 때다.

한경 다산칼럼 2006년 11월 17일

노무현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과열현상이 지속되자 2006년 11월 15일에 다시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필자는 중국 도가사상 및 사마천의 『사기』를 인용하여 시장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온 나라를 들끓게 하는 부동산 문제, 이에 대처하느라고 진흙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점점 더 빠져들어 가는 정부를 보면서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에서 정부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본다.

‘무위이 무불위(無爲而 無不爲 : 하는 것이 없기에 아니 하는 것이 없다).’

역설과 같이 들리는 도가(道家) 사상의 기본이 되는 이 말이 갖는 심오한 진리를 깊이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대체로 ‘의도적으로나 인위적으로 행하는 법이 없고 무엇을 하기 위하여 애쓰지도 않지만 스스로 그러하게, 그러면서도 법칙에 맞게 운행하여 천지만물을 생성시킨다’는 의미라고 한다.

흔히 서양의 경제이론으로 이해되는 시장경제 사상과 동양 고유의 이 사상 간에 존재하는 깊은 관련성에 필자는 주목한다.

시장에 대한 정부 역할의 적절한 설정 없이 시장경제는 될 수 없다.

그래서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영원한 핵심문제다.

시장경제를 진정으로 하는 나라라면 그 정부는 스스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기에 앞서 ‘무엇을 하지 말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무엇을 하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물건 값이 싼 것은 장차 비싸질 징조이며, 값이 비싼 것은 싸질 징조이다”

중국의 한 나라 무제 때 사마천이 쓴 『사기(史記)』 중 「화식열전」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시장에서의 가격결정 원리, 배후에 있는 수요공급의 법칙에 관한 기술이다.

사마천은 시장이나 시장경제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쓴 적 없지만 이 구절을 포함한 반 페이지도 못되는 짧은 글을 통해 시장경제의 본질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하는 동시에 이런 모습의 경제의 흐름과 운영이 도(道) 즉 바른 길이라고 설파하고 있다.

그가 특히 강조한 것은 인위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는 자연스러운 경제의 흐름 그리고 시장의 원리에 따른 경제 운영의 중요성이다.

그러나 사마천이 2100년 전에 이미 설파(說破)한 바 있는 바른 길로서의 시장의 운영원리, 너무도 당연한 수요공급의 법칙이 오늘날 국가지도자들, 관·민 이코노미스트들에 의해서는 오히려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끊임없는 대책 수립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가 계속 악화돼 가는 원인은 정부가 대책을 세우기에 앞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스스로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노력이 시장에서

시장의 힘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려는 방향과 괴리(乖離)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부동산시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사마천이 갈파한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싸면 조만간 비싸질 징조이고 비싸면 언젠가 싸질 징조이며 이 징조대로 시장은 움직일 것이다.

물론 시장을 이 원리대로 움직이지 않게 하는 장애 요인이 있다. 소위 ‘시장의 결함’이다. 정부는 이를 정확히 집어내어 이를 제거하거나 교정해 주는 데에 역할의 기본을 뒀야 한다.

부동산에 관한 한 시장이 수급원리에 따라 움직이기에 원천적 제약이 있는 장애는 택지의 공급뿐이다. 이 장애의 제거에만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나머지 문제는 원칙적으로 시장에 맡긴다면 장담컨대 이 시장의 힘은 정부의 어떤 대책보다 효율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풀어 갈 것이다. 문제는 이런 시장에 대한 신뢰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기다리는 인내다.

바람직한 부동산시장, 그리고 이 시장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그림을 도가의 사상에 따라 그려 보면 ‘인위적인 부동산 대책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시장의 힘을 이용하여 해결하지 않는 것이 없다’가 될 것이다.

부동산 문제의 시장기능에 의한 해결 방향과 바람직한 정부 역할 바로 그것이다.

이 길(道)을 두고 왜 자꾸 딴 길로 가려고 하는지?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고 정부와 국민의 인식이 문제다.

한경 다산칼럼 2007년 1월 19일

2007년 들어서도 부동산시장이 과열현상을 보이자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원가공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1. 11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필자는 가격결정 원리를 무시한 이 조치는 장기적으로 아파트 공급 축소, 기존 고급아파트 추가적 상승, 기업이익 감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하였다.

세계적 음악축제인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그 유명세에 걸맞게 티켓 구하기 힘든 것으로도 명성이 높다. 자연히 암표(暗票)가 성행하며 그 가격도 높고 다양하다.

이런 현상의 절정이 2005년도 페스티벌 중 현대적 감각으로 완전히 새로운 작품으로 연출된 <라 트라비아타> 공연 때 있었다고 한다. 최근 드림커플로 불리는 인기 절정의 소프라노 안나 네트레브코와 테너 롤란드 빌라존이 주연한 이 오페라를 보기 위해 티켓을 구하지 못한 음악 애호가들은 천정부지(天井不知)로 뛰어오른 암표를 구하는 데 혈안이 되었다.

심지어 백지 수표가 등장하는가 하면 캐리비안 해의 2주간 크루즈 여행 가격까지 제안됐다는 후문이다.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일하기 좋아하는 정부가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우선 암표상 단속에 나서고 암표 신고센터가 설치될 것이다. 이어서 공연 티켓

가격 수준과 가격 결정 시스템 전반을 정부가 심사하고 중국에는 티켓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그 원가의 공개를 강제하는 식으로 문제해결의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잘츠부르크의 경우 오히려 암표를 파는 상점 중에는 시 당국에 신고하고 정식으로 세금까지 내는 경우도 있어 거의 합법화 수준까지가 있는 모양이니 문제해결의 방식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다.

오스트리아 정부나 잘츠부르크 시 당국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같이 부지런하고, 내·외국인의 문화생활에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가 생기면 이를 해결해 주겠다는 열의를 가진 일 좋아하는 정부가 아니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보다 시장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높아서 그런지는 모른다.

그러나 이 들이 이런 식(式)의 시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세계적 축제인 이 페스티벌을 위해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그랬더라면 아마도 전 세계 음악 애호가들이 열광하는 높은 수준의 연주가 선보이는 그런 축제로서의 이 페스티벌의 세계적 명성은 결코 지금같이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대체로 비슷한 가격의, 그렇고 그런 수준의 작품들이 대중(大宗)을 이루는 평범한 축제로 전락했을 것이다. 한편, 암표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공연이 있으면 위험부담을 감안해서 더 높은 가격으로 더 극성스럽게 암표가 횡행(橫行)할 것이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설사 그 것이 일견 터무니없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의 가격을 즐거이 지불하겠다는 수요자가 존재하는

한 이를 바로 내리게 할 방법은 없다.

이 경우 그 가격의 적정 여부, 특히 원가보다 얼마나 높은지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문제의 해결은 이런 높은 가격이 비슷한 또는 그보다 높은 수준의 새로운 공급을 불러오는 경우, 즉 시장의 가격기능이 작동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 그간 이 페스티벌을 비롯한 그 유명한 유럽의 음악축제 시장은 이런 시장 기능이 충분히 살아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의 원가공개와 분양가 상한제가 우여곡절(迂餘曲折) 끝에 오는 9월부터 도입된다.

시장과 기업의 본질, 수요 공급에 의한 가격결정 원리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시장적 접근논리는 개혁의 명분을 앞세운 정치권의 주장에 결국 압도되고 말았다.

민간아파트 분양시장이라고 해서 이런 시장원리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까?

장기적으로 아파트 공급의 축소와 가격상승, 공급되는 아파트의 획일화와 하향평준화, 기존 고급아파트 가격의 추가적 상승, 기업의 욕 감퇴 등 돌이킬 수 없는 국민경제적 비능률과 낭비가 불 보듯 하다. 우리나라가 과연 시장경제를 할 수 있는 나라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지 않는 어떤 경제개혁 논리도 시장에 대한 무지(無知)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정치논리의 변형일 뿐이다.

XI. 기타 기고문

- 시장경제를 향한 한국경제의 선택
- 시장경제 하려면 정부가 달라져야 한다
-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
- 부동산투기와 '정부의 실패'
- 한국경제 성장동력을 중소기업의 경쟁력에서
찾자
- 중소기업의 활로를 찾자
- 우리 경제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경제풍월 2001년 9월 1일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IT 버블이 붕괴되면서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이 닥쳤다. 필자는 과거 고성장 신화에 집착하지 말고 경기순환적 불황 국면을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위기의식 속의 한국경제

경기전망이 매우 어둡다고 야단이다. 하기야 정부와 중앙은행, 그리고 KDI 등 국책연구기관에 의하여 금년 경제의 전망치가 속속 하향 조정되고 있고 급기야는 2%대의 성장도 예측되는 상황에 와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그래서 ‘제한적 경기조절 정책’이라는 구차한 이름의 경기 부양책을 쓰기로 정부·여당이 합의한 모양이다.

경기의 침체뿐 아니라 99년 하반기부터 IMF 위기로부터 벗어났다는 대통령의 공식 선언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IMF 자금의 조기 전액 상환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관련 부문의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현안들에 대한 문제해결이 전연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사회 전반에 새로운 위기의식이 광범위하게 자리잡혀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부양이나 구조조정이냐의 논란이 새삼 일고 있지만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며, 위기의식의 근저에 무엇

이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본다.

불황을 구조조정의 계기로 삼아야

자본주의 경제는 어느 경제나 항상 호황과 불황의 반복을 경험하게 마련이고 지금은 중국을 예외로 하고 미국경제를 비롯한 세계경제 전체가 침체의 늪으로 계속 빠져들어 가고 있는데, 대외 의존도가 특히 높은 우리 경제가 이와 관계없이 높은 성장을 구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우리가 한동안 IMF 체제를 졸업했다고 선언한 적도 있지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해결이나 경쟁력의 근원적 향상이 이루어진 흔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며 우리 경제의 발전 단계를 감안할 때에도 그렇다.

금년도 경제 성장이 당초 기대했던 5~6%수준에서 3% 내외 또는 그 이하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경기예측의 정밀성의 문제로 지적될 수도 있지만, 여건 변화에 취약한 우리 경제의 문제점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하며 성장률의 둔화 자체가 우리 경제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IMF 위기가 초래된 모든 구조적 원인의 배경에는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모든 국민의 고성장·고확장에 대한 경쟁력 요소를 간과한 근거 없는 믿음과 집착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는데, 이 위기를 치르고도 우리는 아직도 ‘고성장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그간의 경쟁력 수준의 향상 정도와 세계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현재의 3~4% 수준 이상의 성장 속도를 인위적으로 유지

하려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논의되는 경기부양책은 경제적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동기에서 하겠다면 할 말이 없다.

우리 경제문제의 핵심을 경기순환적 관점보다도 구조적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IMF 차입국에서 벗어나는 순간 경제문제의 심각성이 보다 더 드러나는 사실은 우리 경제의 문제의 본질이 구조적인 데에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경제의 침체현상과 관련해서 볼 때에도 진정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불황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나 기업경영의 저조 그 자체보다도 불황이 오더라도 산업이나 고용구조 또는 기업경영 방식에 질적인 변화가 초래되지 않는 경직된 경제구조에 변화가 없는 점이며, 또한 불황이 오히려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호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불황의 효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또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결여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간의 구조조정 노력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확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경제의 잠재력의 축적보다는 내일의 잠재력을 미리 조기에 소진하는 많은 제도와 정책들이 수립 집행되고 있는 데에 우리 사회의 위기의식 본질의 일단이 있다.

IMF 위기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분석

또한 IMF 위기의 원인과 배경에 있는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편견 없고 균형 있는 분석을 시도하지 않은 채 추진된

현 정부의 IMF 체제의 극복 노력 방향과 그간 몇 가지 낙관적인 전제를 달면서 끊임없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정부의 위기 대처 방식도 새로운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정의 제1목표로 하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정부가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현장에서 실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간의 구조개혁 과정은 이러한 목표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되는 각 부문의 정책방향은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지 라는 관점에서 우리 경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 경제가 IMF 체제를 극복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생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충실하고, 매우 개방적이며, 국제화된 기준을 받아들이고, 투명하게 경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IMF 체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경제적 위기를 맞은 것도 바로 세계사적인 시대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이 조명되는 시장의 논리에 뒤처졌고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응하지 못한 데에 그 근본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고 따라서 이 길만이 우리 경제의 근원적 문제인 경쟁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시장경제의 원리를 정부가 실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시

장에 대하여 정부가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가리는 것이다. 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시장에 맡기고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영역을 찾아서 해결하는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시장에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의 문제는 자기 책임 하에 시장에서 시장논리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의 문제해결에 정부는 매달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시장에서 시장의 힘에 의해서 해결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기다릴 수 있는 정부의 인내심이 필수 요건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볼 때 그간의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포괄하는 원칙이 무엇이어야 하며 부문 간 개혁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설정되었어야 하는지가 자명해진다. 각 부문에 대한 일관성 있는 시장원리의 확산이 그 기본방향이 되었어야 하며, 공공 부문의 개혁을 먼저 시작하여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이 방향과 맞게 정립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각 부문별 개혁을 추진하는 순서를 택했어야 했다.

모든 부문의 구조개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력조정 문제 해결의 전제로서 노동의 수급원리에 기초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확보와 노사 쟁점의 당사자 간 자율적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정착을 주 내용으로 하는 노사관계의 개혁 역시 다른 부문의 개혁에 선행되어 추진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간의 구조개혁 노력은 이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어 왔다. 4대 부문의 구조개혁 중에서 공공 부문과 노사 부문의 개혁이 가장 지지부진하다는 데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노사관계의 개혁과제 중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과제 등 본질적인 문제는 모두 그 결론을 미루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에 대한 정부 역할의 재정립이란 관점에서는 공공 부문의 개혁은 거의 진전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기업과 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개혁 노력에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지지 않고 그 과정에서 개혁의 근본방향이어서 할 시장원리와 맞지 않는 결과가 때때로 초래되어 개혁의 효과가 잠식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

시장의 원리는 반드시 경제 분야에 국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노사관계·사회복지·의료·교육 등 분야는 그 시장의 성격이나 역할이 일반적인 경제 분야에 비하여 특수하고 제한적이지만 이러한 분야도 시장에서 해결 가능한 것과 정부가 하여야 할 역할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상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한 나라가 실현하고 있는 시장경제체제의 구체적 모습이 드러난다.

예로서 최근에 우리 경제·사회의 최대 문제로 대두된 의료보험재정 문제나 주 5일 근무제도를 둘러싼 논쟁을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 어느 나라든 모든 국민의 건강 문제를 정부가 만든 하나의 틀에 집어 넣어 해결하려고 해서 성공한 예가 없다.

우리 국민 중 많은 사람은 자기 책임 하에 시장에서 의료서비스를 획득하여 스스로의 건강 문제에 대처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적절한 의료시장을 발전시키고 이를 중개할

민영 의료보험 제도를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그렇게 해서 국민 대다수의 대부분의 건강문제를 시장에서 시장기능에 의하여 해결하고 스스로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정부의 주 관심대상으로 해서 이들을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어려운 과제인 것이다.

멀고 험난한 시장경제로의 길

물론 현재의 사회보험 성격의 국영 의료보험을 근본적으로 보완하거나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민영 의료보험 제도를 확대 발전시키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깊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시장기능을 가능한 한 활용해서 국민건강 문제에 접근하려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없이는 현재 이미 파탄의 징후를 보이고 있는 의료서비스 수급체계와 의료재정의 문제와 이를 둘러싼 공급자인 의료기관이나 수요자인 국민 대다수의 의료수급체계에 대한 깊은 불만과 불신을 해결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의약분업을 둘러싼 심각한 분쟁의 근원적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보험재정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이를 입안 발표한 부처 스스로도 이 대책이 문제의 본질적 해결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주 5일 근무제’를 둘러싸고 이 문제를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하여 결정하려는 접근방법도 그 어디에도 시장의 논리는 찾아볼 수 없다. 이 제도 시행과 관련한 쟁점의 본질은 근무시간 단축에 따르는 실질

적 임금인상 요소를 노·사 어느 측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있다.

이것은 개별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새로운 임금인상 효과를 흡수할 수 있는 경쟁력의 유무, 정도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이 위원회가 결정해서 전 산업, 전 기업에 일률적으로 강요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개별 기업단위로 노사 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성질의 일이다. 도대체 이러한 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두고 주요 노사문제를 일괄 해결하려는 집단주의적 접근 자체가 개별기업의 경쟁력 위주로 기업경영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기업정책의 기본 방향과는 전연 조화되지 않는 방향인 것이다.

이와 같이 시장의 논리를 기준으로 그 간 이뤄진 많은 제도와 정책을 조명하면 과연 우리 사회와 정부가 국정의 제1목표로 설정한 시장경제의 원리를 진정으로 추구하고 있는지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정책수단들을 선택하고 있는지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한 개인도 일생을 살면서 무수히 많은 선택의 기로에 직면하게 되고 그가 설정한 인생목표에 맞게 매순간 일관성 있고 좋은 선택을 축적해 가야만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하물며 한 국민경제가 경쟁력 있는 경제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바른 선택의 축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물론 성숙한 시장경제로의 길은 말보다는 훨씬 멀고 험난한 길일 것이다. 사실상 한편에서 미국 식의 경제와 기업운영 방식이라고 비판하는 시장경제의 원리나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는 우리의 국민적

성향이나 의식구조와 쉽게 조화되지 않는 요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이다.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적 의식구조, 가열된 경쟁과 분명한 승자와 패자의 구분보다는 적당한 타협과 하향평준화,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의 선호, 국제화를 추구하더라도 우리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해야 된다는 국민의식, 그리고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행정관행에 익숙해 있고 조급하게 결과를 확인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정부의 의식과 행태 등 우리의 체질은 거의 바뀌지 않고 있는데, 이와 전연 다른 시장의 논리와 글로벌 스탠더드를 우리의 것으로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으로 우리의 체질을 바꾸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경쟁력의 원천을 다시 정비 보강하는 것 이외에 한국 경제가 당면한 장·단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본다. 대안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국민의 성향이나 인기를 염두에 두고 나라의 경제운영의 기본이 되는 주요 정책을 그때그때 편의에 맞추어 결정하는 대중영합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될 때 시장경제의 원리는 하나의 수사(修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혹자는 ‘한국경제 제3의 길’ 또는 ‘한국적 시장경제’의 가능성을 논한다. 그러나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우리 경제운영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아마도 우리가 제1의 길인 ‘시장으로의 귀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훨씬 훗날에

나 논의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대안이 없을 때에는 대안이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는 지혜와 국민들에게 이를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용기가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국가경영 능력이다. 이러한 국가경영 능력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 것이 한국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

김대중 정부 말기 시점에 쓴 글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되는 경제구조가 중요하며 정부정책도 시장 친화적으로 그리고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책실패 사례에 교훈 있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습을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결코 양호한 모습이 아니라는 데에는 국내외 많은 사람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현 정부가 IMF 체제를 겪었고 정부는 이 위기를 극복했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지만 위기의 본질적 배경의 하나가 되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구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위기의 재생산 구조’로부터 벗어났다는 확신을 국내외적으로 얻는 데는 전연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원리가 작동하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이 선결문제이다. 시장경제의 원리는 국경이 무의미해진 세계시장에 있어서 치열한 경쟁과 전 세계의 수요자들의 선택과정에서의 적응을 통하여 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갈 수 있는 유일한 원리이며,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물론 시장경제 원리의 중요성을 부정하거나 우리 경제가 이 원리에 기초해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특히 이 정부는 우리 경제의 운영을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한다고 국정목표의 하나로 분명하게 밝히기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즉 시장에 대하여 정부가 하여야 할 일은 반드시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어떤 경우에도 하지 않을 때에야 만 비로소 시장의 원리가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시장경제하에서는 정부가 시장을 염두에 두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안 하는 것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 이 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정부규제의 본질이고 이러한 일들을 걷어치우는 것이 규제개혁의 본질적 내용이다.

따라서 정부가 지엽적이고 절차적인 측면의 규제에 대한 문제인식이 아니고 진정으로 경제와 기업 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인 규제를 개혁할 의사와 의지가 있다면 규제문제에 접근하는 근본적인 발상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시장을 염두에 두고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허심탄회하게 찾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먼저 이루어져야한다.

역대 정부가 다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없앤다고 강조하고 노력했다. 특히 현 정부는 규제개혁에 큰 역점을 두고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외형적으로는 많은 규제의 폐지·완화·개선을 이룬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정부의 적정한 역할이 찾아져서 시장여건이 개선되고 기업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인식은 국내 기업인들이나 국제적으로 관련있는 문제를 다루는 전문기관 어디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 가장 주요한 이유는 그간의 규제개혁 노력의 대부분이 관련 정부부서의 orientation, 기능, 역할 등 본질적인 차원에서 버리고 개선해야 될 일을 찾는 것이 아니고 대신 지엽적이고 주로 절차적인 규제의 개선에 치중하고 그 건수를 높이는 데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참으로 어려운 국내외 정책 환경 속에서 난마와 같이 얽히고 어려운 경제정책 과제를 풀어 가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더 이상 구호나 수사(修辭)가 아니고 진정으로 시장경제의 원리를 경제운영의 전 과정에 확산시키고 이와 관련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광범위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정착시키는 것이 다음 정부의 경제정책의 최대의 과제가 되리라고 본다. 더 이상 현 정부에서는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다음 정부 역시 이 과제의 중요성과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에 정면 도전하지 않는다면 결코 성공하는 경제정책의 결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고 세

계 속의 한국경제는 표류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시장의 원리를 전 부문에 확산시키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정부가 스스로 시장 친화적으로 변모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경제구조가 시장원리에 적합하게 재구성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할과 기능의 배후에는 바로 정부의 조직원리가 자리잡고 있다.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공급자 중심의 원리에 입각하여 조직되어있다. 대부분의 경제부처는 말할 것도 없고 비 경제부처까지도 일정한 산업, 업종 내지 특정 이해집단을 주 관심대상으로 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발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기본적인 역할로 하는 하부 조직(예: 국, 과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은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과 규제라는 수단을 통하여 구체화될 수밖에 없는데 지원과 규제는 항상 표리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해당 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과 규제를 골자로 하는 사업법을 만들어 규제의 근거를 만들고 한편으로는 그 분야의 사업자 단체를 구성하게 하여 이를 정부정책 실현의 주요 통로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쟁시장 최대의 적은 정부 그 자체

결과적으로 정부주도에 의한 조직적인 카르텔이 형성되고 광범위한 관·민 통합형 담합 즉 공동행위가 눈에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어 경쟁시장의 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기능을 원천적으로 제약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관료들은 이에 대한 문제 인식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일을 소속 부처 본연의 기능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권의 향배와 관계없이 시간이 지나도 전연 개선의 징후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조직구조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정부정책의 비 시장적 작동의 폐해는 실로 심각하다. 우선 생산성이 낮은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점점 비대화하여 전체 경제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각급 정부조직과 이에 종사하는 관료들은 국민경제 전체보다는 담당 분야 또는 산업의 이익을 우선 생각하게 되어 해당분야의 발전방향이 관료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국제화의 흐름에 역행하게 되고, 시장의 신호와 판단에 의한 끊임없는 산업의 재편, 생성과 소멸이 이루어져 자동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경쟁력이 유지, 향상되는 시장원리의 장점이 원천적으로 저해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시장에 있어서 해당산업에 대한 수요자 내지 소비자 선택을 활성화시키고 이 과정에서 기업의 승패가 좌우되는 시장의 효용을 살려나갈 수 없게 되어 경쟁정책의 유효성이 원천적으로 제약받게 된다.

일본의 오오마에겐이치(大前研一)가 그의 책 『헤이세이관료론(平成官僚論)』에서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자기들 일본의 정부 조직구조를 비판하면서 일본에서 제대로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잘 되

는 산업은 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와 주무부서(국·과)가 없는 경우라고 지적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의 의약분업의 실패,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업정책의 표류, 우리나라가 제안한 칠레와의 FTA 추진의 지연, 주요 통상대상국들과의 끊임없는 통상 분쟁의 발생과 이의 해결의 지연, 재벌문제의 해결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의 실패, 자립형 사립고교 계획의 좌절 등 주요 경제·사회 현안의 해결과정에 있어서 국정운영능력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정부조직 원리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새로운 정부조직 원리가 모색되어야 한다

시장경제 원리와 조화되는 정부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급 조직의 역할과 기능이 현재와 같이 공급자를 육성·지원·관리·규제하는 것으로부터 수요자에 대한 관심을 중심으로 하고 수요자의 합리적이고 다양한 선택 가능성을 개발, 발전시키고 각 산업과 기업이 이에 부응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따라서 당연히 현재의 산업별·품목별 위주의 편성으로부터 기능별 원리에 따라 조직 원리가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역할에는 엄청난 변화가 초래될 것이고 시장과 정부의 관계는 새롭게 정립되어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규제개혁의 문제도 원천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재정경제부나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들을 그 전유물로 생각

하면서 금융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진다는 발상을 바꾸어야 한다. 농림부는 작목별로 생산을 책임지면서 해당분야를 지원, 육성한다는 발상에서부터 국민들이 수요하는 값싸고 좋은 농수산물이 국내외 시장을 통하여 값싸게 공급되도록 하는 쪽으로 오리엔테이션이 바뀌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주 관심을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공급기관에 대한 관리로부터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것인가로 바꾸어야 한다. 교육부의 경우 각급 학교의 관리보다 학생이나 학부모 나아가 배출된 인력을 고용할 기업의 진정한 교육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가 주 관심대상이 되어야 한다.

특히 국제화된 시장을 바탕으로 기업의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정부가 수급의 문제에 대하여 해야 될 역할이나 수단이 거의 없는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전통적인 산업정책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들은 그 기능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벌써 와 있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정부조직 개편이 있었고 최근에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이 개편되었지만, 시대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고 경제운영의 기본 틀이 바뀔에 따라 이와 조화될 수 있는 정부의 조직 원리나 정부의 각급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모색하는 조직 개편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간의 정부조직 개편은 항상 물리적인 기구의 통폐합이나 인력의 감축에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나 차기 정부 성립 초기에 틀림없이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나올 것인데 이번에는 과거와는 달리 분명한

기본원리를 가지고 각급 정부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처의 기능과 조직의 오리엔테이션을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또 외형적으로 몇 개 부처를 물리적으로 통폐합하고 공무원 수를 줄이는 데 치중하는 조직 개편은 정부조직의 불안정과 공무원 사회의 저항만 조성할 뿐 차기 정부가 추구하여야 할 경제정책 과제의 해결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고, 우리 경제가 추구하는 ‘열린 시장경제로의 길’은 여전히 구호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

-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제언

고우경제 2003년 2월 28일

2003년 초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 고려대 경제인회 회보인 『고우경제』의 요청으로 새 대통령 정부에 대해 바람직한 경제정책 방향을 종합적, 부문별로 제언한 글이다.

시작하는 말

기대와 우려가 섞인 가운데 노무현 정부의 출범이 눈앞에 다가왔다. 무엇보다도 새롭게 수립되고 추진될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기업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최근 전경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기업경영에 미칠 최대 변수’로 이라크 전쟁과 미국경제의 향방에 앞서 ‘차기정부의 경제정책’을 가장 큰 변수로 꼽고 있어 향후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새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과 정책 환경을 안고 출발하게 될 것이다. 북핵문제, 이라크 전쟁 발발과 유가의 급등 가능성,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제회복 전망의 불투명성 등 대외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데다가 경제성장 동인의 고갈, 가계부채의 증가, 잠재된 사회복지지출 요인의 증대와 재정부담 능력의 한계 등 5년 전 김대중 정부의 출범 시보다 훨씬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서 출발

한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5년 전 맞았던 IMF 위기 같은 경제의 위기상황은 없어서 다소 나은 환경이라고도 보아지지만 사실 이것은 정책 환경이란 측면에서는 훨씬 더 불리한 여건임을 인식해야 한다. 위기 극복의 어려운 현실과 명분 때문에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한 곳으로 결집시켜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고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가 용이했던 5년 전 상황은 정책추진 주체로서의 정부 입장에서는 불감청고소원(不敢請 固所願)의 환경이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러나 국론은 매우 분열된 상황에서 새 정부는 수많은 현안과제를 한 쪽으로 해결해 가면서 한편으로는 선거 공약에서 제시했던 과제들을 포함한 경제개혁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보면 이 모든 문제를 경제전문가가 아닌 노무현 새 대통령이 취임 후 모두 풀어 간다고 한다면 다른 국정은 모두 팽개쳐 놓고 경제문제에만 매달려도 5년의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은 아닐 것이다.

대통령이 구체적인 경제정책 하나하나에 모두 관여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주어 풀어 가려고 하는 접근방법은 매우 비능률적이고 어찌면 상호 모순되는 정책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그보다는 대통령이 경제운용에 관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만을 제시함으로써 무수한 현안과 개혁과제들이 그 기조에 따라 구체화되어 가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되어야 소기의 정책목표도 살리면서 정책 간의 일관성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그런 큰 줄거리를 제시하고자 하며, 새 정부의 바람직한 경제정책 방향 수립에 일조가 되었으면 한다.

시장경제 원리와 글로벌 스탠더드의 수용

새 정부가 당면할 경제정책의 최대과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를 경쟁력 있는 구조로 만들 것인가에 두어 주기를 기대한다. 한 국민 경제가 경쟁력 있는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잡다한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경제 시스템에 대한 올바른 그러나 매우 어려운 선택과 일관성 있는 운용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미국경제의 저력은 말할 필요가 없고, 한동안 침체의 길을 걷던 영국·핀란드 등이 새롭게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정과 한동안 세계경제를 주름잡던 일본경제가 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10년(the lost decade)’을 경험하고도 계속 침체의 늪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 새 정부가 특별히 주목해 주기를 기대한다.

지금 세계경제는 WTO의 도하 라운드 출범, 중국경제의 부상과 WTO 가입, 지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증대 현상 등으로 표현되는 하나의 세계시장(a single world market)을 향해 가고 있고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이라는 문명사적 대 격변이 진행 중이다. 이 흐름에서 낙오하는 국민경제는 그 어느 것이든지 생존과 발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냉엄한 국제현실이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우리 경제가 생존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우리 ‘경제의 운영 틀’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다. 우리가 북한과 같이 못살더라도 ‘우리 식대로 살자’고 할 것인지, 아니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계가 보편적으로 추구하고 인정하는 식’으로 살아 경쟁력 있는 경제를 만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어떤 경제 시스템이 진정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켜 주는 제도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 계속 생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충실하고, 매우 개방적이며, 국제화된 기준을 받아들이고, 투명하게 경제를 운영하는 것 이외의 대안이 없다고 본다. 우리가 IMF 체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경제적 위기를 맞은 것도 바로 세계사적인 시대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조명되는 시장의 논리에 뒤처졌고,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 그 근본 원인인 것이다.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는 전제 하에 단일의 세계시장을 향해 가는 세계경제 여건 하에서 경쟁적 구조를 보장해주는 유일한 시스템이 ‘시장경제 시스템’임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대외의존도가 높고 세계경제에 깊이 함몰할 수밖에 없는 한국경제는 싫건 좋건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하지 않으면 경제를 운영해 나갈 방안이 없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 시장경제 시스템은 그 자체 세계 경제체제의 글로벌 스탠더드인 것이다.

정부의 시장에 대한 역할과 기능의 변화

시장경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한다는 것은 ‘경쟁구조의 정착’, ‘수요자 중심의 사고와 정책’, ‘진정한 의미의 국제화’의 세 요소가 경제 구조에 뿌리 깊게 자리잡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을 비롯한 각 부문에서의 정부 역할과 기능에 대한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 시장경제원리를 추구하는 한 높은 경제성장률 등 거시지표를 미리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시장개입적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달성하려고 하는 종전의 경제운영의 기본 틀은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산업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산업정책 위주의 경제정책을 경쟁정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시장경제의 원리를 정부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일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시장에 대하여 정부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리는 것이며, 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시장에 맡기고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영역을 찾아서 노력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시장에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의 문제는 자기 책임하에 시장에서 시장논리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의 문제 해결에 매달리는 데에 정부 역할의 중점이 모아져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가는 데에는 많은 애로와 난관이 있어 결코 쉬운 과

제가 아니다. 우선 우리 정부나 관료들의 시장과 경쟁원리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매우 낮다는 것이 최대의 애로가 될 것이다. 경제문제에 대처함에 있어서 문제가 시장에서, 시장의 힘에 의해서, 시장원리로 해결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기다리기보다는 정부가 의도하는 결과를 조급하게 확보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의식과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에 대한 회의와 불안 및 그들의 시장진입을 시장질서의 침해나 과당경쟁으로 보는 일반적 편견, 공정 경쟁을 통해 정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경쟁자가 아닌 경쟁 그 자체라는 데 대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다음으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조직원리이다. 우리 정부의 조직은 70년대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있고, 기능별 역할보다는 산업별·품목별 위주의 조직원리로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각급 정부조직은 책임을 지고 관장하는 산업 또는 품목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발전을 책임지는 것을 기본적인 사명으로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부 각 부처가 사실상 공동행위의 온상이 되어 있고, 정부의 지도 하에 수많은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각종의 경쟁제한적인 조치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문제인식과 개선이 없이는 시장경제 하기가 어렵다.

정부의 조직원리나 운영행태에 반경쟁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 어떤 의미에서 경쟁시장 최대의 적은 정부 그 자체이며 ‘시장실패’에 못지 않게 ‘정부실패’를 경계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시장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바른 역할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시장경제의 원리와 조화되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부조직과 운영원리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새 정부가 언젠가 정부조직 개편을 할 것으로 보는데, 이런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시장원리와 조화되게 바꾸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인력의 감축이나 기구의 통폐합에 그치는 조직개편은 공직사회의 불안정만 촉발하는 등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

비경제 부문에서의 시장원리의 활용

시장의 원리는 반드시 좁은 의미의 경제 분야에 국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노사관계·사회복지·의료·교육 등의 분야는 그 시장의 성격이나 역할이 일반적인 경제 분야에 비하여 특수하고 제한적이지만 이러한 분야에서도 시장원리가 적용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사실은 이러한 분야에서 시장과 정부의 관계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며, 한 나라가 실현하고 있는 시장경제체제의 구체적 모습을 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방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을 경우에는 앞으로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하여 지속 가능한 정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시스템 내에서의 효율의 저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유발하여 국민경제에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비능률을 초래할 것이다.

새 정부가 앞으로 직면할 최대의 정책과제는 경제운용 원리와 관련되는 비경제 부문의 운용원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이다. 양 부문의 운용원리가 세부적인 분야에서 다소의 상충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그 기초 자체가 전혀 다른 경우에는 국가의 일관성 있는 운영은 불가능하며 우리 경제를 경쟁력 있는 경제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새 정부가 취해야 할 경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하여 ‘선 성장, 후 분배’ 또는 ‘선 분배, 후 성장’이냐를 가지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지난 1월 19일 노무현 당선자가 KBS 국민토론을 통하여 성장과 분배가 같이 가야 할 사항임을 분명히 밝혀 일단은 안도가 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고 문제의 본질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의 핵심은 오히려 성장과 분배라는 국민경제의 양대 과제를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게 시장 메카니즘에 의하여 풀 것인가 아니면 정부의 의도적인 계획과 수단에 의하여 해결할 것인가이다.

한 국민경제의 성장은 그 정부가 설정하는 거시성장목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 여건의 제약 범위 내에서 최선의 기업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며, 분배도 가장 기본적인 일차적인 분배는 생산요소시장에서의 균형적인 요소가격의 결정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

물론 노무현 당선자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재분배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특히 강조될 수 있으나 이 부문도 결코 정부가 문제의 전부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상당부분 시장원리에 의하

여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에 이 부문 역시 무엇을 정부가 하고 무엇을 시장기능에 의하여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양 기능을 어떻게 조화해야 할 것인가 하는 원칙에 따라 풀어 가야 한다.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기대되는 분야에도 시스템 내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민간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부문이 매우 크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현안이 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각 부문의 제 문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기금고갈과 향후 구조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합리적 운영 등 사회복지 분야의 전 분야를 이상의 관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제도의 설계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경기중립적인 거시경제 운영

사실 2001년 11월 이전 까지만 해도 정부를 비롯하여 민·관의 무수한 경제연구소들이 2002년의 성장이 3%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고 정부는 유형무형의 경기진작책에 대한 압력과 유혹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2001년 하반기부터 ‘제한적 경기조절 정책’이란 구차한 이름으로 수많은 경기 부양책을 썼다. 그러나 그런 전망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경기는 상향 징후를 대내외적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그간의 경기대응책은 ‘불 난 데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어 유동성 과잉과 부동산 거

품 등 우리 경제의 기초를 계속 흔들 요인들이 축적된 바 있다. 김영삼 대통령 정부 초기에 구조정책을 써야 할 시점에 시행되었던 ‘신경제 100일 계획’이라는 이름의 경기부양책은 지금도 잘못 취해진 경제정책으로 비판받고 있다.

새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연 평균 7% 성장목표가 제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5%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어 공약의 파기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지만 공약의 파기 여부, 목표 성장률의 적정 여부가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의 성장목표를 정부가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원리와 조화될 수 없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바로 이러한 발상은 아직도 우리 정부와 국민이 이러한 높은 수준의 성장목표에의 집착을 쉽게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기부양책을 쓸 유혹을 항상 받게 된다는 점을 나타낸다. 인기에 초연할 수 없는 정치의 속성이 그러하고 ‘고(高) 성장 신화’에 젖어있는 우리 국민들 특히 기업의 거센 요구, 그리고 언론의 부추김 모두가 정부가 피해 가기 어려운 굴레가 될 것이다.

새 정부가 경기진작책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경기에측의 정확성 문제다. 경기에측기법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국내경기나 세계경기 그 어느 것도 경제전문가나 경제정책 입안가의 희망, 기대 예측의 범위 안에 있지 않은 변수의 움직임에 의하여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또한 우리 경제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움직임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경기예측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둘째, 경기 예측에 따른 정책수단의 채택과 효과의 구현 사이에 긴 시차가 존재하고 있어 경기부양책은 당초 목적과는 상반된 결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셋째, 정책수단의 한계이다. 대외적으로 WTO 체제 하의 글로벌경제, 내부적으로는 시장경제 원리의 정착과 각종 이해집단의 이해의 상충으로 정부가 채택할 수 있는 정책의 폭이나 정책 수단에 큰 제약이 있어 잘못 경기부양책을 쓸 때에는 경제의 구조적 왜곡을 더 심화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새 정부는 이상의 문제점 등으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경기부양책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한 전 정부들의 거듭된 실패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새 정부는 우리 경제의 문제점은 순환적인 데 있지 않고 구조적인 데 있다는 사실에 좀 더 유의해 주기를 기대한다. 성장률의 고저 자체가 우리 경제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정부·기업·가계 모두 ‘고 성장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그간의 경쟁력 수준의 향상 정도와 세계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의 성장 속도를 인위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경기부양책을 쓰게 되면 이제까지 보아 왔듯이 필연적으로 경제의 구조적 개선 노력은 정체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경기전망이 비관적일 때에는 ‘경제의 위기론’이 확산되다가 경기가 좀 좋아지면 이러

한 ‘위기론’이 쑥 들어가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경제문제의 본질을 경기 순환적 관점에서 보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때 세계경제를 선도하던 일본은 90년대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했고, 앞으로 일본경제가 나아지려면 5년 내지 10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본정부는 경제회복을 위해 약 10 차례에 걸쳐 100조엔이 넘는 막대한 재원을 경기대책으로 썼지만 효과가 없었다. 이것은 일본경제의 침체가 경기적인 현상이 아니고 구조적 문제점의 결과라는 사실에 대한 일본정부나 국민 대다수의 인식이 매우 결여되어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이 일본경제의 진정한 문제인 것이다.

우리 경제가 일본경제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새 정부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의 본질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것을 기대한다.

재정·금융의 운용

재정 운용

새 정부의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제언한다. 먼저 예산의 편성 과정은 그 자체가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계량적 표현이다. 국가의 각종 정책이 원칙적인 일관성을 가지면서도 시대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입안되기를 원한다면 재정의 지나친 경직성은 매우 우려해야 할 현상이다.

이미 우리 재정은 매우 경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새 정부가

선거 때부터 발표한 각종공약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엄청난 새로운 재정 소요를 유발할 것이다. 그 약속의 대부분이 예산의 몇 프로 또는 GDP의 몇 프로 하는 식이어서 도대체 우리 재정의 감당 능력이 있는지도 문제지만 엄청난 새로운 재정 경직 요인이 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새 정부는 스스로 강화한 비탄력적인 재정구조 속에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나 새로운 사업을 포기하든지 적자재정에 의존하여야 할 것이다.

IMF 경제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건전재정의 뒷받침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 재정은 이 과정에서 건전재정의 기반을 상실한데다가 이미 built-in된 사회복지 지출소요 등으로 가속적으로 재정규모가 늘어 갈 것이다. 재정의 건전성 부족은 그 자체로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앞으로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또 올 경우 최후의 보루가 재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건전재정을 유지해 온 과거의 노력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음을 인식하고 적자재정에의 유혹을 떨치고 건전재정으로의 복귀를 위해 새 정부는 노력하여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특히 경기진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새 정부가 절대로 하지 말기를 기대한다.

금융 구조조정

금융 구조조정은 김 대중 정부의 4대 개혁 과제 중 비교적 성공적

이라고 평가되지만 새 정부의 임기 중에도 계속 추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새 정부가 진정으로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하여 경제운영을 한다면 지금까지 정부의 기능이나 역할로 인식되어 온 것 중의 많은 부분이 금융의 기능으로 대체될 것이다. 즉, 금융산업이 시장경제의 주도 엔진이 된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하여 금융개혁, 금융 구조조정은 새 정부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새 정부의 정책은 이 분야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정책 성과와 문제점을 편견 없이 재검토, 반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금융개혁, 금융 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금융시장을 시장다운 시장으로 만들고, 금융산업이 스스로 위험부담 하에서 금융 수요자들의 수요에 부응하면서 국제경쟁력을 확보,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새 정부의 금융정책은 지난 5년간의 성과로 우리의 금융시장이 얼마나 경쟁적이고,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었고, 정부와 시장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된 시장다운 시장으로 변모되었으며, 구조조정 결과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 금융은 그간의 구조조정 결과로 부실 금융기관과 부실 자산이 대폭 정리되어 외형적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건전성이 회복되었고 대형화도 진행되어 왔고 수익구조도 크게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측면도 매우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시장성을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부

역할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또 불가피하게 투입된 공적자금 규모의 적절성, 사용의 효율성도 계속 문제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구조조정의 결과 우리 금융산업이 정부에 의하여 강요된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운영상의 구조조정까지 끝내고 시장에서의 자금중개 기능을 고양하고 기업에 대한 투자금융 서비스 역량을 높이는 등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시장경제의 주도 엔진이 될 준비를 갖추는 데는 아직도 멀었다는 사실이 문제다.

새 정부는 당장 공적자금에 대한 조사와 상환 문제, 대부분 정부 은행화된 금융기관의 민영화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면서 금융의 중개 기능의 보완, 직접금융시장의 구조 개선, 투자은행 기능의 강화로 기업 활동의 세계화 지원, 통화 정책의 운영 개선 등 미해결의 과제에 도전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도 다른 분야나 마찬가지로 새 정부가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하여 금융의 시장기능을 살리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주주의 역할은 가능한 대로 조속히 끝내고 대형은행들의 시장주도 기능을 존중해 주면서 정부는 스스로 금융정책의 입안자, 시장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본연의 기능에 복귀하는 것이 새 정부의 금융정책의 기본이 되기를 기대한다.

경제정책 현안에 대한 몇 가지 제언

재벌 문제 등 기업정책

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많은 재벌정책 구상이 나와 있어 최종적으로 어느 정책이 새 정부의 재벌정책 수단으로 채택될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새 정부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재벌 문제의 본질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이 문제 역시 경제운용 기조와 같은 방향으로 풀어가기를 기대한다.

재벌 문제는 ‘한국경제 문제 그 자체’다. 재벌의 생성, 성장, 부의 집중, 금융 및 정경유착 등 재벌과 관련된 제반 현상과 문제점은 한국경제의 역사적 흐름,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따라서 재벌에 진정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기업실패’에 못 지않게 ‘정부실패’의 결과다.

재벌은 그간 우리 정부가 집착해 온 ‘고성장 신화’에 대응해서 대기업들이 추구한 ‘팽창 위주의 기업경영’을 위한 최적의 기업구조였다. 그러나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로 이런 식의 경제운용 방식은 그 효용성을 다했고, 당연히 시장을 중심으로 정부와 대기업 간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재설정되어야 했다. 그러나 아직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형평욕구 수용 등 정치적 고려에 의해 재벌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새 정부가 ‘국제경쟁력 제고란 경제적 당위성에서 재벌이 변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경제정책의 중점을 거시목표에 집착하는 성장 위주로부터 시장기능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는 구조정책으로 바꾸고, 산업정책 중심에서 경쟁정책 중심으로 전환해 경쟁력 있는 기업만 살아남는 기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리고 보다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는 기업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금융부문에서 기업신용평가와 여신심사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재벌의 변화를 위해 불가결한 선행과제이다.

이런 환경이 조성되면 기업 역시 국내외적으로 생존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기업구조를 향해 스스로 변신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재벌들은 이미지를 공유하는 정도의 유연하고 느슨한 연계체제나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지주회사 형태나 재벌구조를 해체하고 완전한 개별 기업단위의 경영을 하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되어 갈 것이다. 탈세나 내부거래 가능성 등 남는 문제가 많겠지만 이에 대해선 엄격하고 예외 없이 공정거래법, 증권 관련법 또는 세법 등 관련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면 대부분 해소될 것이다.

새 정부가 기업의 속성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서 기업과 관련된 정책을 다루기를 기대한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며 이익이 되지 않으면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 어떠한 제도를 기업에게 강요하여도 기업이 스스로의 이익과 결부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이를 피해 갈 것이다. 예컨대, 비정규직 근로자의 양산이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제도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성 저하를 보완하기 위한 기업의 생존전략의 결과임을 깨닫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여성 근로자들에게 경제원리에 맞

지 않는 우대조치를 기업들에게 강요하면 기업들은 오히려 여성인력의 채용을 기피하여 여성들의 근로 기회는 줄어들 것이다. 즉 이미 고용된 기존 근로자들(Insider)이 새로이 근로 기회를 찾는 자들(Outsider)의 근로 기회를 뺏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것이 시장이고 기업의 생리다.

정부의 기업정책 기초는 우리 기업들로 하여금 시장에서의 가혹한 경쟁원리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데에 두어야 한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보호막을 동시에 걷어치워야 한다. 더 이상 기업의 후원자나 보호자로서의 정부 기능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대신 기업들이 투명한 경영과 진정한 의미의 국제화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환경은 기업들에게는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환경이 될지도 모르지만 바람직한 기업 환경의 조성이란 관점에서 새 정부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믿는다.

‘주5일근무제’ 등 노사 현안

우리 국가경쟁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노사관계는 작년 한해 ‘주5일근무제’의 도입에 따른 극심한 국론 분열 현상을 겪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특유한 갈등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냈다.

정부가 법제화를 서두르고 시행을 강제하려고 하는 ‘주5일근무제’는 어느 경제·사회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성숙해지고, 사회구성원이 경제적 소득보다 여가의 가치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보편화

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제·사회적 현상으로 결코 법제화가 앞서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5일근무제’에 따른 쟁점의 본질은 ‘근무시간 단축에 따르는 실질적 임금인상 요소를 노사 어느 측이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있다. 구체적으로 이 새로운 임금인상 효과를 흡수할 수 있는 기업의 경쟁력 유무와 정도의 문제이며, 노사관계 측면에서 보면 이 인상요소를 두고 겨루게 될 노사 양측 협상력의 문제다. 이 양면 모두 개별기업을 전제로 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

따라서 설사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 제도는 전 산업, 전 기업에 일률적으로 시행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그 구체적 내용은 개별기업 단위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노사간 협의와 협상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그래야만 개별기업의 경쟁력을 기본으로 하는 기업정책 기초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시행을 강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기초한 경제운영의 기본방향이나 바람직한 기업정책의 기초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노사 개혁’은 김대중 정부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돼 온 4대 개혁의 하나다. 그러나 그동안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복수노조 설립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공무원노조 설립 문제, 노사정위원회의 기능개편 문제 등 제도적 개선과제와 불법파업의 악순환과 노사교섭 관행의 개선 과제 그 어느 주요 현안도 해결되지 않고 미루어져 왔고 노사 갈등은 계속 증폭되어 왔다. 그래서

초래된 불안정한 노사관계는 아직도 우리 기업 환경에 대한 외국투자자들의 부정적 시각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 나아가 노사 개혁 부진은 다른 부문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새 정부는 어차피 이 문제들을 피해 갈 수 없다. 제도적 개선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먼저 ‘시장이 할 일’과 ‘정부가 할 일’을 가리는 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물론 노사관계의 특성상 노동시장의 역할과 기능이 보통의 경제제 시장과 차이가 있고,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겠지만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한 시장이 할 일과 정부가 할 일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 정부가 노동시장을 존중하고, 시장원리를 따르는 확고하고 일관된 방향이 수립되지 않으면 노사관계의 문제점 대부분은 결코 풀리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정부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기능은 불법과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엄정한 법 집행자로서의 기능이다. 노·사 어느 쪽이든 불법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정부가 행동으로 분명히 보여 주지 않으면 노사관계의 정상화는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교육, 인적자원 정책

우리나라의 인적자원의 질과 양의 양면에서 심각한 수급 불일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아 경제 전반의 경쟁력 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인적자원의 최종 최대 수요처는 기업이다. 새 정부는 우리 기업들

이 인적자원에 대해 갖는 문제의식에 유의하여야 한다. 배출되는 고등인력의 질이 기업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은 거의 처음부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을 재교육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 비중이 선진국 수준에 가 있어 공급은 넘치나 정작 필요한 부문에서는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는 점 등이 문제의식의 핵심이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배경에는 바로 이 인적자원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우리 경제의 진정한 위기 극복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 구조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며, 이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바로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식자산과 인적자원의 활용이 세계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서두르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인적자원 문제는 대중융합적이고 규제 위주의 교육정책이 초래한 인적자원의 하향평준화, 공급자 위주의 교육정책과 교육시스템, 수요자의 교육시장 참여기회 제한, 수급조절 시스템의 부재 등 시장원리에 반하는 요소가 교육의 전 부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인적자원 개발의 세 분야인 양성·교류·활용 모두에 시장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특히 기업 등 인적자원 수요자가 이 시장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하

고, 고등교육기관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이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 부처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가 필요하며, 경쟁구조를 두려워하고 수요자 선택원리를 꺼리는 우리 국민의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이 모두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원칙으로 풀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임을 새 정부가 직시하기를 바란다.

마치는 말

우리 경제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일한 시스템인 시장경제는 정부가 말로써 한다고 되는 제도는 아니다. 시장경제를 한다는 것은 경쟁력을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국가지도자들의 확신과 일관성 있는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경제정책과 관련 분야의 정책이 일관성 있게 운영되지 않고 국민의 성향이나 인기를 염두에 두고 그때그때 편의에 맞추어 결정하는 대중영합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한 시장경제의 원리는 하나의 수사(修辭)에 그칠 것이다.

혹자는 ‘한국경제 제3의 길’, ‘한국적 시장경제’, ‘사회적 시장경제’의 가능성을 논하나 모두 실질적 내용이 빈약하고 경쟁력 요소를 간과한 공허한 발상으로 본다. 더욱이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우리 경제 운영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아마도 우리가 제1의 길인 ‘시장으로의 귀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훨씬 훗날에나 논의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맞는 2003년은 매우 불확실한 대외환경과 정권교체기라는 대내환경의 변화로 인해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새 정부의 5년 기간은 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아니면 중남미의 경험에서 본 바와 같이 세계사의 주변국으로 전락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새 대통령과 그의 정부는 우리 경제의 앞에는 ‘열린 시장경제로의 길’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나아가 국민들에게 이를 과감하게 전달하고 설득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것이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국가 경영능력이며, 경제정책의 핵심이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연이은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과열현상이 지속되는 데 대해, 필자는 부동산정책 실패는 ‘시장의 실패’라기보다 ‘정부의 실패’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의문의 부동산시장

온 국민의 생활과 재산형성에 직결되어 있는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통의 의문이 있다.

첫째, 정부는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투기는 더욱 더 극성을 부리고 새로운 대책이 나올 때 마다 왜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더 오를까?

둘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아무리 보아도 너무 높은데도 최근 1~2년 사이에 또 거의 2배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의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갈까? 소위 ‘강남 불패론’은 지속될까?

셋째,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큰 거품은 없는지? 있다면 지금과 같은 장기불황이 계속되는 경우 어떤 조건 하에서 꺼지기 시작하여 한국경제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주지 않을까?

이상의 의문에 대한 적절한 이유와 해답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

의 부동산 문제의 본질과 그간의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이 될 것이다.

시장원리와 역행하는 부동산 정책

지난 2년간에만 해도 무수한 군소 대책은 제외하고도 정부는 작년에 4차례, 금년 들어 3차례나 연이은 대규모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가격 안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 9월 5일에는 ‘재 건축시장 안정 대책’이란 이름으로 강남지역 재건축에 대한 중소 평형 의무건설 비율 확대, 서울지역 용적률의 하향 조정 및 이의 보완조치로서 건설될 판교 신도시에 사설 학원 단지의 설치 등 논란의 여지가 큰 특단의 대책까지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 대책이 나온 후 강남의 재건축시장을 비롯한 부동산시장이 잠깐 얼어붙는 듯하더니 얼마 못 가서 또 다시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가 다시 일기 시작하고 이런 움직임이 다른 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되는 기미를 보이자 최근 정부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부동산 가격만은 꼭 잡겠다고 하면서 폐기된 ‘토지 공개념’ 관련 제도와 유사한 제도의 재도입을 포함하는 초강수의 투기억제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을 내놓을 때 마다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더 올랐다. 그래서 이번에도 부동산에 밝은 많은 사람들, 돈의 생리를 잘 아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지금이야 말로 부

동산에 더 투자할 때라고 생각한다.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정부의 정책을 불신하고 정부의 정책방향과 역행하여 부동산에 투자해 온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

첫째는 그간의 부동산 정책의 대부분이 시장의 수급원리와 조화되지 않는 내용이었다는 점이다.

물론 주택시장은 매우 불완전한 시장으로서 일반적인 재화시장에 비하여 가격의 수급조절 기능이 매우 취약하고 수급곡선도 대체로 매우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인다. 주택 보급률 역시 재건축 수요와 지역간 불균형을 감안할 때 아직도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만성적 공급부족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투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어 있는 셈이다.

여기에 부동산 문제가 시장기능에 의해서만 해결되는 데 한계가 있고 따라서 정부의 각종 규제를 수단으로 한 투기억제 정책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것이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수급원리를 무시해도 좋고 때로는 오히려 그와 역행하는 내용까지도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간의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의 대부분은 시장의 수급원리와 조화되지 않는 것들이었다. 수요에 상응하는 공급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대책들이 남발되어 온 반면 수요의 적절한 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세제의 근본적인 개편은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유예되어 왔다. 아직도 현실과

엄청난 괴리가 있는 과세표준이 이런 사정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소위 '9.5 대책'이 나온 지 불과 한 달 남짓한 시점에서 이 달 29일로 발표가 예고되어 있는 또 다른 초강수의 대책들이 '부동산 공(公) 개념'의 강화란 관점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이 대책들이 토지거래 허가제등 시장원리와 조화되지 않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경우 또 다른 실패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정책은 공급측면에서는 공급을 원활히 하고 수요자의 요구가 공급과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데 그 기본을 두어야 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투기적 수요에 대해 그 수요 동기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데 기본을 두어야 한다. 부동산 보유와 양도차익에 대한 적절한 과세 이상의 효율적인 수단이 없다. 정부가 이런 기본원리를 존중하고 부동산시장의 기본 틀을 정비해 가면 부동산과 관련한 세부적인 문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틀 내에서 시장에서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되어 갈 것이다.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여 시장원리를 무시한 왕도(王道)가 있을 수 없다.

부동산투기의 주범은 정부의 경기부양책

둘째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동산투기를 유발해 온 주범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이라는 점이다.

IMF 사태 이후 이의 극복 과정에서 당시 김대중 정부는 경제성장의 조기 회복을 위해 경기 부양책을 대대적으로 썼다. 그 간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제도를 대부분 무력화시키고 부동산 경기를 자극하는 조치가 그 시작이었다.

그 결과 그냥 두어도 지표상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시경제의 모습을 99년 10.8%, 200년 9.8%로 끌어올렸으나 오늘날 우리 경제가 이미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경제에 엄청난 문제를 계속 던져 줄 IT 버블, 가계의 신용카드 버블과 더불어 부동산 버블을 만드는 직접적 요인을 제공했다.

2001년 또 다시 경기가 침체하자 그 해 하반기에는 제한적 경기조절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경기부양책을 썼다.

이런 경기부양책이 나올 때마다 제도적으로 자리잡혀 있던 합리적인 대부분의 부동산투기 억제 제도는 뿌리부터 흔들리게 마련이었다. 개발이익 환수 제도나 1가구 다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 제도의 변질이 대표적인 것이다.

현 정부도 집권 이후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자 이의 구조적 원인에 주목하기보다 손쉬운 경기부양책으로 단기 대응에 급급하고 있다.

금년도 경기전망이 계속 낮아지던 터에 태풍 등 자연재해까지 겹쳐 성장률이 3%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 대통령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정부는 또 다른 경기부양책을 들고 나올지도 모른다.

경기부양책이 필연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유발하는 것은 과거 30년의 경제운용 경험이 말하고 있고 이론적으로도 그런데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부동산투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정책을 계속 쓰면서 한편

으로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하여 또 다른 억제책을 계속 내놓는 모순을 거듭하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 거품의 실체와 붕괴 가능성

지금까지의 부동산 문제와는 달리 소위 ‘부동산 버블’과 이의 붕괴로부터 초래될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가공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최근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앙은행 총재까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금융통계는 2001년 2분기 이후 가계의 금융자금 수요가 금융자금 공급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가계가 금융자금의 수요자로 전락하고 있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소득 수준을 초과하는 과소비 지출에서 신용카드 버블이 생기는 동시에 가계의 자산 운용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매우 투기적으로 변해 왔고 여기에 부동산투기 버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가계는 2001년 2분기부터 확정금리 손실, 불확정 호가라는 매우 위험한 부동산 게임에 빠져 있어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한 파산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부동산투기와 관련해서 한국경제가 빠진 매우 심각한 딜레마의 일단을 읽을 수 있다. 즉, 한편으로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인 투기의 뒷받침으로 계속 상승하지 않거나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의 계속 즉 장기불황에 빠지게 되면 가계 부문은 소위 부동산 버블의 붕괴

로 파산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이런 버블의 붕괴 현상은 가계 부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어쩌면 기업 부문에서 시작된 일본의 부동산 버블의 붕괴가 일본경제에 미친 영향보다 더 큰 영향을 한국경제에 미칠지도 모른다.

한편으로 만약 부동산투기와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계속되면 일시적으로 부동산 버블의 붕괴는 유예될지 모르지만 말할 것도 없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의 심각한 파괴와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역시 한국경제는 벗어나기 어려운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 한국경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진퇴양난'의 처지에 있는 셈이다.

이 버블의 본격적 발생과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 간에는 깊은 관계가 있다. 부동산 버블 현상을 가져 온 왜곡된 금융 흐름의 배후에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있다. 이 거품이 금융지표상으로도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2001년 하반기에 앞에서 언급한 경기부양책을 쓸 때부터다.

‘강남 불패론’과 교육평준화 정책

교육수요자들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수요의 핵심은 ‘수월(秀越)성의 충족’ 즉 남보다 좋은 교육을 받겠다는 데 있다. 그러나 공급 면을 보면 이와 전연 상반되는 중·고교 평준화 정책, ‘열린 교육’이란 이름의 하향 평준화 교육기조가 중등교육의 핵심을 이뤄 왔다. 이런 수급의 불일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교육비 부담, 교육이민, 조기 유학, 기러기 부부 등 한국 특유의 망국적 교육환경 조성의 원인이다. 강남 아파트 값

의 폭등, 소위 ‘강남 불패론’의 배경에 바로 이 교육정책의 실패가 있다.

교육수요자들이 정상적인 공교육을 통해서는 교육의 수월성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좋은 학교 그리고 명문 학원 등 사교육 조건이 좋은 강남지역으로 주거를 옮기기 시작하고 이는 점차 가열되어 왔다. 이 현상은 다른 유리한 문화적 생활여건과 상승작용을 이루어 오늘의 강남지역 집값의 폭등과 이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강남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일률적으로 투기적 수요로 간주하고 지금과 같은 가격 상승을 전적으로 투기적 요인에 의한 비정상적 상승으로 보고 문제에 대처한다면 또 다른 실패를 자초할 것이다.

평준화 정책의 근본적 수정 등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의 근본적 재검토가 없으면 ‘강남 불패의 신화’는 지속될 것이다.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실패’의 인정에서 출발해야

정부가 경제운영에 있어서 경제의 구조적 개선보다도 경기의 순환적 움직임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그리고 교육에 이어서 평준화 정책이 지속되는 한,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지 않는 한 어떤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부동산시장의 과열과 투기 현상은 과거와 같은 ‘시장의 실패’에서보다도 ‘정부의 실패’에서 오는 측면이 훨씬 더 크다. 이에 대한 깊은 반성이 부동산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필자는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을 경쟁력의 문제로 파악하여 중소기업 정책도 그동안의 보호 구조에서 경쟁력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필자가 중소기업연구원장 재직 시 쓴 글이다.

경쟁력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

우리 경제는 경제의 불확실성, 장래 전망의 불투명성으로 끝없는 내수의 추락 즉 투자수요와 소비심리의 동결 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로부터 위기의식이 점증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경제정책 당국자들의 자신에도 불구하고 또 경기의 순환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경제에 자리잡고 있는 본질적이고 매우 심각한 구조적 문제점의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기업의 투자심리를 반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의 흐름을 선순환으로 전환하여 경제위기의 재생산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불확실성, 불투명성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 문제의 본질에 대한 내과적 진단과 처방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의 접근은 주로 외과적 처방과 조치에 주력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필자는 바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의 문제로 인

식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는 우리 경제의 취약한 국제경쟁력 구조이며 다음은 우리의 경쟁력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확신의 결여이고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을 보장해 주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선택이 정부에게도 없고 국민의 합의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104개 국 중 29위로 전년보다 무려 11위나 하락한 것으로 발표하여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하기야 IMD는 이미 지난 5월 60개국 중 35위로 발표한 바 있다. 우리 경제가 2000년을 고비로 IMF 위기로 하락된 경쟁력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02년 이후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IMD나 WEF가 발표한 숫자 자체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경제의 경쟁력 수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IMF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그간 각 분야의 구조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경제의 외형적 성과에 비해 극히 취약한 경쟁력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더불어 완성되는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Boardless Economy, Globalization, Knowledge-based Economy)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면서

생존해 갈 것인가보다도 더 중요한 국가적인 문제는 없다.

WTO의 뉴라운드 출범, 중국경제의 WTO 가입, 지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증대 현상 등 국제환경의 변화는 우리 경제가 생존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와 관련된 많은 국가적 논쟁이 있으나 경제의 최대 이슈는 경쟁력이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지 못하면 어떤 논의도 대안도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이 경쟁력은 그것을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분명한 선택이 없이는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 이를 보장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시장경제체제는 경쟁적 구조를 가능하게 하여 경쟁력의 문제에 대해 해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임은 동서고금의 역사와 오늘날 세계경제 속에서 각국이 이룩하는 경제적 성취를 보면서 재확인하게 된다.

경쟁력의 위기인 우리 경제 위기구조의 극복을 위해서 첫째로 필요한 것은 문제의 본질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국가·사회적으로 확립되는 것이고, 둘째는 시장경제 하에서의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성찰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 시장경제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사회복지·의료·교육 등 일견 비경제 분야로 보이는 이 분야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시장원리에 의하거나 이 원리와의 조화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을 추구할 때

에만 시장경제의 실현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도 바로 경쟁력의 문제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으로부터 GDP 기준 경제규모 세계 제12위(2002년 기준)이며, 교역규모 기준 세계 11위의 경제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그 발전단계에 상응하고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경제의 질적 변화, 구조적 변화를 이룩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직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갖는 경제적 특성, 그리고 국민경제 내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바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발전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완성되어 최근까지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왔던 모델 즉 정부의 고성장 추구, 기업의 팽창경영의 추구, 이 과정에서의 정부와 대기업의 파트너십에 의한 경제의 운용 모델의 유효성이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음은 누구나 느끼고 있다. 이 모델에 의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특히 고용문제의 해결이 벽에 부딪치고 있음을 실감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산업정책의 유효성이 대기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휘될 여지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현상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국민경제 내 비중은, 사업체수가 295만개로 전체의 99.8%, 고용이 1,039만 명으로 전체의 86.7%, 부가가치의 51.6%, 수

출의 42.2%를 점유하고 있어 그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 중소기업들은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어려움보다 훨씬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중소기업 평균 가동률이 2003년부터 70%를 넘지 못하고 있고(80%가 넘어야 정상으로 판단),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2003년 말 2.1% → 2004년 5월 3.1%),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수익성 관련 지표가 점차 악화되고 있다. 판매·인력·자금·기술 등 전 분야에서 총체적인 난관에 봉착해 있다.

경기순환적 측면에서의 불경기국면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구조적이고 본질적 측면에서 중소기업 경제의 위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한국경제의 문제가 바로 중소기업의 문제이며, 중소기업의 문제가 즉 한국경제의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해야만 우리 경제문제의 본체에 다가서게 될 것이다.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 역시 결국 경쟁력의 문제다. 경쟁력은, 기업 활동의 결과물인 생산물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로 그 수준이 평가될 것이다. 최근 한국 중소기업 문제는 그들이 만든 제품이 잘 팔리지 않으며, 미래에도 잘 팔리리라는 보장이 없고, 나아가 미래에 다른 무엇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잘 팔리리라는 자신감도 없다는 데 있다.

글로벌경쟁 체제라는 대내외적 경제 환경은 과거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보호조차 용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정부가 아무리 보호

해 주려 해도 보호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제품이 중국 제품보다 비싸고 품질마저 좋지 않다면, 외국의 수요자들은 물론 우리의 대기업이나 국민들조차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사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문제는 곧 한국경제 전체의 경쟁력과 긴밀하게 연결하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만 그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보호구조에서 역동적인 경쟁력 구조로의 정책 전환

중소기업 문제를 논할 때, ‘빌 게이츠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이라는 가정을 해 보기도 한다. 이 말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하고 치밀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구사한다고 평가받는 한국에서 빌 게이츠가 태어났을 때, 과연 미국에서처럼 마이크로 소프트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라는 회의적 시각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연간 6조5천억이라는 중소기업 지원예산 규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분명 중소기업 정책 기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이 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을 보호의 객체로서 인식하여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던 과거 정책방향으로부터 경쟁 환경에 스스로 적응하는 중소기업, 세계화의 조류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시장에 진입하여 현존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

는 정책도 의미가 있으나, 미래의 잠재적인 시장 참여자까지 고려한 역동적이고 동태적인 중소기업 경쟁구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기본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에서는 필연적으로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진입과 퇴출이 역동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시장은 스스로 구조조정을 해나간다. 정책이 기존 중소기업의 보호에 치중된다면 미래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게 되고 결국 경제의 효율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을 일으키고 경영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존중받고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시급하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업을 일으켜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내는 일은 그 어떤 직업 못지않게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패배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시장에서 고객을 유지하고 치열한 경쟁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기업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은 남들의 이야기일 때가 많다. 그들의 사회적 기여에 대하여 충분히 그들을 존중하고 우대하는 사회적·국가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원이 국가 차원에서 충분히 배분되고 투자되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사람·자금·기술 등이 중소기업에는 부족하고 대기업과 공공부문에만 넘쳐난다면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기는 어렵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 중소기업에 투자되는 돈, 중소기업에서 쓰이는 기술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중소기업에 사람·기술·자금이 충분히 배분

될 때 밖으로 나가려던 기업들이 다시 국내에 머물고 외국기업들도 국내에 등지를 틀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상호보완적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사람과 자금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을 펴면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특혜를 받았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보다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종속되는 현상이 있었다면 대기업-중소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질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야 다수의 역동적 중소기업과 경쟁력 있는 대기업 간에 서로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윈-윈 관계가 가능할 것이다.

중소기업 스스로의 변화도 필수적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스피드·유연성·창의성·역동성 등 중소기업의 강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글로벌 환경은 제품별 시장규모를 확대시킨 반면 시장 참여자도 증가하여 기업들의 기회와 위협이 동시에 증가하였다. 기업들은 전문화된 영역에 기업자원을 집중하여 경쟁력을 발휘할 필요가 더욱 커졌다. 작지만 강한 기업구조가 유리한 환경이 많으므로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여건을 기회로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경쟁력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내부적 역량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요즘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이 쉽사리 모방되거나 대체되지 않는 자원이나 역량을 지녀서 중장기적으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니의 소형화 기술과 빠른 신제품 개발 사이클, 나이키의 제품 디자인과 마케팅 능력 및 부품업자 관리, 월마트의 통합물류와 공급망, 혼다의 엔진 및 동력전달 장치 기술과 딜러망 관리, 캐논의 광학 및 정밀기계기술 등이 핵심역량의 예들이다.

핵심역량은 쉽게 모방되거나 대체되어 단기에 소멸되지 않을 자원이나 역량이다. 특히 시장에서 구매하지 않고 기업 내에서 창조된 기술이나 지식은 경쟁자의 모방이 쉽지 않아 장기간의 독점적 보유가 가능하다.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유지, 확장하는 것은 현대 경영의 매우 중요한 기능이 되었다. 핵심역량을 구성하는 지식자산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 지식의 원천인 사람을 채용·개발·유지·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요즘 정부가 강조하는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는 국가경쟁력 발전단계 상 혁신주도(innovation-driven) 단계 초기에 진입하였다. 혁신주도 단계는 국가 내의 부존자원 능력에 따라 경제가 성장하는 요소주도(factor-driven) 단계나 특정 산업에 집중적인 자본투자를 함으로써 경제가 성장하는 투자주도(investment-driven) 단계를 지나서 지식과 기술의 혁신이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단계이다. 우리 경제가 1인당 GDP 2만

달리를 향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하려면 지식과 기술의 혁신으로 기업과 경제를 견인하여야 한다. 더욱이 창의성·역동성·유연성을 지닌 중소기업이 그 선도적 역할을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 약속한 바람직한 중소기업 정책방향과 중소기업 스스로의 변화의 의지가 상승작용을 통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경쟁력의 획기적인 상승으로 결과지어질 때, 비로소 한국경제는 외부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세계경제와 조화하면서 경제의 경쟁력 구조를 유지해 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구축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현상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 되던 시점에서, 중소기업 부진의 원인과 중소기업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필자의 평소 소신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이다.

중소기업 현황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1993년 230만개에 달하던 중소기업체 수는 2003년 300만개를 상회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종사자는 1,048만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과는 달리 최근 경기부진 등으로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성과는 부진한 실정이다. 2004년 중소기업청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5% 정도 감소하고 수익성도 8% 정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숙박업, 부동산, 운수업, 개인서비스업 등의 부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내수부진 등의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순환적인 요인도 있지만 국제화·개방화·기술변화 등에 따른 경제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은 왜 부진할까?

그렇다면 왜 우리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그동안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수많은 지원제도와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도 여전히 중소기업들은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경제발전 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양극화로 대변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들 수 있다. 양극화를 초래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은 우리 경제구조 내부에 점점 고착되어 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왜곡된 자원배분 구조라고 생각된다. 외환위기 이후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채택된 정책수단들 즉 시장의 수급상황이나 국제적 흐름과 역행하는 금리와 환율 등 거시정책 변수의 운용을 비롯하여 과거 정부 때 주로 추진된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 가계신용 확장을 통한 인위적인 소비촉진 정책들이 양극화를 초래한 주요한 구조적 요인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관성적으로 추진된 각종 지원정책과 더불어 그동안 우리 경제는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에게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 고착화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를 확산시키지 못하고 협력관계를 형성하는데 실패했던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론에 휩싸여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착근시키지 못하였다. 국제경제 여건은 국제화·개방화 등으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보호와 육성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기술 및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들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의 수출 주력상품이 반도체·무선통신기기·자동차·컴퓨터, 디지털가전 등 IT산업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 산업의 부품·소재 산업이 취약하여 주력 수출품목에서의 부품 해외의존도가 40%를 상회하는 등 중소기업 역할이 미흡하여 수출증대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경제구조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의 대처능력이 떨어지면서 대기업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우리 경제는 임금 등 생산요소적인 비교우위에서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소위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행 연구결과(2002년)에 따르면, 90년대 후반 이후 잠재성장률에 대한 노동과 자본의 성장기여도는 저하되고, 기술의 기여도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보다는 기술과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산업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IT산업과 비IT산업 간 경기양극화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생산요소별 잠재성장률 기여도

(단위: %)

구 분	1980~84	1985~89	1990~94	1996	1999
노 동	13.9	23.5	19.3	12.7	10.9
자 본	51.7	51.4	56.3	50.7	48.9
기 술	34.3	25.1	24.3	36.6	40.1

자료 : 한국은행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국제경쟁에 너무 취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경쟁력은 경쟁적 구조에서만 생긴다는 것이 필자의 평소 지론이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진정한 경쟁력도 경쟁구조와 환경속에서만 생긴다고 봐야 할 것이다. 즉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국제경쟁 환경에 노출되고 익숙해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동안 우리 중소기업들이 국제화·개방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정부의 우산 속에서 안주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중소기업들은 흔히 말하는 ‘차이나 쇼크’에 대비할 시간도 없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 노출되어 경쟁력을 급속하게 상실하였으며 급변하는 기술변화 속도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대외경쟁력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핵심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은 고속성장을 하는 반면,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들이 급속하게 국제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는 추세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한다 하겠다.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2004년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중소기업의 주력상품의 시장 축소시기에 대하여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이미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문제는 미래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표 2] 중소기업 주력상품 시장의 축소 시기

이미 진행	진행중	3년 이내	5년 이내	10년 전후	관계 없음
10.6	52.8	10.1	5.3	6.1	14.3

* 응답자 비율(%)임.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문제의 해결방안

중소기업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은 두 가지 큰 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우리의 경제구조를 시장친화적인 구조로 개편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시장친화적인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과제이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과거의 제도와 관행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장은 어렵지만 중소기업들도 더 이상 정부의 우산 속에서 안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최근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재편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시장친화적인 정책구조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 할 것이다.

시장친화적인 경제체제로 개편해야

그렇다면 먼저 시장친화적인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중소기업 관련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로 흩어진 지원정책을 정비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2003년말 현재 전체 중소기업 수는 약 300만개로 이중 소상공인은 265만개에 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들 모든 중소기업 전체를 만족시킬 만한 정책수단이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취약한 부품·소재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거나 혁신주도형 중소기업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거론되는 이유라 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지원보다는 금융 및 인력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기술가치 평가 및 신용평가 등 금융시스템을 개선하여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금융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안고 있는 애로요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기술·인력·판로 등은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시장접근성을 높여 주는 인프라 구축이 훨씬 효율적인 지원정책이라 할 것이다.

셋째, 경쟁여건 정비 등 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당위론에 밀려 소홀히 해 온 자율과 경쟁여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화·개방화 등으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국제경제 여건 속에서 보호만을 강조하는 정책은 더 이상 설 땅이 없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미 정부는 단체수의계약 제도, 고유업종 제도 등 경쟁제한적인 중소기업정책의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경쟁 여건이 점점 심화되는 것은 국내에서도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과의 하청거래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등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요인은 중소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한 룰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넷째,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정책이 공급자 중심으로 정부 및 지원기관의 입장에서 추진된 정책이 적지 않았음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아무리 화려한 지원정책을 내놓아도 일선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면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인들은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일선 창구에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과는 달리 신청절차도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까다롭다는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정책집행기관들이 중소기업의 애로요인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서비스정신과 수요자(중소기업) 입장에서 문제의식을 가져야만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왕 지원하는 정책,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제도라면 발상을 전환하여 중소기업 입장에서 생각하는 문제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경쟁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야

한국경제의 경쟁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경제개발 과정에서 경험한 바로는 국제경쟁에 많이 노출된 산업일수록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우리의 주력산업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와 조선산업이 그러하고, 반도

체 및 정보통신산업 또한 그러했다. 그러나 반대로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일관한 분야는 어떠한가? 대표적인 예로 농업을 생각할 수 있다. 그간 농업에 대해 천문화적인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 그것은 농업에 대한 지나친 보호로 인해 농업의 자생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상의 경험에 비추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많은 방안 중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것은 중소기업의 국제화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국제경쟁에 더 많이 노출되어 면역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국내시장은 포화 상태에 있어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성공한 중소기업들은 국내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 왔다는 사실이 중소기업의 국제화의 필요성에 대한 살아 있는 증거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국제화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국제경쟁 속에 노출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국제화 및 국제교류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거나 외국기업과의 기술교류 등을 추진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공공부문이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인 이유로 국제교류 및 협력에 나서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국내에서 이러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용 국제교류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검토할 과제라고 본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시야를 해외로 돌려 국제적인 기술 및 산업의 흐름도 파악하고 새로운 기술도입 및 기술투자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전시회, 박람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한·칠레 FTA에 이어 한·일, 한·미, 한·중 FTA 협상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의 국제화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지상명제라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은 시장이 보다 활성화되는 경제구조를 만들고 중소기업들을 보다 더 국제화하는 데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 여의도칼럼 2005년 12월 30일

금융감독위원회 홈페이지 '여의도칼럼'에 기고한 글로, 한국 경제 위기구조의 본질은 '경쟁력 위기', '시스템의 위기'이며 이런 본질에 대한 '인식의 위기'가 위기구조의 핵심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시작하는 말

우리 경제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궁금증과 걱정이 아닐 수 없고 우리 경제 최대의 문제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계속 높은 성장을 이어 가면서 머지않아 동북아의 중심 국가가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당연히 한국경제에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위기'의 가능성이나 이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러나 한편에는 한국경제가 지난 번 경험한 외환위기에 이어 '제 2의 위기'의 가능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

또 이런 위기 가능성이 현실이 된다면 지난 번 외환위기보다 훨씬 심각한 구조적 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느 쪽이 현실화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국경제의 장래는 어떠할까?

우선 우리 경제가 가고 있는 모습을 단기적으로 관찰해 보면 신중한 낙관론이 우세한 것 같다.

내년도 한국경제는 금년도보다는 좀 나아질 것이고 세계경제도 최소한 금년보다 불리하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 지금의 일반적인 전망이기 때문이다.

내수가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아 보이고 기업 활동에 대한 전망도 다소 나아지고 특히 최근 주가가 계속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상황에 매우 고무되어 있다.

특히 증시의 예상을 뛰어넘는 활황으로 증권가에서는 그동안 비관적인 시장전망을 내 뉘던 사람들이 설 땅을 잃고 심지어 직장을 뜨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의 단기적 전망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 전망의 호·불호에 따라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경제는 단기적으로 정확히 전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경제이기 때문이다. 가변 요소가 너무 많을뿐더러 경제외적 요인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경제가 가는 길이 경제전문가들의 예측 범위 안에 머물지 않는다.

최근 몇 년 간만 하더라도 많은 기관들에 의한 수많은 경제전망들이 발표됐지만 제대로 맞은 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이를 말한다.

이것은 오늘의 낙관적 전망이 언제든 다시 비관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우리 경제의 앞날을 증장기적으로 또 구조적인 측면에서 관찰하면 우리 경제의 먼 앞길에는 명(明)과 암(暗)의 양 요소가 충분히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두드러진다.

우선 밝은 면을 보면 정보통신(IT)과 생명공학(BT) 분야의 강점을 들 수 있다. 최근 진위(眞僞) 논란으로 온 나라를 끝없는 혼돈에 빠뜨렸지만, 문제가 제기되기 전 황우석 교수로부터 생명공학 분야에 있어서 한국의 현 위치와 장래 가능성을 듣거나 진대제 정부통신부장관으로부터 앞으로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한국의 발전 가능성, 예컨대 'IT839 전략'과 'u-Korea구상' 같은 것을 들어 보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보인다.

최근의 한류(韓流) 열풍에서 보는 것같이 서비스 부문의 발전 가능성, '기러기 아빠'로 상징되는 여전히 높은 교육열, 혁신형 중소기업의 가능성, 중국·인도·브라질 등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 등은 우리 경제의 앞날을 밝게 하는 요소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앞날을 매우 어둡게 하는 요소들도 매우 많다. 농업 부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부분의 서비스업을 포괄하는 웅대한 저생산성 부문의 존재, 이로부터 초래되는 경제 전반의 경쟁력, 소위 총요소생산성의 점진적 하향 추세, 기업의 투자욕 감퇴, 각 부문 양극화의 심화 등이 그런 요소들이다.

더욱이 경쟁력을 보장해 주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반의 취약성,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급속한 인구 고령화 추세 등은

보다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들이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경기의 호·불황을 떠나서 우리 경제의 먼 장래는 어떠할까?

우선 원칙론적으로 볼 때 우리 국가 사회가 앞에서 언급한, 한국경제가 가지고 있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중에서 밝은 면을 잘 부각시켜 나가고 어려움 즉 위기적 요소도 이를 기회의 요소로 전환시켜 간다면 한국경제의 장래는 밝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런 본질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돼 있지 않거나 실천과정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두운 미래를 맞을 것이 틀림없다. 경제는 “공짜가 없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평범한 진리가 장기적으로는 결국 맞아떨어지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경제의 단기전망이 좀 나아지는 것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개선되고 있거나 개선될 가능성을 보임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우리 증시에 최근 반년 남짓한 시간에 붙어닥친 활황도 역시 무슨 큰 구조적인 변화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증시에서는 모든 사람이 낙관론에 빠질 때 오히려 증시 하락이 시작된다는 속설이 있듯이 모두가 낙관론 쪽으로 몰리게 될 때는 오히려 위험 신호일 수도 있다.

일부 산업 부문이나 소수 기업들의 눈부신 경쟁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앞날을 매우 어둡게 하는, 앞에서 언급한 구조적인

요소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징후는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또 시장경제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반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보며 경제·사회의 주요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시장적 접근방식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어쩌면 핵폭탄보다도 더 한국 경제·사회의 위험요소가 될,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멈추게 할 어떤 유효한 처방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적절한 위기의식 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현상적이거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경기 전망이 단기적으로 좀 나아지면서 한국경제의 장래에 대해 가져야 할 적절한 의미의 위기의식은 오히려 소멸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수 년 전 최인호 씨의 인기소설 『상도(商道)』를 흥미 있게 읽은 적이 있다. 당시 베스트셀러로 100만 부 이상 팔렸던 책이다.

이 책에는 약 200년 전 실존했던 주인공 임상옥이 한때 승려가 되려고 수업을 하던 암자를 떠나 다시 상계(商界)로 나올 때 그의 스승인 석승 스님이 임상옥이 장래 상인으로 대성할 것을 예언하면서 미래에 닥칠 세 번의 위기와 이를 벗어날 수 있는 비책을 알려주는 장면이 있다.

그 예언대로 임상옥은 전무후무한 조선 최고의 무역상으로 거부가 되고 이 과정에서 세 번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 내용, 그리고 이를

극복해 가는 과정이 이 소설의 테마이다.

이 예언의 과정에서 석승 스님이 임상옥에게 하는 말 중 필자가 특히 주목한 것은 다음의 대목이다.

“문제는, 네가 첫 번째 위기는 위기임을 알겠으나 두 번째 위기는 위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위기를 위기로서 직감할 때에는 헤어날 방법이 있는 법이다. 그러나 위기를 위기로서 인식하지 못할 때에는 자신도 모르게 멸문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심하여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때가 혹시 무서운, 위험한 고비가 아닐까 생각하여라.”

위기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성공체험에 매몰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말이다.

우리 사회의 문제인식 능력에 문제가 없는가?

주요한 문제의 본질과 배경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능력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다.

1997년부터 우리가 경험했던 외환위기에 대한 문제인식이 대표적인 예다. 그 위기는 외형적으로 ‘외화 유동성 위기’ 즉 달러 부족 형태로 왔다. 그래서 누구나 위기가 도래한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고 따라서 위기를 헤쳐 가는 것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었다.

일찍이 1년 만에 IMF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공언이 그래서 나왔고 IMF의 지원자금의 조기상환과 ‘IMF의 완전 극복’이라는 우리 경제의 위기극복 선언도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인식은 정말 문제다.

1차 위기의 본질은 결코 유동성 위기가 아니다. 이 위기의 본질과 배경은 한편으로 구조적인 관점과 상황적 관점에서, 또 한편으로는 국내적 시각과 국제적 시각을 종합하는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었다.

그 위기는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기’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의 위기’였다. 외화 유동성 부족은 이런 본질적 문제가 초래한 외적 현상이나 결과일 따름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런 인식도 충분하지 못했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지도 않음으로써 문제의 본질 즉 위기의 진정한 성격과 배경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넘어가 버렸다.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는 엄청난 코스트를 치르고도 이 위기로부터 얻어야 할 적절한 교훈을 얻는 데 실패했다.

성공체험에의 매몰을 경계해야

국민경제의 진로에는 끊임없는 성공과 위기가 교차하게 마련이다.

제대로 된 국민경제라면 상당한 성공에 대한 기억이 없을 수 없고 한편으로는 위기에 대한 경험 또한 없을 수 없다.

문제는 성공 체험에 빠져서 여기에 안주하면 그 성공이 계속 보장될 수 없고 위기가 왔을 때 이로부터 유효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새로운 위기를 맞았을 때 넘어지게 마련이다.

‘성공신화로부터의 탈출’과 ‘위기로부터의 유효한 교훈의 습득’이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해 주는 요인이다.

우리 경제가 맞이한 1997년의 경제위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가 성공신화에 매몰되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직면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비약적인 경제 발전의 토대가 서고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는 한국경제의 성공신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 신화의 밑바탕에는 경제발전에 대한 강력한 국가의 의지, 경제 각 부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높은 경제성장 및 기업 확장 목표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끊임없는 추구,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강력한 연계 구조, 경제를 빨리 발전시켜 이를 바탕으로 다른 주요한 국가문제의 대부분을 해결하겠다는 사고 등이 깔려 있다.

필자는 이를 한국경제의 3대 신화 즉 ‘고도성장의 신화’, ‘한국 주식회사의 신화’, ‘경제 제일주의의 신화’ 라고 부른다.

우리 경제 위기구조의 배경과 본질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신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던 바로 그 때, 즉 1970년대 중반부터 1997년 우리 경제 위기의 싹은 비롯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미 1970년대 말부터 이러한 신화가 계속 작동하기 어려운 징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위기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경제의 문제를 구조적이고 본질적으로 보는 일부 사람들에게 의하여 우리 경제 운영의 틀을 바꾸려는 시도가 몇 차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신화에 젖은 정부의 변하지 않는 고(高)성장 위주 정부주도 경제운영 방식, 이에 대한 뿌리 깊은 국민의 기대 의식, 그리고 팽창 위주 기업경영 관행이 극복되지 못한 채 1997년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1980년대 말을 기점으로 이루어진 세계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는 우리 경제 운영의 틀을 바꿀 수 있는 타율적인 계기가 되었지만 우리는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이런 상황은 국제 금융사회로 하여금 우리 경제의 장래에 대해 결정적인 의문을 갖게 만들었고, 1997년 이들은 우리에게 새로이 달러를 빌려주지 않는 것은 물론 이미 빌려줬던 달러까지 갑자기 다투어 거둬들이기 시작했다. 외환위기의 시작이었다.

만약 앞으로 한국경제에 새로운 위기가 온다면 또 다시 유동성 위기의 형태로 오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WTO 가입 이후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역할 증대, 인도와 같은 신흥 경제권의 부상, 미국 등 기존 선진경제의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경영과 기술수준과 우리의 그것과의 격차 등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되듯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의 문제가 그 위기의 본질이 될 것으로 본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우리 경제의 어두운 측면에, 즉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경우 경제는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해 감으로써 기업과 금융의 전반적 침하가 이어지고 세계경제와의 통합에 실패하면서 우리 경제가 국제 경제사

회에서 그 역할과 위치가 축소되고 궁극적으로 도태되어 가는 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위기는 성격상 서서히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진행되게 마련이다.

마치 석승 스님이 말 한 두 번째 위기와 같이 말이다.

이런 성격의 위기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위기다. 그리고 이런 의미의 위기의 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인식, 논의나 경계는 아무리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이런 성격의 위기에의 대처방안이 무엇일까?

경제를 비롯한 주요한 국가운영의 틀을 ‘시장의 원리’를 기본으로 철저히 바꾸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지는 경쟁구조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의 원천을 보강하면서 한편으로는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실히 수용함으로써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강인성과 유연성을 미리미리 길러 가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다.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니나 그렇다고 다른 방안이 있을 수가 없다.

마치는 말

한국경제 위기구조의 본질은 첫째, ‘경쟁력의 위기’이고 둘째, 구조적 위기 즉 ‘시스템의 위기’다. 또 이런 본질에 대한 문제 인식이 제대로 없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결의도 사회적 합의도 없다는 점, 즉 ‘인식의 위기’가 위기구조의 핵심에 있다.

경기의 일시적 변동에 따라 일희일비하면서 그때마다 위기론이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하는 우리 사회의 오늘의 현상과 끊임없이 낙관적인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지도자들, 그리고 경제 운영방식이 이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김영삼 대통령 이후 이미 세 번에 걸쳐 민간 대통령이 나와 국정을 이끌고 있다. 이 분들은 하나같이 정치의 민주화 차원에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것은 물론이고 그가 이룩한 경제적 성과나 그가 채택한 경제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그런데 이 분들 모두가 박 대통령이 그의 개발시대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경제사상, 그러나 벌써 탈출했어야 하는 한국경제의 3대 신화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의 국가지도자들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위기의 가능성에 대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국민들을 적절하게 경계하고 설득하며 우리의 경제 시스템을 시장원리에 맞게 재정비하고 우리 경제의 세계경제와의 통합이라는 중요한 과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이런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 가는 것만이, 우리 경제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구조적 위기의 가능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시장을 통해 본 한국경제
길을 두고, 왜 길 아닌 데로 가나

발 행 2010년 8월 20일

지은이 김 인 호
발행처 (재)시장경제연구원

펴낸곳 (재)시장경제연구원
주 소 135-914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7-14 KDN빌딩 4층
전 화 3288-1970 팩스 3463-5551 이메일 ihkim@meri.or.kr
홈페이지 www.meri.or.kr, www.ihkim.org
디자인·인쇄 KM/고려문화 2277-1509

ISBN 978-89-964768-0-1 03320

* 책 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 잘못된 책은 바꿔드립니다.

